

ANNUAL **2017** 국토연구원
REPORT 연차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발간에 즈음하여



“국토연구원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토정책을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래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 국토환경 보전 및 관리정책, 토지·주택정책, 도시정책 및 계획 수립, 건설산업의 육성, 국토인프라 공급 및 관리, 공간정보체계 구축,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 한반도 공간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 조성과 국민행복의 향상, 국토자원 보전·관리 등의 책무와 국책연구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적 국토정책 추진’을 연구사업 목표로 정하고, 국토분야 전반에 걸쳐 총 256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사업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민체감의 포용적 국토정책 실천전략 개발’, ‘창조적 국토·도시 정책의 성과 확산’, ‘미래지향적 스마트 융·복합 국토 인프라 활용기반 구축’이라는 세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민체감의 포용적 국토정책 실천전략 개발을 위해서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과제’,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창조적 국토·도시 정책의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국토 다극화를 위한 신지역혁신거점 조성 전략’,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스마트 융·복합 국토 인프라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도시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정비방안 연구’, ‘초고속교통망 시대에 대비한 「컴팩트 국토」 형성방안 연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 연차보고서는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정책고객 및 국민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수행을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주요 연구결과들이 각계각층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토연구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토정책을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이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받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국토연구원장 김 동 주

차 례

CHAPTER 01 연구원 소개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008
2. 연혁	009
3. 비전과 미션	010
4. 예산현황	010
5. 조직도	011

CHAPTER 02 그래픽으로 보는 2017년 KRIHS

1. 연구사업 관련 실적	014
1) 2017년 연구수행 현황	014
2) 연구과제 주요 성과	014
3) 국토분야 중점 국정과제 연구사업 수행비중	015
4) 협동연구 수행현황	016
5) 외부 전문가 참여현황	016
2. 연구성과 확산 실적	017
1) 연구관련 행사 개최	017
2) 언론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017
3) 온라인 연구성과 확산	018
4) 연구성과물 배포	018
5)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 개최	019
6) 홈페이지 방문자수	019
3. 해외연구사업 수행실적	020
1) 해외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동연구 강화	020
2) 해외 네트워크 구축	020
3) 국제 공동연구 및 수탁연구 수행실적	021
4) 초청연수 개최	021

CHAPTER 03 주요 연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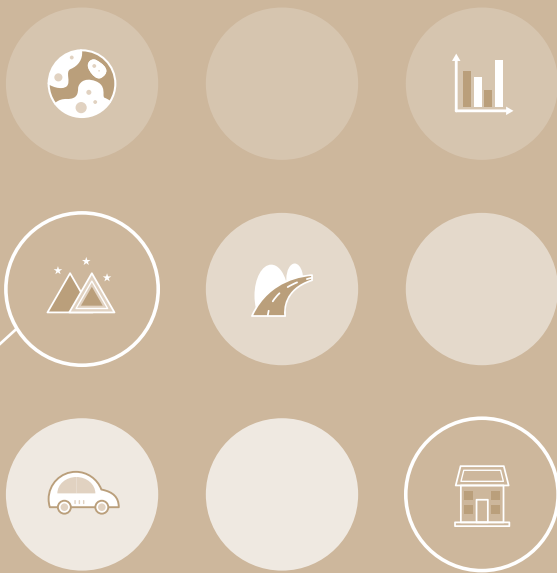
1. 2017년도 연구사업 및 2018년도 연구방향	025
2. 분야별 주요 연구	029
1)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031
2) 도시연구본부	045
3) 주택·토지연구본부	061
4) 국토인프라연구본부	075
5) 국토정보연구본부	089
6) 글로벌개발협력센터	097
□ 색인(연구과제명, 연구자명)	099

CHAPTER 04 연구지원활동

1. 주요 행사	106
2. 글로벌 협력	110
1) 해외학술교류	110
2) 연수프로그램	114
3) 글로벌개발 협력 활동	116
3. 발간물	122
1) 국토	122
2) 국토정책Brief	128
3) 국토연구	130
4)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131
5) 도로정책Brief	132
6) Space & Environment	135

CHAPTER 05 임직원 현황

1. 인원 및 보직자 현황	138
2. 본부 소개	139



CHAPTER

01

연구원 소개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008
2. 연혁	009
3. 비전과 미션	010
4. 예산현황	010
5. 조직도	011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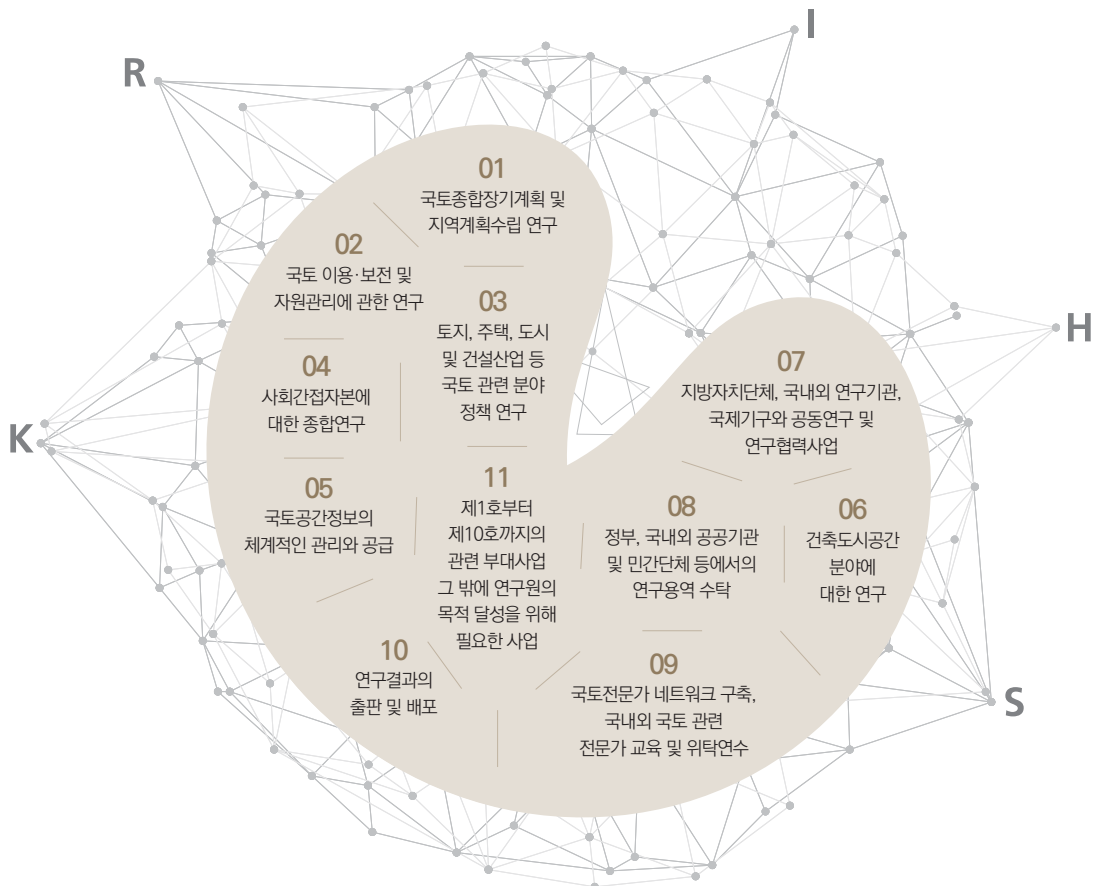
설립목적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공간정보, 동북아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도·뒷받침하며, 정책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적 연구를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실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풍요롭고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연혁

1970

- '78. 04. 17 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
- '78. 09. 13 초대 노용희 원장 취임
- '78. 10. 04 국토개발연구원 개원(설립자: 대통령)
- '78. 12. 05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 공포(법률 제3140호)

1980

- '81. 06. 0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흡수 통합(정부출연기관정비계획에 의거)
- '81. 12. 05 제2대 김의원 원장 취임
- '84. 12. 05 제3대 황명찬 원장 취임
- '88. 08. 09 제4대 허재영 원장 취임

1990

- '92. 04. 23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93. 03. 30 제5대 이상룡 원장 취임
- '93. 09. 07 제6대 이건영 원장 취임
- '94. 04. 27 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안양시 평촌 소재)
- '97. 03. 26 제7대 류상열 원장 취임
- '97. 07. 29 제8대 홍철 원장 취임
- '99. 01. 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99. 12. 06 제9대 이정식 원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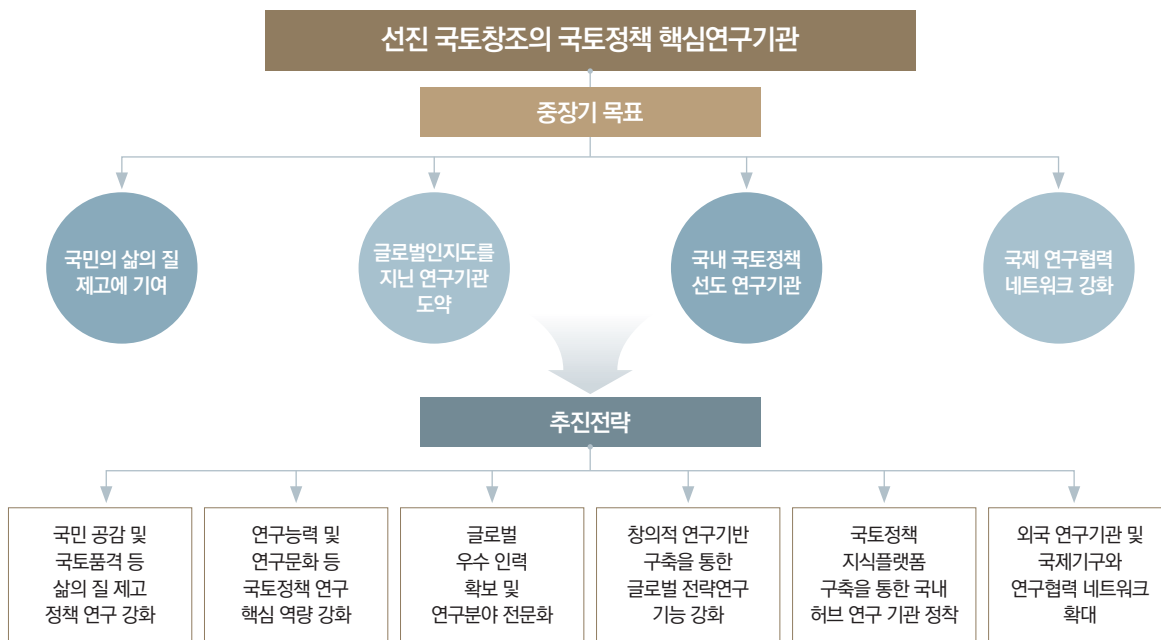
2000

- '02. 05. 10 '경제사회연구회 2001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 '02. 12. 06 제10대 이규방 원장 취임
- '05. 05. 26 '경제사회연구회 2004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2회 연속 선정
- '05. 12. 06 제11대 최병선 원장 취임
- '06. 05. 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기관 평가' 우수 연구기관 선정
- '06. 07. 10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23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 '06. 12. 06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 '07. 06. 15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 '07. 07. 17 도로정책연구센터 설립
- '08. 04. 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 '08. 04. 07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기관 선정
- '08. 06. 18 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
- '08. 10. 01 새 C.I. 선포 및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 '09. 05. 0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2010

- '10. 02. 05 '2009년도 우수 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단체) 수상
- '10. 12. 30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설립
- '11. 06. 18 제13대 박양호 원장 취임
- '11. 12. 14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출자·출연·보조기관 부문 1위 선정
- '12. 08. 0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 '13. 08. 19 제14대 김경환 원장 취임
- '15. 06. 30 제15대 김동주 원장 취임
- '17. 01. 16 세종시 신청사 이전(세종특별자치시 소재)

3. 비전과 미션



4. 예산현황

2017 수입

(단위: 백만 원)

1. 정부출연금	17,427
2. 자체수입	20,381
37,808	

2017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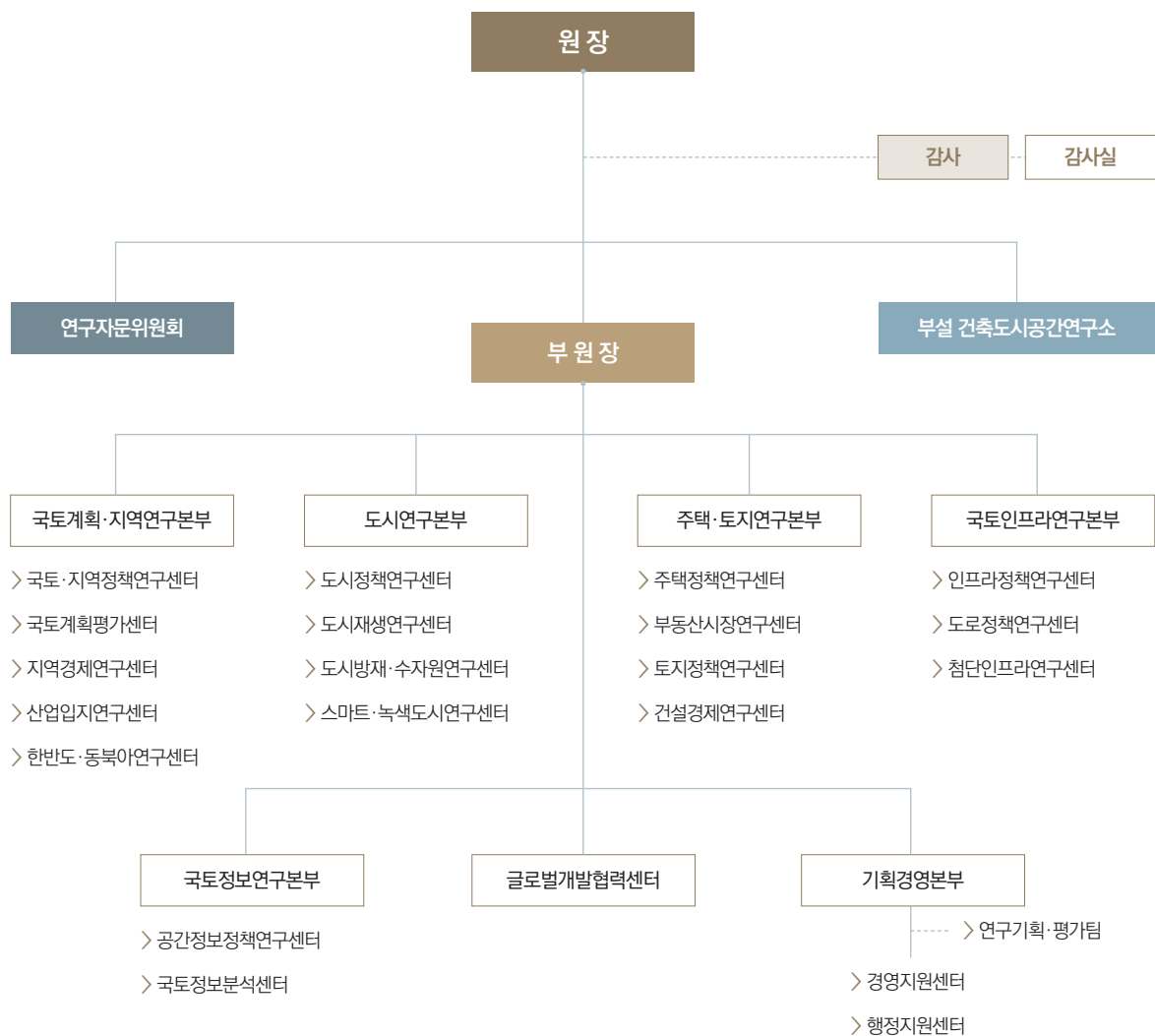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1. 인건비	16,285
2. 연구사업비	18,976
3. 경상운영비	1,654
4. 시설비 등	893
37,808	

※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외

5. 조직도

국토연구원은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도시연구본부, 주택·토지연구본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국토정보연구본부, 글로벌개발협력센터와 행정 부서인 기획경영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CHAPTER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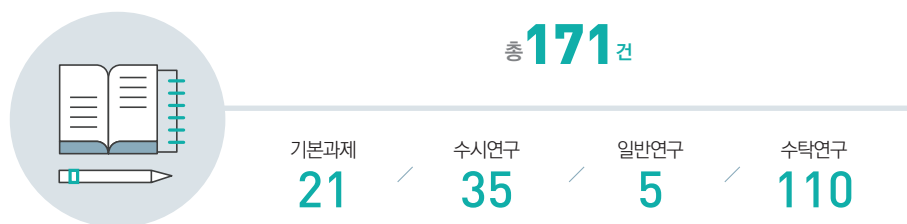
그래픽으로 보는 2017년 KRIHS

1. 연구사업 관련 실적	014
2. 연구성과 확산 실적	017
3. 해외연구사업 수행실적	020

1. 연구사업 관련 실적

2017년 연구수행 현황

국토연구원은 정부현안에 대응하고 국토분야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 국정과제와 국토분야 정책수행을 뒷받침하는 연구·사업목표를 수립하였다. 국토연구원은 2017년 171건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다.



연구과제 주요 성과



국토분야 중점 국정과제 연구사업 수행비중

국토연구원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예산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토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총 19개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총 100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연인원 499명의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특화된 국정과제 수행을 강화하였다.



국토분야 관련 국정과제별 연구과제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건	총 100건
더불어 잘 사는 경제	27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2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43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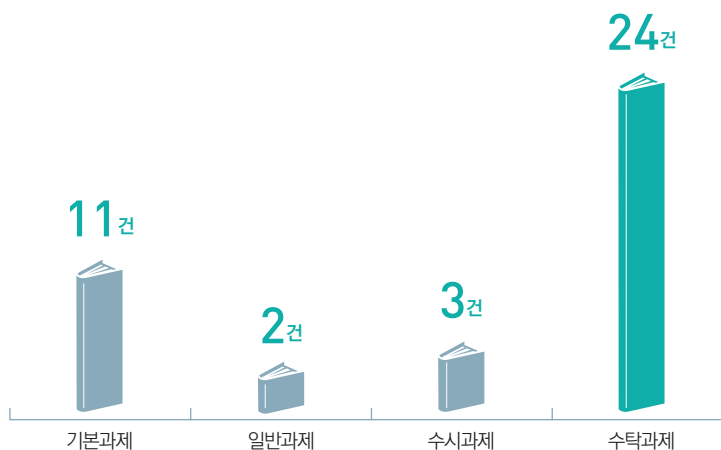


전체 연구사업 중 중점 국정과제 비율

연구사업수	100건	58.1%
투입인력	499명	55.5%
예산	188억원	60.3%

협동연구 수행현황

국토연구원은 연구의 정책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과제의 내용, 성격 등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동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2017년도 협동연구과제 수는 40건이며, 전체 연구과제 대비 23% 수준이다.



외부 전문가 참여현황

국토연구원은 2017년부터 외부심의위원을 의무적으로 구성,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학계 48명, 중앙부처 공무원 81명, 연구기관 29명 등 다양한 부문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적, 학문적 연구의 질을 제고하였다.



총 **158명**



기본과제
103명

일반사업
22명

수시과제
33명

학계
4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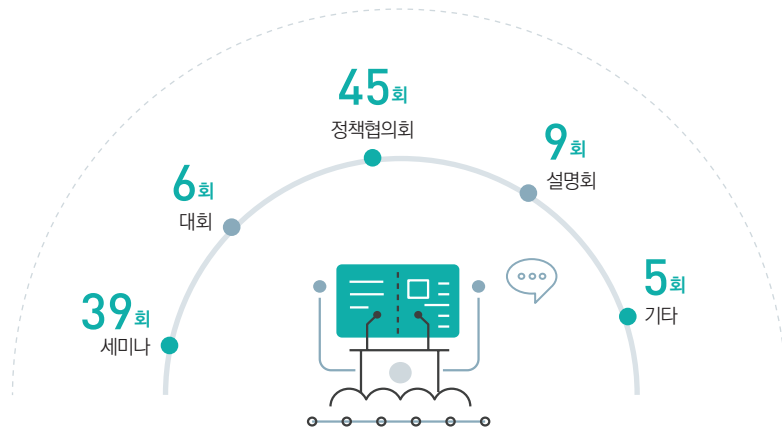
공무원
81명

연구기관
29명

2. 연구성과 확산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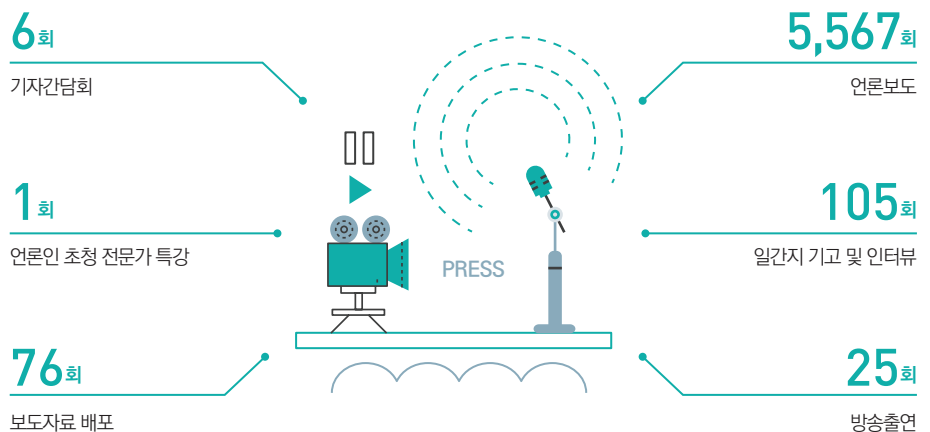
연구관련 행사 개최

국토연구원에서는 연구성과 공유를 위해 국민, 지역사회, 언론을 대상으로 세미나, 발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질 높은 연구성과 생산을 위해 간담회나 포럼 등을 통한 전문가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언론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국토연구원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기자 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 언론인 초청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하였고, 5,567회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온라인 연구성과 확산

2017년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및 홈페이지에서는 30만 7,997건의 뉴스레터 발송을 비롯, 연구보고서, 원문, 연구보고서 국영문 요약자료, 정기간행물, 세미나 등 행사자료를 제공하여 누구나 연구성과를 열람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성과물 배포

국토연구원에서는 연구보고서 및 각종 발간물 6만 1,928건을 배포대상별로 분류하여 제공하였다. 배포처는 총 5,154곳으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 개최

3,508편 응모

제5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59명 참여

국토교육 교사연수

6,423건 응모

제22회 전국 초등학교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10개 학교/교사 **105**명 참여

2017 스마트
아동안전지도 제작 공모전

271명 참여

초등학교생 국토탐방대회

3,124명 참여

전국지리올림피아드대회

홈페이지 방문자수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관련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관련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현재 각 사이트의 방문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 세계 선진도시와 도시 재생 사례, 도로정책자료, 해외리포트, 상상대로 제안자료 등을 방문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700,000명

연구원 홈페이지
www.krihs.re.kr

178,490명

도로정책 홈페이지
www.roadresearch.or.kr

1,006명

페이스북
[www.facebook.com/국토연구원krihs-378573555488217/](https://www.facebook.com/www.facebook.com/국토연구원krihs-378573555488217/)

75,739명

상상대로 홈페이지
www.roadidea.or.kr

413,000명

전자도서관
library.krihs.re.kr

4,006명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www.gdp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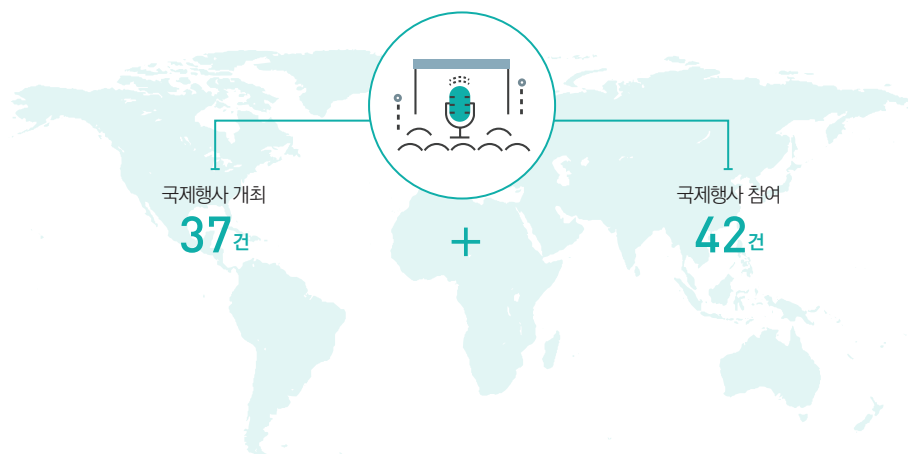
17,373명

UBIN 홈페이지
ubin.krihs.re.kr/ubin/index.php

3. 해외연구사업 수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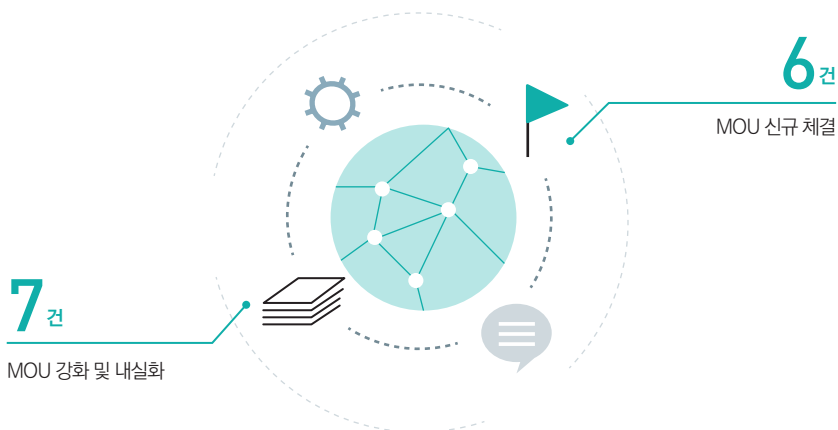
해외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동연구 강화

국토연구원은 2017년 연구성과 국제화 및 해외 홍보를 위하여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여를 활성화 하였다. AIB(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연차총회 주최국 세미나, 국토연구원-World Bank 6차 정례 워크숍 등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한-러 다이얼로그 및 극동포럼, OECD 지역개발위원회(ROPC) 등 다양한 국제세미나에서 발표, 토론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확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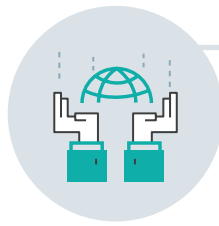
해외 네트워크 구축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신규 MOU 체결 확대 및 기존 MOU를 강화·내실화하였다.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우루과이 리베라 주정부 등과 신규 MOU를 체결하였고,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 기존 MOU 체결기관과는 공동연구, 교육·연수, 정례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협력사업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 공동연구 및 수탁연구 수행실적

국토연구원은 국제기구 및 해외 유수기관과의 협력 내실화 및 심화로 공동연구 및 수탁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단순한 실적증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후속사업 발굴, 도모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

8건

외국 수탁연구

5건

국내기관 발주 해외연구

9건

초청연수 개최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토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8차례의 교육연수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32개 국가 공무원 125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32개국 125명

초청연수





CHAPTER

03

주요 연구성과

1. 2017년도 연구사업 및 2018년도 연구방향	025
2. 분야별 주요 연구	029

1

2017년도 연구사업 및 2018년도 연구방향



2017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

2017년도에는 연구사업 목표를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적 국토정책 추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국민체감의 포용적 국토정책 실천전략 개발’, ‘창조적 국토·도시 정책의 성과 확산’, ‘미래지향적 스마트 융·복합 국토 인프라 활용기반 구축’이라는 세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과제 유형별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등 26건의 기본연구과제, ‘국토 다극화를 위한 신지역혁신거점 육성 전략’ 등 54건의 수시연구과제, ‘지능화 시대에 대응한 국토조사 혁신 및 기반강화 연구사업’ 등 176건의 수탁과제 등 총 25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중 기본연구과제 26건, 수시연구과제 35건 및 수탁연구과제 110건을 완료하였고, 수시연구과제 19건 및 수탁연구과제 중 66건은 2018년으로 이월되었다.

2017년도 국토 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총 19개 국정과제에 대해 총 100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연 인원 499명의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국정과제 수행을 강화하였다. 그 중 정책기획(7건), 법·제도 정비(4건), 정부정책 마련 및 지원(8건), 시범·시책사업 추진(2건) 등 총 21건의 정책화 성과를 이루었다.

주요 정책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7. 2. 27)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상정하는 등 통합연계형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였다.

둘째, 국정과제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 방안 연구’,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방안 연구’,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20)’ 수립에 기여했으며, 「주거급여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17. 12. 29)하였다. 또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연구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였다.

셋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신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입지 조성기법 및 조성기술 개발에 일조했으며, 특히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 중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서비스 통합플랫폼 등의 ICT 인프라 조성기술 개발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시재생사업의 미래 전망과 발전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국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8년도 연구사업목표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와 기관의 운영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함께 누리는 혁신적 국토정책 연구'로 선정하였다. 연구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혁신적 국토정책 개발', '지역·세대·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국토정책 추진', '융·복합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토정책 추진' 등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더불어 연구본부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권화시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스마트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도시연구본부), 지역·세대·계층을 고려한 주택정책 및 부동산산업 기반 강화(주택·토지연구본부), 국토인프라의 공공성 제고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국토인프라연구본부), 스마트 국토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기반 강화(국토정보연구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개발협력체계 구축(글로벌개발협력센터) 등 6대 주요 연구테마를 선정하였다. 2018년도에도 다양한 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를 발굴·수행하여 국토분야의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으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2018년도 중점연구과제

2018년도 수행과제 중 국정기조와 정책현안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할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국가정책 기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각 연구과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에서는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효과적 추진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중앙주도 균형발전 정책을 지역주도로 전환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포함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통합하는 새로운 전략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에서는 경제 및 인구 저성장, 기술혁신, 광역화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균형발전, 자치분권, 도시재생,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구성 및 내용, 수립방안 및 추진체계, 계획 상호 간 조화 등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미래 도시계획과 도시의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에서는 기존 주거부담 지표의 장단점과 정책대상 규모를 분석하고 교통비를 고려한 주거부담지표의 유용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거부담 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에서는 지역주도형 발전전략을 위한 인프라 부문의 연구로 포용적 국토발전 측면을 고려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섯째,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전략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에 공간기반 분석/예측 능력을 제고하고, 공간정보 관점의 다양한 서비스를 도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며, CPS를 적용하는 시범적 도전을 수행함으로써 초연결 스마트시티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2

분야별 주요 연구

- 1)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2) 도시연구본부
 - 3) 주택·토지연구본부
 - 4) 국토인프라연구본부
 - 5) 국토정보연구본부
 - 6) 글로벌개발협력센터
 - 색인(연구과제명, 연구자명)
-



1)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입지 정책 연구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추진전략
-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지역계획 부문의 대응전략과 과제
-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 국토 다극화를 위한 신지역혁신거점 조성 전략
- 분권화시대의 국가공간정책 추진 방향
-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 중위도시를 위한 도시회복력 계획 연구
-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입지 정책 연구

A Study on New Industrial Location Policy a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연구책임 장철순 | 연구진 문정호, 류승한, 장은교, 이승욱, 정우성, 조성철, 유현아 | 기본 17-02 | 169면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전에 따른 산업구조와 가치창출체계의 변화는 산업입지의 공간구조와 입지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구조 변화를 예측 및 분석하고 이들 산업의 입지요인을 도출하여 그에 맞는 새로운 산업입지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들 산업의 입지요인을 조사하여 이에 필요한 산업입지 공급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신산업)입지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신산업입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으로 대량 맞춤(Mass Customization) 생산 확산, 일자리수 감소, 킥 이코노미(Gig Economy) 등 일자리 특성 변화, 산업의 도시 집중 강화, 입체복합 공간 수요 증대, 외곽지역의 대규모 입지수요 등이 예상됨

주요 국가들의 신산업입지 정책으로 영국은 신엔터프라이즈 존, 미국은 스타트업 뉴욕(Start-up NY),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재개발 사업, 루즈벨트섬의 Applied Sciences Campus(ASC) 사업, 프랑스는 프렌치 테크(French Tech) 계획, 파리의 스테이션 F(Station F) 공급, 중국은 선전첨단기술산업원구 활성화, 중관촌의 중창공간 공급과 중관촌소프트웨어 공원(Z-Park)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특구제도 도입, 겐토(建都)이노베이션 파크,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함

신산업 사업체를 사물인터넷, 로봇·드론, 3D프린팅, VR·AR, 인공지능·빅데이터의 5개 부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특히 서울에는 5개 기술 분야가 모두 강하게 집적하는 것으로 나타남

신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적지 입지패턴 분석을 위해 Local Moran's I 지수를 추정한 결과 수도권에서 허쉬만-허판달지수(HH)가 집중적으로 나타남

신산업 사업체들의 입지 동기를 비교한 결과 강남에 소재한 사업체 중에

서 '낮은 임대료'를 입지 동기로 꼽은 경우는 가장 적었으며, 판교에 소재한 사업체들의 경우 훨씬 높은 빈도로 '낮은 임대료'를 입지 동기로 선택하였음

신산업 사업체와 거래망을 갖고 있는 업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KSIC 5digit)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전체 거래처 건수의 약 8%를 차지함

- 신산업 사업체의 공간적인 거래망을 살펴보면, 전체 거래건수의 14.9%가 신산업 기업체와 동일 시·군에서 발생하였음

신산업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입지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입지요인으로 교통 편리성 및 물류비 절감과 함께 전문·고급인력의 확보 용이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산업의 기술집약적인 산업 특성상 숙련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는 세금 및 부담금 감면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응답함

정책제안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 공급방안으로 도심지역에 공유형 산업공간 공급, 대학,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창업할 수 있는 산업공간 공급, 도심 내 기존 산업용지의 보존장치 마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자금, 공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통합 등을 제안함

기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지 공급방안으로 대량생산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공급, 신산업의 창업 이후 성장단계별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2, 3차 밴드에 해당하는 소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방안 등을 제안함

제도개선 방안으로 산업의 융복합화 신산업의 생산특성을 감안하여 산업시설구역 통합합 및 가능한 업종 확대, 네트워크형 산업단지제도 도입, 분양가격 산정방식 개편,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대 등을 제안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추진전략

Korea's National Territorial Strategies to Manage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연구책임 정우성 | 연구진 문정호, 김진범, 김상빈, 이원복 | 수시 17-06 | 154면

연구목적

최근 부각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산업구조의 변화, 새로운 기업과 서비스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른 국토이용 변화와 국토정책적 요구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국토·지역정책분야 변화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론적 검토,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국토정책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을 제시함

연구결과

우리의 산업적·제도적 특성에 알맞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산업의 육성 전략이 중요함

- 독일, 미국,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추진내용과 방식이 자국의 산업적 특성과 제도적 환경에 맞게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기존 제조업 기반 고도화에 적용하여 공정 혁신과 생산성 혁명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실험, 적용에는 기존 법 절차 적용의 제한이나 예외를 두는 이중 전략(Two Track)이 필요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공간구조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공간적 위계분포가 약해지고 도시가 분산될 것이나, 대도시의 혁신역량을 고려하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산업의 대도시 집중현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도시와 비도시지역 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보임

-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로 대도시권 역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약간 우세하였으며, 도시 내 복합적·입체적 토지이용수요는 증가할 것이라 전망됨
- 다품종·소량, 근거리·개별 생산방식이 확대되어 생산시설 입지가 네트워크·인적자원·소비시장 중심으로 변화하여 도심 내 복합공간 수요 증가가 예상됨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및 융합기술은 스마트도시, 교통 및 인프라, 국토정보 등의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토의 연결성, 개방성, 창의성, 유연성 등이 점차 구현될 것으로 예상됨

- 국토관리 관점에서 보면 생활 밀착형, 증거 기반, 데이터 추동의 국토·도시정책 수립·집행에 활용 가능하여 전반적인 국토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국토 및 도시인프라의 스마트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빅데이터나 ICT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예견됨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5가지 국토정책 전략을 제시함

- 첫째, 혁신국토 구현 전략으로 '네트워크 연결성을 강화하는 혁신거점 육성'의 실천과제로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과 창의적 인재육성 인프라 지원을 제안함
- 둘째, 지속가능한 생활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국토공간 인프라의 스마트한 재생'의 추진과제로 공간단위별 지역양극화에 대한 스마트한 재생적 대응과 노후인프라의 재생적 관리를 제안함
- 셋째, 편리한 국토인프라 구축을 위해 '창의적 지능형 인프라의 구축' 전략과 함께 스마트시티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도시의 데이터 허브 구축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 넷째,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개방형 국토정보 플랫폼 구축' 전략으로는 정보 및 시스템 연계 통합플랫폼 구축, 국토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국토데이터 생성 및 활용성 제고 기반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함
- 마지막으로 실효적 정책구현을 위한 관리 전략으로는 '국토제도 유연성 강화 및 재설계'를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혁신친화적 스마트 규제 구축,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적 국토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지역계획 부문의 대응전략과 과제

A Study on the Effective Use of the National Land i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연구책임 양진홍 | 수시 17-30 | 77면



연구목적

‘국유지 활용계획’의 제도적 정착방안, 국유지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 본 연구는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포용·혁신 성장 지원(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강화, 4차 산업 등 신산업 성장 지원), ②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지원(주거안정(공공임대), 일·가정양립(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국유재산 관리를 도시 및 지역계획과 연계하는 기초연구로서 ‘국유지 활용계획’의 정착방안, 집행력 제고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함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대규모 유류 국유지의 개발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의 확충 및 지역 활성화 전략연구를 추진, ‘국방개혁2030’과 연계하여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연구결과

국유지의 체계적 활용을 위해서 활용계획의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국유지 활용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존 개별법에 의한 국유지 활용계획의 현황과 그 한계를 지적하였음
- 활용계획의 수립 주체를 기획재정부로 하고 활용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절차, 계획수립 및 협의과정을 제시함

국유지 활용계획과 도시·지역계획의 연계성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제안함

- 지자체에서도 주기적이고 상시적으로 지역 내 국유지 조사 및 활용계획 제언(4년 주기)
- 일단의 토지가 일정규모(500㎡) 이하의 일반재산에 대해 지자체에 활용권한 부여
- 종전의 필지중심의 계획 및 개발에서 지구 또는 지자체 단위의 계획수립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정합성 제고

국유지 활용계획의 적용 사례에서는 경부선 직선화 및 구포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제안, 교정시설을 통합 이전하는 의왕 법무타운 조성사업, 박달동 탄약고의 지하화 및 현대화하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활용계획을 분야별로 적용함

- 생산형 융합복지단지의 조성 등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쇠퇴에 대응’ 제안
- 공원·녹지, 휴양림 조성 등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제안
-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등의 ‘의료관광 활성화’
- 통일경제특구 조성(산업, 물류, 관광휴양 등 지역특성에 따라 조성) 등으로 ‘접경지역 통일기반 조성’에 활용 제안

정책제안

국유지 활용계획 도입: 「국유재산법」 제9조의2 신설 입법 지원

- 국유지의 체계적 활용과 예측 가능한 계획수립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국유지 활용계획의 제도 도입
- 국유지 활용계획과 도시·지역계획의 연계성 강화방안 마련

국유재산활용전략센터 설치(안): 「국유재산법」 제9조의3 신설

- 「국유재산법」 제9조 및 제9조의2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국유지 활용계획의 수립·변경, 제26조의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괄청에 국유재산활용 전략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 국유지 활용을 위한 플랫폼 기능과 지자체 등 국유지 활용을 제안하는 기관과 소관 부처와의 중간조정기관의 역할, 국유지 개발 사업을 추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생산형 융합복지단지 조성(안): 「생산형 융합복지단지 등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안

- 지역의 쇠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 지역별 생산형 융합복지단지 도입
- 정책환경의 변화, 기능의 쇠퇴, 노후화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 유류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원·녹지 확충, 여가·휴양시설 공급, 농림어업 부문의 제6차 산업화 지원가능 수행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Strategies for Job Creation and Improvement in Critical Infrastructure Service Industries

연구책임 권영섭 | 연구진 민성희, 김도형, 박지영, 하성용, 이용우, 김길수, 신동춘, 천상필 | 기본 17-06 | 267면

연구목적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높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핵심산업이지만 경쟁력과 생산성은 취약함

- 조선업(세계 1위 건조능력, 2015년), 자동차 제조업(세계 5위 생산·수출, 2016년), 항공서비스업(세계 6위, 2016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비·수리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국내 수요조차 외국에 의존하는 형편임
- 정비·수리산업 분야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국토교통서비스산업 특히 자동차, 조선, 항공기 등의 정비·수리 분야에서 기업의 신규 진입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장진입을 막는 차별 요소 및 제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연구결과

서비스산업 중 국토교통부문은 건설, 물류, 부동산, 항공, 항만, 철도, 자동차 분야 등 경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업이자 제조업의 Aftermarket을 담당하는 분야이지만, 제조업에 비해 지원은 물론 제도조차 미흡하여 역차별 상태임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 등은 산업의 부차적인 지원활동으로 인식되어 산업단지 조성원가 공급, 연구개발 지원, 세제·금융, 전력·수도 요금 지원제도 등에서 제조업과 차별함

우리나라는 산업을 선택과 집중해서 육성해 온 결과, 조선, 자동차 제조업과 항공서비스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칸막이로 수리조선이나 항공정비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있는 2.5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여 국내 수요조차 외국에 의존하는 형편임

- 수리조선, 항공정비는 독립적인 산업분류 코드조차 존재하지 않음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국가기간인프라 서비스산업(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서비스, 수리조선, 항공정비 분야를 대상으로 조세·금융 지원제도, 전기·수도 요금제도 개선 및 「자동차관리법」, 「선박안전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 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가칭)국가기간서비스산업 혁신법을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음

정책제안

본 연구에서는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신법 제정 등 3가지 측면에서의 정책을 제안함

-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통계분류 분화가 되지 않은 항공정비, 선박수리 등에 대해서는 독립된 산업분류 코드를 부여하여 정확한 통계 집계, 조세·금융 지원제도 및 전기·수도 요금제도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 차별하는 부문에 대해 차별 시정, 자동차 서비스, 수리조선, 항공정비업을 (가칭)국가기간서비스산업으로 지정하고 특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집적화하고 국외 외주부문을 수입대체하여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였음
- 관련 법 개정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선박안전법」 또는 「항만운송법」, 「항공사업법」 등 각각의 근거법에 단지 조성 및 지원 근거 조항을 삽입하여 개정할 것 등을 제안하였음
- 신법 제정에서는 (가칭)국가기간서비스산업 혁신법을 제정하여 이 법에 국가기간서비스산업 육성 관련 특화 단지조성 및 지원 사항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음

단기적으로는 기존 법 개정, 중장기적으로는 신법을 제정, 국가기간서비스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음

국토 다극화를 위한 신지역혁신거점 조성 전략

Strategies to Develop New Regional Innovation Hubs for Territorial Diversification



연구책임 류승한 | 연구진 송정현 | 수시 17-20 | 102면

연구목적

우리나라 수도권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밀 상태이나 지방은 낙후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의 비효율과 지방의 침체가 심화됨

- 지방은 인구에 비해 높은 생산 비중을 기록하나 경제의 질적 지표면에서는 여전히 수도권과 큰 차이가 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개개 지역이 혁신역량을 구비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지역혁신 생태계의 중요성 증가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마련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혁신자원의 유치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 혁신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과 시설(조직) 간 협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및 그 효과의 주변지역으로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지역혁신거점 구축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둠

연구결과

산업화 초기 우리나라의 성장거점 육성정책은 산업도시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산업도시 건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그 성과의 주변지역 확산도 미진하였다는 비판임

기존 거점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혁신역량과 연계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지역혁신거점 구축에는 부족함

-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연구개발 특구 등 기존 제도는 기업입지의 활성화 등과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재의 유치, 지역 내 창업 촉진과 혁신생태계 구축 등에서는 효과가 미진함
- 이러한 현상은 생산시설의 입지가 곧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구조의 붕괴, 표준화된 대량생산시설의 입지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의 한계 등과 연관됨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에서의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함

- 혁신도시 건설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공간의 제공 및 도시 건

설이라는 점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있음

- 그러나 혁신도시가 지역혁신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점으로서의 기능 확립을 위한 규모경제 확보, 우수 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등 정책목적을 고려한 새로운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함

지역혁신거점 육성은 거점의 육성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하고, 이를 통해 각각의 지역이 가진 역량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지역성장거점이나 혁신거점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지역혁신거점 육성을 위해서는 자기 완결적 사업발굴보다는 도시 내 기존 자원이나 기존 사업지구와의 기능분담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의 추진 시 지역 내 다른 혁신자원과의 연계성과 네트워크 설정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여 사업을 설계함

지역혁신거점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 기반 확충과 더불어 우수한 인재의 확보 및 혁신주체 간 상호 교류 활성화가 중요함

- 따라서 지역혁신거점 육성은 기존 도시에서 이격된 소규모 개발 사업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권이라는 공간적 틀 내에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함

지역혁신거점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자산의 견인-내부적 발전-성과의 확산방안을 통합한 계획의 수립이 중요함

-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초기부터 계획하고, 미래 비전에 대한 주변지역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광역적 차원의 자원이용 효율성을 도모함

분권화시대의 국가공간정책 추진 방향

A Study on the National Territorial Policy Directions in an Era of Decentralization



연구책임 차미숙 | 연구진 임은선 | 수시 17-15 | 61면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등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촉진·지원하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등 정책현안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공간정책을 지속적으로 채택·추진해 옴

- 1970년대 성장거점개발전략, 1980년대 분산형 거점개발전략, 1990년대 지방광역개발권 조성전략, 2000년대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함
- 국가공간정책이란 국가균형발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국토 공간구조와 이용상 인위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지칭함

본 연구는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저성장,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기술변화와 분권화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새로운 국가공간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중앙정부 주도 국가공간정책 추진성과와 한계

- 국토종합계획에 의거해 국가공간전략을 설정·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총량적으로 안정화·둔화 추세이나, 질적 측면의 격차와 새로운 공간 단위 간의 격차가 발생함
-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지역혁신창출 및 성과확산, 지역의 자립적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은 정책성과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책추진 방향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여건변화와 새로운 국가공간정책의 이슈 도출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경제성장을 둔화에 따른 저성장, 4차 산업 혁명의 전개에 따른 기술변화, 가치관 변화, 분권과 국민직접참여 증대 등 여건변화는 국토의 공간구조, 이용 및 관리, 정책추진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함

- 인구과소화의 전개와 지역적 편재현상 심화, 기존 주력산업의 쇠퇴화 전개와 국토연안 중심의 산업위기지역 발생, 실물국토와 가상국토 간의 연계를 통한 스마트국토 실현 및 생활공간의 지능화 요구 증대 등은 향후 중앙정부 국가공간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략의 변화를 요구함

분권형 국가공간정책 추진방향과 전략으로 전환 제안

- 그동안 채택해왔던 중앙정부 주도 국가공간정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권형 국가공간정책을 제시함
-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따라 공간구조 및 이용에 있어서 '축소형 스프롤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계협력 기반의 균형거점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지역주도의 국토균형발전 추진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함

정책제안

지속가능한 네트워크형 스마트국토 공간구조·체계 형성

- 인구감소와 기술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국토균형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기반의 국토공간구조·체계 형성을 촉진함
- 분할·단절적 공간에서 기능통합과 융복합 공간으로, 개별 공간 단위 및 경제적 가치 공간에서 연계·협력,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국토공간으로 인식을 변화함

분권형 국가공간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지방중소도시와 주변지역 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한 신규형거점을 조성함
- 인구감소·과소지역의 스마트축소(Smart Decline)전략 및 지역재생을 추진함
 - 스마트 축소(현명한 쇠퇴, Smart Decline)는 미국, 독일 등에서 인구 감소와 경제침체를 겪는 노후 도시·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함
- 분권형 계획계약제도 등 균형발전 정책추진시스템을 개편 운용함
- 지역 간 연계, 협력, 공유 촉진형 지역발전계획체계 개편 및 지원을 강화함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Prospects of National Territory by Demographic Change and Policy Implications



연구책임 민성희 | 연구진 변필성, 김선희, 이순자, 황명화, 차은혜, 김용민, 이철호 | 기본 17~13 | 158면

연구목적

국토정책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구수 및 인구구조의 변화,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 변화 등으로 예상되는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분석과 진단이 요구됨

지역별 인구 변화와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방향을 모색함

지난 40년간의 인구 변화에 따른 국토 공간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인구 변화가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여 국토정책 및 공간계획의 대응방향을 모색함

연구결과

인구분포의 공간적 양극화

- 전국의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광역시 등 특정지역 내에서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대부분의 군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공간적 양극화가 두드러짐
- 향후 전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및 과소지역 확대가 동시에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인구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수도권의 확대

-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수도권에서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도의 일부 시·군으로 확산됨
- 지속 증가지역과 최근 증가지역은 수도권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연결되는 경기도 및 충청권 내 시·군이고 수도권에서 춘천시와 원주시로 연결되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군에서 증가 추세임

공간적 광역화

- 대도시에서 그 주변지역으로 인구가 확산되는 대도시의 광역화가 진행됨
- 지방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대도시 내부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이동으로 주변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화가 진행됨

혁신도시의 인구집중 양상

-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인구감소가 완화된 현상이 나타나며, 향후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정책제안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 국토 공간상의 인구 불균형 해소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분산하기 위하여 지방 대도시, 혁신도시 및 지방중소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추진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들은 3~5개 지역이 연합하고 고차서비스나 경제, 교육 등의 중심기능을 공유하는 '강소도시권' 육성 제안

압축개발 강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효율적인 공공시설·인프라 이용 및 운영을 위해서는 압축개발 개념을 공간계획에 적극 반영
-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대부분 도심부의 공동화 문제, 도시시설의 외곽으로 확장, 저이용 및 미이용 토지 증가로 인한 비효율적 토지이용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간의 효율적·집약적 활용 추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재생

- 특별시와 광역시 내의 인구감소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쇠퇴가 발생하는 기존 도심의 재생, 지방중소도시의 실정에 맞는 재생 사업 추진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이로 인한 쇠퇴의 원인은 도시지역과 다르므로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재생 추진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 생활인프라가 주민들의 일상공간에서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일정 수준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도시 내부의 쇠퇴지역 및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험지역에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통, 의료, 교육시설 등 필수적인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하여 기초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Towar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Low-growth Era: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연구책임 안홍기 | 연구진 홍사흠, 하수정, 이미영, 김수진, 김다윗, 허문구, 나진항 | 기본 17-16 | 132면

연구목적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양극화 문제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새로운 지역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에 관심이 집중되어 권역 내 격차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것이 아닌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격차 완화의 내용이 인구, 소득, 경제성장 등 총량적이고 양적인 격차보다 안정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 삶의 질 등 질적 격차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지역 격차의 완화가 개인의 소득 격차 완화로 이어지는가?

다만,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다루기보다는 저성장, 인구감소시대의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하여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함

연구결과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지만 둔화추세에 있고, 지역 간 인구분포는 지속적으로 불균등해지고 있어 권역 내의 지역 간 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질적 지표로 본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총량적 경제지표에 비해 수도권 집중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속적 성장과 성숙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발전의 내용도 양적 성장에서 지속 가능한 안정적 성장으로 지역균형발전 목표를 전환해야 함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비도시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젊은층의 대도시 이동을 유발하여 국토 이용 공간의 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함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 수준은 고도성장기 이래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나 최근 둔화추세이며, 분배의 형평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최근 5년의 경우 분배형평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성장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의존적 산업 및 재정정책을 줄이고 지역 고유의 잠재력이 있는 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시 지역금융의 역할이 중요함

일관된 지역균형발전 정책목표의 설정과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장기적 지역균형발전 정책목표를 상위계획에 명시하고, '(가칭)지역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지역균형 구도의 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 비수도권 내 격차, 대도시와 중소도시 혹은 농촌 지역 간의 격차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함

저성장기의 성장정책은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의 회복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물량중심의 성장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의 높이는 질적 성장이 중요함

균형발전의 목표가 지역의 평균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이 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국토종합계획에 지역균형발전 목표를 명시하고, 5년 단위의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단계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상황을 관리 및 지원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함

중위도시를 위한 도시회복력 계획 연구

Urban Resilience Planning for Secondary Cities: Empirical Policy Guide for Developing Countries



연구책임 홍사흠 | 연구진 하수정, 이병재, Okju Jeong, Pranab J. Baruah, Elieen Hur | 수시 17-21 | 97면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이라는 강력한 수위도시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Secondary Cities의 사회경제적·인구학적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과거 우리와 비슷한 도시화 초기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Secondary Cities의 Resilient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함

- 특히, 본 연구는 도시(개발) 관련한 국제 아젠다, 기존의 관련 논의 등을 토대로 개발도상국 내 Secondary Cities의 Urban Resilience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
- 우리나라의 통시적·공간적 도시화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Secondary Cities의 Resilience Planning을 위한 Guiding Principles 등을 제시하며, 이를 구체적인 국가 또는 도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연구결과

먼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인구와 고용증가율을 활용하여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2가지 충격의 대응과정을 고려한 회복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함

- 1기 신도시 건설로 요약되는 서울 주변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서울 및 지방에서 엄청난 수의 인구유입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파생된 경제적 수요 역시 고용 등의 경제적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함
- 고용의 경우 중위도시가 지니고 있는 산업기반의 수준이 회복력 수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재난대응 측면에서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비교를 기본으로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부상, 인)와 재산피해액(원)을 활용하여 회복력을 분석함

- 물리적·입지적 취약성이 높아도 2000년대 이후 방파제 등의 방재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한 도시들과 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에 나선 도시들은 재산 및 인명 피해의 측면에서 재난회복력이 눈에 띄게 상승함

- 재난회복력이 높은 도시들은 지역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도시들이 많으나, 급속한 개발과 성장을 거친 수도권 일부 도시는 급속한 경제 및 인구 성장에도 불구하고, 하천변 등 위험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재난회복력이 오히려 나빠지는 도시들로 나타남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시간 단위로 '물' 환경을 대표하는 하수도보급률과 '대기' 환경을 대표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회복력을 분석함

- 하수도보급률의 경우 1996년 61.3%에서 2014년 85.9%까지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에 위치한 중위도시를 중심으로 개선이 관찰됨
-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경우, 중위도시들 간의 규모나 산업구조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비교적 도시의 규모가 크거나 대규모 장차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자리한 중위도시의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됨

정책제안

본 연구는 크게 사회경제적 측면, 재난대응 측면, 환경 측면의 3가지 부문으로 중위도시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안함

- 사회경제적 측면의 중위도시 회복력 제고를 위해서는 각 도시별로 자생적인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단지 등의 물리적 산업기반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인구 및 시장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재난대응 회복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난예경보 시스템 및 정보전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재해영향성 검토와 같이 방재 관련 요소들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제도적으로 토지이용 및 개발 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 환경회복력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화 초기 단계부터 세부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기준 설정 및 도시화 정도에 따른 배출기준 조정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유역단위 거버넌스와 같은 유연한 행정조직의 구축도 요구됨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Policy Directions for Revitalizing Innovation City in the 2nd Stage



연구책임 김진범 | 연구진 정우성, 송정현, 남기범 | 수시 17~10 | 95면

연구목적

정부는 2005년부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1단계(2007~2015년) 목표는 달성한 상황임

아울러, 2017년 새 정부는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지역 신성장거점으로 위상을 확립함

하지만 2단계 혁신도시정책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는 비전이나 목표, 추진전략 등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2단계 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는 혁신도시정책의 성과와 한계 검토, 국내외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한 후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연구결과

1단계 정책목표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당초의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지만, 혁신 주체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인 기업 유인,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고급인재가 살고 싶은 정주여건 관련 기반이 여전히 미흡함

-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별 특성을 활용하여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춰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거점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혁신환경 인프라 구축과 우수한 정주여건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함

지금까지 혁신도시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내외 경제·사회·환경정책 변화를 감안하여 향후 혁신도시정책이 다루어야 할 중점과제를 5가지로 정리함

- '다양한 주체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 설정'과 '이전 공공기관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화', '미래형 도시환경의 구축', '기술과 주민생활의 융합', '협력적 도시운영체계의 구축' 등을 중점과제로 도출함

정책제언

2단계 혁신도시의 비전 정립

- 지금까지 혁신도시정책 기초를 국내외 경제·사회·환경정책 변화에 맞춰 새롭게 정립함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저출산·고령화, 전통산업의 쇠퇴, 도시의 스마트화 등 정책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변화를 반영함
- 향후 혁신도시의 역할로서 현재의 '친환경 녹색도시'를 '미래형 도시 제시(미래도시)'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지역 고유의 지혜 창조(지혜도시)'로 각각 전환할 것을 제안함
- '미래도시'와 '지혜도시'라는 혁신도시의 수정된 역할을 감안하여 혁신도시의 미래상으로 '지역사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와 '지속적으로 혁신을 창출하는 도시', '기술·생활·자연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도시'를 제시함

비전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

- 2단계 혁신도시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활동 강화', '미래형 도시 형성', '협력적 도시 운영'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함
- 혁신활동 강화의 세부추진 전략으로 '학제적 연구와 인재양성 강화'와 '혁신창출 생태계의 구축', '연구거점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제시함
- 미래형 도시 형성 관련 전략으로는 '다른 도시를 선도하는 스마트한 도시 형성'과 '도시의 다양성을 높이는 토지 이용 추진', '접촉과 소통을 촉진하는 도시이동성 향상'을 제시함
- 협력적 도시 운영 관련 전략으로는 '가칭 혁신도시발전 협의회 구축'과 '추진전략별 협력체계 구축', '이전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제시함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Exploring Consumption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in Regions

연구책임 남기찬 | 연구진 하수정, 홍사흠, 조성철, 조정희, 김천구, 박주영 | 기본 17-19 | 128면



연구목적

국가차원에서의 내수를 활용한 경제성장 전략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지역차원에서 고찰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상황임

- 실제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는 소비자 및 소비재의 이동이 용이하며, 지역 간 의존 및 자원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그럼에도 국가단위의 소비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상황임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소비에 기반한 지역경제성장의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써 지역소비에 대한 역할과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소비지출과 지역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 고찰, 지역의 소비구조의 차이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가능한 소비부문의 도출, 소비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책 차원의 방향성 탐색 등 세부목적을 기짐

연구결과

국가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지출 측면의 기여율은 민간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타 부분에 비해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

- 분석기간(2000~2015년) 국가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살펴보면, 소비 부문이 약 40%의 기여율을 보여 지출부문 중 가장 높은 기여율을 보였으며, 투자(약 25%), 순이출(약 17%), 정부지출(약 16%)의 순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변동계수(CV)를 살펴보면, 정부지출부문을 제외하고는 민간 소비지출의 부문이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순이출과 민간 투자부문은 타 부문에 비해 높은 불안정성을 보임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소비 및 순이출에 대한 기여도는 최근 구조적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대표적으로 순이출 비중이 높은 울산의 경우 과거에는 순이출을 주요한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였으나, 최근 순이출에 의한 경제성장은 음(-)의 방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소득상승(임금 및 고용증대)과 소비와의 인과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2000~2008년의 경우 고용증대 효과만이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용 및 임금증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소비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함

정책제안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소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서 시작하여, 거점 대도시 소비시장 육성전략 및 중소도시의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 전략 등을 제안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 지역경제시스템을 전면적 내수 중심경제로 바뀌어 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대외 여건에 따라 큰 변동폭을 보이는 수출주도 성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국제적 저성장기 및 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안전망 확충을 장기적인 추진전략의 하나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또한 소비재화의 이동양상을 분석하여 거점 대도시에 대한 소비시장 육성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고차재화의 소비가 필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차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소비중심지로 지역의 대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권역화(Regionalization) 및 위계화(Hierarchy)를 통한 전략 활용이 필요함을 제시함
- 이와 더불어, 중소도시의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전략은 소규모 지역들이 갖는 미흡한 생산동력을 극복하고,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직접 방문 및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활용, 두레사업 확장, 연계관광 시스템 구축 등의 방향을 제안함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onitoring Land Cover in North Korea and Its Application in Preparing for Reunification

연구책임 강민조 | 연구진 임용호, 유현아, 안재성 | 기본 17~21 | 163면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국토자원 관리 및 국토개발계획을 위하여, 북한의 토지피복 변화실태 및 경관분석을 통해 국토이용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토지피복 현황 및 변화를 통해 토지피복 실태를 파악함
- 토지피복의 변화와 변화의 불균형 및 집중도가 심화된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경관분석을 통해 토지피복의 변화에 따른 경관파편화 현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적절한 국토계획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단위를 제시함
- 공간계획단위 및 타 공간정보를 융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국토개발 및 산림자원 관리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함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원격탐사기법 및 GIS를 활용하여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북한 전 지역의 토지피복 실태를 분석함

- 시계열 토지피복 현황 및 변화탐지 분석, 토지피복 변화의 집중도 및 불균등 지수 분석, Moran's I를 활용한 토지피복 공간구조 패턴 분석을 통해 산림지역의 감소 및 집중도가 뚜렷한 지역을 선정함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경관분석을 통해서 산림파편화로 인한 경관변화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지역의 국토자원을 관리하고 국토 및 도시개발을 하는데 있어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적절한 공간계획단위를 제시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림을 고려한 공간계획단위인 M_{eff} 또는 M_{eff}^{CBC} 자료를 포함한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자료는 북한 관련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범용적인 활용이 가능하므로, 국토개발과 국토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적 활용의 기초자료 및 참조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상세화, 구체화된 계획수립과 남북 산림협력 및 통합적 자원관리 등을 위해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국토개발 계획수립 및 국토자원 관리에 활용함
- 접경지역의 환경 친화적인 국토이용 구상과 이에 따른 추진전략 및 실

천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모니터링 자료는 정책적 활용성이 높으며 기타 북한정보포털 및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정책제안

본 연구에서는 국토개발계획 수립과 국토자원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공간계획단위'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을 위하여 한 단계 구체화된 '공간계획단위'를 기반으로 하여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제특구, 한반도 신산업벨트 등의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함

접경지역의 친환경적 균형발전을 통한 국토이용 구상을 위해 과학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단위'를 활용함

부처별,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북한 관련 정보들을 '공간계획단위' 기반으로 통합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함

각 부처별로 추진해 온 북한 관련 국토이용 모니터링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연계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천방안을 마련함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Analysis of Domestic Migration of Innovation City and Its Implications

연구책임 윤영모 | 연구진 정우성, 송정현 | 수시 17~34 | 95면



연구목적

혁신도시 유입인구의 구성 및 주변지역 영향 등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정책과제의 도출이 미흡함

- 혁신도시의 인구증가는 다양한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된 결과이므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혁신도시 이주율에만 한정된 기존의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주변지역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 분석연구가 필요함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지역 간 인구이동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제를 제시함

-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중소도시에 입지한 7개 혁신도시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혁신도시 건설 이전 및 이후를 구분하여 혁신도시와 수도권, 주변 지자체, 모도시 간의 인구이동 변화를 분석함
- 분석결과를 토대로 혁신도시, 모도시 및 주변 지자체 간 상생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정주환경 개선과제를 제시함

연구결과

전국적으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나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의 인구증가율은 상승 추세임

- 전국 인구증가율은 2008~2012년 2.8%p에서 2012~2016년 1.5%p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동기간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9개 시·군)의 인구증가율은 2.4%p에서 4.5%p로 약 2배 상승함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의 인구성장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혁신도시, 모도시, 주변 지자체, 수도권 간 인구이동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첫째,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이후, 수도권 인구의 순유입 추세가 지속되는 등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2012년 이후 혁신도시로 약 2만 3000명의 수도권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둘째, 혁신도시 주변 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혁신도시 건설 이후인 2012년 이후 주변 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출된 인구는 약 1만 5000명으로 2012년 이전(약 7000명)에 비하여 증가 셋째,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주변 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출되는 인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이전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출된 인구는 약 2만 7000명 수준이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대폭 증가하여 약 6만 9000명이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출됨

즉,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2012년 이후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도시 및 주변 지자체의 혁신도시 인구순유출 현상도 동시에 진행 중임

- 특히 모도시의 혁신도시 인구순유출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응한 모도시 정주여건 제고 및 쇠퇴 방지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함

정책제안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혁신도시, 모도시 및 주변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주환경 제고방안을 제시함

- 혁신도시의 주택 및 공공시설 공급 등 물리적 정주환경은 상당수준 조성되었으나 의료, 교육, 문화, 여가, 대중교통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으로 해당시설 확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이전 공공기관 시설의 적극적 개방 및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함
- 혁신도시 건설 이후 모도시 인구의 혁신도시 순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모도시의 생활인프라 및 경제기반 활성화 지원방안, 특히 인구 순유출 정도가 큰 모도시의 도시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마련이 필요함
- 혁신도시 주변 지자체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 개발·운영성과를 주변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즉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 중 일부를 활용하여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주변 지자체의 정주환경 개선 및 경제기반 활성화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2) 도시연구본부

- 가야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
-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체계의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연안육역의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 유연화 방안
-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
-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방안
-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
-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
-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의 체계적 활용방안 연구
- 스마트도시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정비방안 연구
-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향: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가야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

The Prelimina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GAYA History and Culture Area



연구책임 이순자 | 연구진 차은혜 | 수시 17-24 | 125면

연구목적

가야는 고대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과 함께 한반도와 주변국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음

이에 국가의 정책적 고려에서도 배제되어 온 가야사를 재조명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가 필요함

- 2017년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고, 8월에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는 등 가야사 연구와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을 촉진시킬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영·호남 소통과 통합의 중요 자원으로서 가야역사문화 자산이 부각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야역사문화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그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현행 추진기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 도출과 지속가능한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및 핵심요소 등을 제안함

연구결과

지역재생전략의 핵심자원으로서 역사문화자산의 활용성 증대 등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가야사 연구·조사 및 발굴결과 축적과 함께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함

-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역사문화정책 전환
- 도시와 주변지역을 함께 고려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이 중요
- 분권 가속화와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 전개 필요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많은 관련 법률이 있으나 대부분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된 가야역사문화권을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동안 '문화관광형 특정지역사업', '문화권 유적정비사업' 등 다양한 유사사업이 추진되었고 얼마 전 '가야문화권 연구·조사와 정비사업 추

진계획'이 발표되었으나 대부분 단편적·개별적 사업 위주로 지역적이고 공간적인 접근에 한계가 있음

-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과 백제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 등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사례가 있으나, 이들 모두 법적 근거 부재로 외부요인에 지속성이 영향을 받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도 특정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음

지속가능한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연구·조사 및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

가야역사문화 가치의 규명과 확립-보존과 유지-이해와 창출이 함께 고려됨으로써 지역발전으로 연계·순환되는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연구·조사와 철저한 고증 등 학술적 결과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 자산의 활용 및 관광자원화가 도모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그동안 연구·조사 현황과 성과, 문제점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을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가야사와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함

가야사를 둘러싼 학계나 정책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펼치고 이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법적 근거 등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가야역사문화권 영역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전개하고 핵심이 되는 가야역사문화 자산을 조사 및 도출함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 발전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전략별 보존·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로드맵 및 사업우선순위, 사업추진체계, 행·재정 지원 및 재원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수립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실천력을 제고함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Green Belt Management Strategy in Consideration of Metropolitan Spatial Structure

연구책임 김중은 | 연구진 이성원, 김다윗, 김태환, 김동근, 임지영, 윤정중, 박준, 박내선, 박재길 | 기본 17-04 | 240면

연구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한하여 해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검토과정에서 도시성장관리 측면보다는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 보전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구역주민 및 재산권자의 애로사항 해소차원에서 해제한 소규모 지역들로 인해, 도시 외곽지역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소규모 주거지역이 산재되어 도시정비 및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도시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46년 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공과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제도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함

본 연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광역적 도시공간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 효용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도시성장관리 기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결과

1990년대 말 주민불편해소와 '선: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 후: 해제'라는 대원칙하에 시작된 개발제한구역 조정작업은 이후 해제총량 및 해제가능 유형 확대, 해제취락 정비 활성화, 해제지역 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변화해 왔음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은 도시성장에 경직적인 구역 운영,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해제총량을 통한 조정방식의 한계, 소규모 해제로 인한 도시정비·관리의 어려움, 해제 후 용도지역체계로 전환관리의 한계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고 있는 7개 대도시권에서는 도시 내부의 압축개발(인구 및 고용밀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나, 2000년대 초반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된 중소도시권에서는 도시 내부의 밀도하락 및 외곽지역으로의 점적 개발확산이 진행 중에 있음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도시성장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3가지 제도 운영

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개발제한구역 내측 지역의 가치 향상을 통한 도시권의 경쟁력 강화 유도
- 불가피한 해제수요 발생 시 성장관리 원칙에 따라 도시용지로 전환 허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를 통한 도시권 내 녹지 확충

정책제안

개발제한구역의 도시성장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 (도시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성장관리원칙 강화) 도시권 내 가용지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도시성장관리 개념을 강화하여 가급적 개발제한구역 내측의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함
-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제한 소규모 지역의 관리방식 개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해제를 허용하고 있는 집단취락 및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는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를 폐지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을 허용함
- (해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발제한구역법령으로 일원화)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개발제한구역법」체계로 일원화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통해 권역별 해제가능총량 부여 및 해제가능 지역의 요건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함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체계의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연안육역의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How to Integrate Urban Planning and Coastal Planning Systems of Korea: Focusing on the Land Use of Coastal Land

연구책임 박종순 | 연구진 김성수, 황명화, 구형수, 장용혁, 이문숙, 정지호 | 기본 17-05 | 140면

연구목적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개발수요가 증가하여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심화되고, 해수면 상승과 같은 요인에 의해 연안침식 및 침수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연안관리의 문제점은 「농지법」, 「산지법」, 「건축법」 등의 개별법과 국토·도시계획, 연안계획, 육역과 해역의 이원화된 계획체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연안육역의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의 연계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 마련, ② 연안관리 지역계획의 일부 내용을 포함한 시·군기본계획의 작성, ③ 연안의 특성을 고려한 토지적성평가의 실시, ④ 연안육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해역적성평가의 실시, ⑤ 건축선 후퇴제도의 도입, ⑥ '어촌·어항 마을단위의 공간계획' 도입이 필요함

- (평가단계) 연안의 특성을 고려한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누적 및 상호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독일의 자연침해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연안지역의 불가피한 개발이 발생할 경우 자연·환경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연구결과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를 조사·작성·평가단계로 구분한 후 단계별로 연계와 관련한 한계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조사단계) 다양한 기초조사가 추진되고 있으나, 분야별 혹은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어 도시계획 수립 시 활용이 쉽지 않음
- (작성단계) 용도지역제와 연안용도해역제, 지구제와 기능구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관리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음
- 토지적성평가는 육지부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이 연안지역에도 적용되어 연안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해역적성평가와 토지적성평가가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개발과 보전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평가단계) 국토계획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각 평가제도는 연안육역 및 해역 간에 공간적으로 누적적인 영향을 파악하지는 않음

정책제안

- (조사단계) 다양한 법률과 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기초조사 항목을 종합화할 수 있는 통합조사체계를 마련하고 정보공유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계획단계) 이 단계에서는 ① 도시계획과 연안계획 수립 시 상대 계획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Research on Regional Resilience Improvement Coping with Flooding Disaster by Climate Change Effect (III)

연구책임 한우석 | 연구진 육동형, 구형수, 강건국, Blair A. Ruble, Allison M. Garland, H. V. Savitch, Chloe Brown, 김태현, 이준
기본 17-22 | 204면

연구목적

본 연구는 1차와 2차연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연도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을 활용한 복원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복원력 도시 구현방향을 제시함

- 1차연도 연구에서는 복원력을 평가하기 위해 관리대상과 평가대상으로 구성된 복원력 평가방법을 개발 및 적용함
- 2차연도 연구에서는 복원력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력을 피해저감능력과 피해회복능력으로 구분하고, 관련 정책의 한계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복원력 도시 구현방향을 제시함

연구결과

피해저감능력과 관련해서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방재를 고려한 도시재생 등을 조사 및 분석함

- 2011년 우연산 산사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구조적 대책 및 도시계획전략 등을 종합하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공간자료 불일치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책마련 미흡과 부처 간 협조 미흡 등으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도시재생사업 시 방재관련 기초조사 포함 및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도시활성화지역 지정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지역선정 및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며, 최근 포항 지진을 계기로 재난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특례구역(가칭)' 지정 등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음
- 피해회복능력과 관련해서는 방재를 고려한 교통계획, 사전복구계획 등을 조사 및 분석함
- 재해대응자원의 신속한 이동성 확보는 재난 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지만, 우리나라는 긴급수송로 등 방재를 고려한 교통계획 관련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는 재해복구 정책의 경우 사후 복구계획 수립, 구조물적 대책 위주, 원상복구 원칙, 복구와 예방의 연계 미흡 등의 한계가 존재함

우리나라의 복원력 도시 구현방향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해저감능력과 피해회복능력 관련 정책의 주요 한계점을 도출하고 해외 시사점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복원력 도시 구현방향을 제시함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함

-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홍수위험 데이터를 구축함
-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복원력 정책 수행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추진함
- 긴급수송로 및 사전복구계획 등 피해회복능력 강화정책을 도입함
- 복원력 평가방법을 제도화하고 이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구축함

정책제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범용적 홍수위험 데이터 구축과 복원력 평가방법을 종합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방법을 개선하고 현행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복원력 도시계획으로 개선하며, 방재 및 도시 관련 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도시재생에서는 홍수위험지역 정보를 활용한 재해저감형 대책 수립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교통분야에서는 긴급수송로 제도 도입과 지정방법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 유연화 방안

Alternative Systems for Flexible Land Use Regulation



연구책임 김동근 | 연구진 김상조, 송지은, 장용혁, 양재섭, 김용진 | 수시 17-16 | 135면

연구목적

경제성장 둔화, 고령화, 총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의 대두, 소득불평등, 고용 불안 등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변화로 인하여 도시공간 또한 변화가 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도시재생전략, 압축도시전략, 스마트도시전략, 지속가능한 도시전략 등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도시전략이 도입 중임
-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적절하게 가능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제도상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현행 토지이용 관리제도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제도가 운영 중임
- 반면, 토지이용 유연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된다 는 비판과 더불어, 이러한 제도가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도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 유연화제도가 도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연구결과

용도지역제도는 성장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한 제도로, 도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적절한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도시가 쇠퇴기조를 보일 때는 용도지역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도지역제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현행 법제도 내에서도 운용 중임

다만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토지이용 유연화 관련 제도는 다음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용도지역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적 접근보다는 특정 대상 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한계임
- 상위계획, 관련계획 등의 지정근거가 부족하여, 해당 지역에 유연한 토지이용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지정효과와 부족으로 제도 도입 시 실질적으로 토지이용이 유연해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지정 절차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 또는 참여 절차가 미흡하고 어디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함
- 개발압력이 낮은 쇠퇴도시나 중소도시에서 이용 가능한 도시전략으로써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낮음

정책제안

도시계획체계와 연동된 토지이용 유연화제도의 운용 필요

- 토지이용 유연화제도가 적합한 대상지에 적절한 강도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지정권한의 위임을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용도지역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함
- 특정지역에 한하여 건축물의 용도나 개발밀도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유연화가 필요할 경우 기존 제도를 이용하되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 용도지역 지정시점과 개발시점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합리성, 공공성을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함

저성장 시대에 맞는 계획적 유연화 수단의 도입

- 토지이용 위주의 규정에서 성능 위주의 규정으로 변경과 한계치 위주의 단순 규정에서 지역특성 연동형으로 변화가 필요함
-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시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 승인기관 이외에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되어야 함

토지이용 유연화와 공공성 간의 균형

- 토지이용 유연화는 용도지역 등의 경직성이 문제가 되어 적용되는 예외적 상황이며, 토지이용의 유연화가 토지이용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됨
- 따라서 토지이용 유연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며, 동시에 모니터링을 통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실효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

Future Prospect and Strategy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



연구책임 이왕건 | 연구진 김진범, 박소영, 권규상, 송지은, 정유선, 민범식 | 기본 17-24 | 200면

연구목적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정으로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였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당수준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사업 추진을 제약하는 제도적 한계,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개선방안 마련의 요구가 높아짐

- 한편, 2017년 4월 9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하였고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은 큰 전환기를 맞게 됨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실태와 접근방식을 분석하고, 도시재생 원칙의 설정, 목표의 구체화, 주체 간 역할분담을 제시하여 향후 추진할 정책목표와 제도화에 부합하는 법제도의 제·개정 방향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과 과제를 계획, 조직, 예산 측면으로 분석하였음

- 계획 측면에서는 물리적 개선사업 위주의 단위사업 구성, 축소도시 현상 대응 부족, 길고 복잡한 계획수립 및 심사과정, 유형별·지역별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쇠퇴기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부족이 한계로 파악됨
- 조직 측면에서는 지자체 행정전담조직의 위계와 인력 등 역량의 한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자율성·연속성 부족, 중앙부처 협업을 위한 조정 창구·제도·조직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됨
- 예산 측면에서는 지자체별 재정상태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활용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사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포괄보조금이 원래의 목적과 달리 자율성이 적다는 점이 한계로 분석됨

우리나라 도시재생에 참고할 만한 일본의 도시·지역재생 관련 제도로는 도시재생, 중심시가지 활성화, 지역재생제도의 3가지를 분석함

- '도시재구축전략사업'을 추가하여 기존의 국토교통성 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처 관할인 사회, 복지, 문화, 교육, 보육 등 시설정비 포괄, 법령이나 국가보조금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독자사업을 계획에 포함하는 유연성 확보, 사회경제여건에 대응한 '작은거점사업', '입지적 정화계획'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함

정책제안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안을 계획·조직·사업 측면에서 제시하였음

- 계획 측면에서는 「도시재생법」의 세분화, 유형별 지원 및 선정기준 개선, 축소도시 대응전략 연계, 지역자산화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제안하였음
- 조직 측면에서는 국가, 광역·기초지자체, 공기업, 민간 등의 역할분담, 사회적 경제 및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을 제안하였음
- 사업 측면에서는 범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협업형 국정과제 공동추진, 도시재생합동 추진단 설치 및 운영 등을 제시함
- 도시재생 법제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특별법 성격에 맞도록 의제 처리, 특례인정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근린재생형과 도시경제기반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 및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방안

Multy-dimensionl Urban Policy for Urban Regeneration



연구책임 이범현 | 연구진 이정찬, 김승남, 홍경구 | 수시 17-19 | 97면

연구목적

인구의 감소에 따른 도시공간의 쇠퇴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시설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시각의 활용 등 입체적 이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지금까지 도시재생정책은 특정 공간에 대한 활성화와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어 왔고, 입체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기존 시설의 활용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음

입체적 공간 이용에 따라 도시민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도시공간 이용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지하공간 개발 등 입체적 도시조성방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평면적인 도시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의 연결과 접근성의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입체적 도시조성방안 연구가 필요함

연구결과

국내의 입체도시 계획제도는 일본의 입체도시 계획제도의 틀과 유사하지만, 국내에서 활발하게 적용하는 데 아직 한계가 있는 이유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현재 관련 법적 기준에 의하면, 공공재 성격의 행정재산에 대한 구분지상권 등의 사권설정이 불가능하며, 기반시설의 입체적 활용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이 미흡함

- 주차장, 공원과 녹지 등의 면적확보 기준이 '시설' 중심의 공간적 기준이 아닌 '토지' 중심의 평면적 기준으로 설정됨

법률 간 연계성뿐만 아니라 각 개별법과 입체도시 계획제도 간의 연계성도 미흡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건축법」, 「철도법」 등 법률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입체도시계획 적용이 어려우며 「건축법」, 「주차장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사업

과 관련된 각 개별법과 입체도시 계획제도와의 연계성 또한 미흡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개발 허용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해서 입체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패키지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정책제안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입체도시 조성방안을 제시함

- 국유재산에 사권설정을 금지해 민간참여(비도시 계획시설 복합개발)저해 및 2차원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으로 인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입체공간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 법률 간 연계성뿐만 아니라 각 개별법과 입체도시 계획제도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종합적 차원에서,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 정비와 사업추진이 필요함

- 입체도시 관련 법·제도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패키지형 개선방안을 추진하되, 노후기반시설 정비 시 입체화를 고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지원책이 필요함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

Urban Regeneration Policy of Packaged Style for Urban and Regional Resilience

연구책임 이왕건 | 연구진 권규상, 박소영, 이정찬, 민범식, 진영호 | 수시 17-14 | 133면



연구목적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국비지원을 위한 마중물 사업 외에도 지자체 사업, 부처협력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종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각 단위사업은 화합적 연계 및 부처별 협의를 통한 사업의 연계가 미진한 실정임

본 연구는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의 구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결과

패키지형 도시재생은 특정한 공간단위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복원하는 도시재생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문화·경제정책과 각 정책이 발현되기 위한 구체적인 장소 및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공간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통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이 어려운 이유는 법적 측면, 예산 측면 이외에 실제사업을 집행하고 연계 추진하는 조직적 측면에 기인함

- (법적 측면) 법률에 따른 계획수립 절차의 복잡성과 이해관계 충돌 시 해결 가능한 조정 절차의 부재, 도시재생 관련 계정변동에 따른 제약 등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유인동기가 부족함
- (계획 및 예산 측면) 통합적 운영의 걸림돌이 존재하지만 실제 개별 정책 및 사업들을 연계할 조직적인 역량과 역량만 있다면 현 상태에서조차 충분한 수준의 통합적 추진이 가능함
- (조직적 측면) 중앙의 부처할거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성과평가체계의 한계 등을 들 수 있고, 지자체 측면에서는 전담조직의 낮은 위상, 행정협의회회의 유명무실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위에 따른 독립성 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는 정책들을 장소와 계획 중심으로 엮을 만한 동력과 인센티브가 부족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함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처할거주의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패키지 정책을 추진함

- 일본은 내각부에 각 부처의 업무를 조율할 특임대신을 임명하여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패키지를 제시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각 사업들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의 기본전제는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중앙은 이해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지방은 실질적인 사업의 연계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임

-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상당수의 개별사업 추진은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 맡기고, 각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상호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다툼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등 이해관계 조정자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함
- 뿐만 아니라 중앙 나름대로의 협업사업 발굴, 지방 차원에서 중앙의 정책 및 사업과 지자체 사업들을 연계하여 패키지화하는 등 하향식 방식과 상향식 방식을 동시에 활용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부처별 협업사업 발굴을 장려하기 위해서 부처 협업에 관한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협업을 유도하는 한편, 성과는 협업에 참여한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성과 평가기본계획을 조정하고 부처 협업사업과 관련한 사업리스트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지자체가 다양하게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

지역차원에서 지자체 전담조직의 위상은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협의회회의 위상 및 운영 효율성 증진방안 확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정책사업 선정 시 또는 관문 심사 시 단체장을 중심으로 행정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행정협의회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전반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사업에서 행정협의회를 운영함

뿐만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육성사업을 개별 고유사업으로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 이전의 기반구축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량을 확보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타 부처 사업들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연관된 다른 지원센터들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

Development of the Urban Flooding Risk Prevention System(II)

연구책임 이상은 | 연구진 이병재, 이종소, 김슬예, 이태삼, 송창근, 김진현 | 기본 17-23 | 310면



연구목적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담당자가 방재 대책이 필요한 곳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침수예방대책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은 기후변화 재해에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 내 재해위험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는 적응전략계획을 말함(국토교통부 2015)
- 향후 이 시스템을 매개로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 지자체, 전문 연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한 뒤 도시방재계획의 선진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첫째, 관할지역의 도시 침수위험에 대한 인지도 수준을 제고하고, 둘째, 신뢰성 높은 위험정보를 기초로 관내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공간범위를 영향권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지원하며, 셋째, 도시계획적 방재대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함

연구결과

본 연구(2차연도)에는 도시 침수예방대책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확대'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함

첫째, 도시 침수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가지 종류의 행정구역별 기초자료를 개발함

- 침수발생의 지역적 여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자료 분석과 통계기법을 응용하여 하천변 저지대 면적의 지표를 행정구역별로 산정하고 자연재해 관리지구 면적 지표를 구축함

둘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8개소로 선정하고, 경기도 광주시와 포천시의 대상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도시 침수의 영향권을 명확히 설정함

- 대상지역의 공간범위를 설정, 강우 시나리오 자료 생성, 도시침수 간소화 해석을 통해 침수범위 내 각종 주제도를 작성하고 100m×100m

격자 공간으로 중첩하여 분석한 모든 정보를 통합함

셋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험정보를 이용하여 고위험지역의 위치와 주요 원인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실증한 뒤 방재대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함

- 쌍대비교 방법인 AHP와 우선순위 방법인 PROMETHEE를 연계 적용하여 격자단위로 고위험지역의 위치를 결정 및 주요 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으며, 방재대책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함

넷째, 시스템의 내용물을 담는 '그릇'인 도시 침수예방대책 지원 시스템을 3차연도에 본격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베이스의 대상 정의, 개념설계, 논리설계, 자료처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사용자 시나리오에 맞춰 시스템 화면을 설계함

정책제안

도시 침수예방대책 지원 시스템의 기능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852호로 발효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국토연구원의 검증 역할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음

도시 침수예방대책 지원 시스템 운영과 자료의 안정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해취약성 분석의 검증기관이 정밀 분석기능을 갖춘 시스템의 운영과 시스템을 활용한 지자체 전문역할을 담당하도록 관련 지침의 개정이 필요함

개발될 시스템을 매개로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연구기관 간의 협동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연구기관은 매년 담당부처와 함께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효과적인 방재대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기술자문이 필요함

본 시스템에 축적될 자료에 대한 기술자문뿐만 아니라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공식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가차원의 위험도 관리에도 활용함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의 체계적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Public Land Utilization Policies for Enhancing Urban Vitality

연구책임 김명수 | 연구진 조만석, 민범식, 이상준, 이종민 | 수시 17~11 | 52면



연구목적

국공유지는 국토 또는 도시 내에서 매우 중요한 공유자산이며, 이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제도가 필요함

향후 국공유지 활용 확대를 통한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활용대상의 확대, 장기적·광역적 국공유지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함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국공유지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종합조정기능 강화방안을 제시함
- 국공유지 활용 확대를 통한 공익적 기능 강화방안을 제시함
-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국공유지 활용계획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함
- 국공유지 활용과정의 갈등 해소 및 협력적 활용방안을 제시함

연구결과

국공유지 활용의 핵심가치로 혁신성장과 포용을 설정함

- 정책과제로 국공유지 활용범위의 확대, 총괄 조정기능의 강화, 장기적 관점의 활용계획 수립(제도화), 활용에 대한 갈등해소 시스템 구축을 선정함

활력 있는 도시의 3대 조건을 제시함

- 도시활력의 조건은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활력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3가지 활력조건이 상호 작용하여 도시 전체의 활력이 발휘된다고 볼 수 있음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도입기능을 설정함

- 도시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확보와 문화적·정치적·사회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도시기능의 확보가 중요함

정책제안

국공유지의 활용범위를 확대함

- 현재 필지단위의 개발로는 다양한 국공유지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어

렵고, 수익성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국유지, 공유지, 민간소유 토지까지 포함하여 단지규모의 개발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유휴 및 저이용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이용도 평가 후, 활용가능성이 높은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총괄청의 조정기능을 강화함

- 총괄청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적극 활용하고, 국공유지 활용의 공익성 담보를 위한 기획평가 기능을 도입함

국공유지 활용계획을 제도화함

- 국공유지 활용의 확대를 위해 먼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자체 단위의 국공유지 활용방향과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활용을 위한 많은 장애요인의 해소방안도 반영이 가능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함

갈등해소와 협력적 활용 기준을 마련함

- 국공유지 활용과정에서의 갈등은 결국 이해상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와 사업방식의 개선, 협력적 활용 및 토지의 거래를 위한 협상기준을 마련함

스마트도시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정비방안 연구

Smart Cities and Infrastructure Policy Implications



연구책임 이범현 | 연구진 김성수, 이승욱, 이정찬, 여화수, 손세형, (주)씨이랩 | 기본 17-11 | 280면

연구목적

최근 「스마트도시법」 개정에 따른 제도적 변화에 맞춰 기존 신도시에만 적용되었던 스마트도시의 개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성시가지에 대한 기존 시설의 스마트화 확충 및 체계적 정비방안 제시를 목표로 함

-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외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기성시가지 시설의 스마트화에 대한 개념 및 범위 설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향후 스마트도시시설 구축범위의 확대가 예상되는 바, 기성시가지에 기 조성된 도시시설의 스마트화에 따른 체계적 확충 및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기성시가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범위 및 개념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연구결과

기성시가지보다는 신도시 위주로 적용되어 도시의 각종 기능이 도시계획 시설에 의해 발휘된다고 볼 때 「유비쿼터스도시법」이 실질적으로 도시기능 지능화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한계임

-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향후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스마트도시시설의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주민의 수요파악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화와 기준설정이 필요하며 기술동향 및 기술연관성을 고려할 경우 주요한 기술요소는 AI, IoT, 빅데이터 등과 연계된 기술요소가 구현 가능한 분야로서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차별적으로 기성시가지의 도시재생 차원의 스마트도시시설 확충 및 정비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로서 거주민의 수요와 스마트도시시설의 기술적인 한계를 고려한 적용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것임

정책제안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적인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현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6조의 내용에 따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적용대상에 30만㎡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면적 규정을 제외해야 함
- 대규모 계획 중심의 사업추진 대신에 단위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실제 사업은 지방이 추진하되 중앙은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지방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함

스마트도시시설의 모듈화와 관련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도시서비스와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완화규정을 마련해야 함

- 스마트도시시설은 스마트서비스 제공과정을 통해 정보수집 장치들이 허브가 되는 정보의 저장, 분석, 예측이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에 연결이 되고 정보전달과 조치를 위한 장치들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공간단위로 체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Policy Directions for Revitalizing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in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연구책임 박세훈 | 연구진 조만석, 송지은, 임준홍 | 수시 17-01 | 91면

연구목적

글로벌화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중소도시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지방중소도시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됨

인구감소는 고용감소, 재정력 감소, 행정서비스 약화, 삶의 질 저하 등을 초래함에 따라 중소도시의 여건 변화, 기능적 차별화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글로벌화·광역화되는 국토공간체계 속에서 중소도시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신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역간 연계협력정책, 도시재생정책 등 지방중소도시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연구결과

40개 지방중소도시를 인구규모(1995년), 산업구조(제조업 종사자 비중, 1995년), 인구변동(1995~2015년)의 3가지 기준으로 군집분석하여 유형화한 결과 지역거점도시, 산업도시, 소도시의 3가지 유형을 도출함

- (지역거점도시) 인구규모가 비교적 크고 전통적으로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해온 도시
- (산업도시)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속히 인구가 성장하는 도시
- (소도시) 인구규모가 적고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인구가 정체 혹은 쇠퇴하는 도시

인구성장 추이, 산업구조, 공간구조 등에서 지역거점도시, 산업도시, 소도시별로 뚜렷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기반을 갖춘 도시, 일부 입지적 우위를 가진 도시가 성장하고 그 밖의 도시는 정체 내지 감소함

모든 유형에서 생활권이 확대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음. 주변지역으로의 통근·통학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도시 등 인구가 성장하는 도시의 주변지역과 연계가 높게 나타남

많은 지방중소도시가 인구감소 경향에도 불구하고 시가지의 외연확장, 핵심시설물의 분산배치로 미래 발전전력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변 시·군과의 연계시책은 정치적·재정적인 이유로 거의 추진되지 못하

고 있으며 도나 국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정책제언

(도시권 중심의 연계협력) 중소도시권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심-주변', 혹은 네트워크 도시 등의 공간적 개념에 기반한 연계·협력 전략을 추진함

(도심거점기능 강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압축도시 전략을 도입하여 도시 기능을 도심 중심으로 축소 조정하고, 스마트시티 등 신규 정책사업을 도심지역에 집중함

(혁신과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조업 중심도시는 혁신 제조업 육성을 위한 소규모 복합산업 공급, 역사문화도시는 문화자산 기반의 도시재생 추진, 도심상업지역은 사업진흥지구(BID) 제도를 도입함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마을의 잠재자원, 유휴공간,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하여 주민과 지역사회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마을재생을 추진함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향 :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Feasible Strategies to Address Gentrification-related Issues in Urban Regeneration Areas

연구책임 이진희 | 연구진 임상연, 송지은 | 수시 17-25 | 135면

연구목적

정부정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확대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지역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함

-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활성화를 위한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취약계층의 비자발적 이주를 야기하는 등 여러 부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함
- 그러므로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공공의 개입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은 정부정책으로 대응하여야 함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정책의 시도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의 노력이 진행 중에 있음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양상과 부작용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며, 여러 법제도가 연결되어 개별 정책의 개선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개별 수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어느 수준의 제도 개선에서 개별 수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에 따라 개발압력이 낮은 지방도시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양상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관련 법령의 개정과 지자체 주도의 다양한 정책 수단의 시도로 이루어졌으나, 관련 법령과 개별 정책 수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은 실질적인 규제나 지원방안이 미흡하여 추진이 어렵고 효과가 미비하므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규제방안과 지원방안이 함께 적용되어야 함
-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주민의 이해를 돕는 공론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지자체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정책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므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정책제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제안은 관련 법령, 도시계획적 관리, 지자체 조례의 3가지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임

-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해 지자체 조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국토계획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도지구로 젠트리피케이션 관리지구를 설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함께 도시재생 조례를 제·개정함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Improving Imposition of Charges for Using Groundwater



연구책임 이상은 | 연구진 조만석, 이준서, 여형범, 이구용 | 수시 17-17 | 112면

연구목적

지하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 수자원임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하수 관리를 위해 규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음

-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는 별도로 국가 재정담당부처와 협의해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 지자체 역시 많은 업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부담금 징수액이 133억 원에 불과하여 재원운영의 안정성이 미흡함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부담금 부과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적정 산정단가를 검토함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면제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적정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

연구결과

우리나라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현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인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의 법적, 제도적 성격과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함

현재 면제대상 중 지하수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반수도사업용, 가정용, 간이상수도용 및 대규모 농·어업용에 대한 면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함

- 가정용은 해당 지역의 상수도 시설 보급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되고 있어 면제 제위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일반수도사업용 역시 지하수 관련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면제 제외 검토가 가능함
- 농·어업용은 사용량이 많기는 하나 소규모 저소득 농·어민의 부담을 고려할 때, 시설원예단지, 기업농, 양어장 등 대규모 농·어업용 지하수 개발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간이상수도는 상수도 급수 전환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물 관련 부담금, 요금, 조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산정단가 조정 및 면제 대상 조정에 따른 예상 수입금을 분석함

-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단가는 85원/톤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산정기준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과 연동되어 있는 것은 근거가 빈약함
- 단, 분석 결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일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상의 자자체 역할을 담보할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

따라서 산정단가와 면제대상 조정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의 최우선순위는 아니며, ① 세부비목별 적정 관리비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② 지자체가 지하수 관리의 사무주체가 된 이후의 시점에, 지하수의 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책제언

현 지하수법상 지하수이용부담금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아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수준이나 면제대상 등의 주요 쟁점 사항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재량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므로 일괄 의무 시행이 우선됨
-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전부 귀속시키지 않고 일부를 전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납입처의 명시도 필요함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성격이 전혀 다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과 연동될 근거가 매우 희박하므로, 주관부처에서 산정단가를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편이 바람직함

방치공 관리, 오염지하수 정화 등에서 사무가 겹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구분하여 지자체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 및 활용 근거를 강화해야 함

지하수관리기본계획과 지하수이용부담금 활용계획을 현재보다 더 긴밀하게 연계하여 국가 지하수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고 부담금 운용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3) 주택·토지연구본부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제도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
-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II):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의 지역별 영향을 중심으로
-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
-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전략
- 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 지역기반 부동산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Housing Policy Responding to One-person Households Increase



연구책임 박미선, 이재춘 | 연구진 김근용, 이윤상, 천현숙, 전희정, 조영하, 야마네 사토코 | 기본 17-01 | 149면

연구목적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구구조가 1인 또는 2인 가구 위주로 재편되어 2015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27.2%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됨

1인 가구 내에서도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세분화된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1인 가구의 경제·사회 및 주거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소득수준별,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주거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가구 소형화가 두드러지게 발생하여 지난 10년간 1인 가구는 322만 가구가 증가하여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부상하였고 특히 청년층의 비중이 큼

- 향후 가구소형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1인 가구 비율이 36.3%, 부부가구 비율이 21.2% 등 1~2인 가구가 주된 유형이 될 것임
- 따라서 3~4인 가구 위주의 주거지원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1인 가구 형성 원인은 가족관계 해체와 결혼에 대한 사고 변화에 기인함

- 청년은 가족 미형성, 비혼·미혼, 가치관 변화가 주된 원인임
- 중장년은 가족의 해체, 이혼·기러기, 경제적 능력과 교육이 주원인임
- 노년은 가족구성원 탈락, 사별, 성별 고령화 및 기대여명의 차이에 기인함

(경제적 여건) 1인 가구는 학력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여, 소득 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이며, 이른 나이에 임시 일용근로자로 전환하고 성별로는 여성의 저소득 가구가 많음

(사회적 특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노숙인과 고독사 증가 문제가 대두되며, 특히 장년층(50~64세) 남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주거여건) 1인 가구는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점유형태가 불

안하며,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함

- 자가보다 전세가 많으나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특히 수도권,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높게 나타남
-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2년 내 주거이동이 빈번하며 거주기간이 짧음

(공적지원) 연령대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청년과 노년에 집중되어 있고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부재

- 주거급여 수급자의 68%가 1인 가구이나 공공임대 거주자는 미미함 (정책대상 지원 규모) 1인 가구 저소득 1~2분위 중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경우 총 123.6만 가구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정책제안

1인 가구의 유형별 특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포용성, 통합성, 부담가능한 저렴주택 공급, 적정주택 기준 마련, 주거상향이동 지원 정책방안을 도출함

- 첫째, (포용성) 1인 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포용하고 주거종합계획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함
- 둘째, (통합성)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정비, 연령대별 맞춤형 주거교육 및 카운슬링 프로그램,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함
- 셋째, (부담가능한 저렴주택 공급) 1인 가구 주거비 지출을 고려한 저렴주택 공급, 공유형 세어하우스, 코하우징, 다양한 공급주체를 통한 공적지원 주택을 공급함
- 넷째, (적정주택 기준 마련) 3~4인 가구 중심이 아닌 1인 가구 거주 특성을 고려한 주거기준 수립,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주택 입주 가점을 부여함
- 다섯째, (자산증식 및 주거상향이동 지원) 청년층 보증금 마련부 저축 상품, 장년층 주거상향이동을 위한 자가주택 마련 지원, 1인 가구 생활비용 지원을 통한 홈리스 방지를 제언함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Housing Welfare Programs for Young-single Generation



연구책임 박미선 | 연구진 강미나, 임상연, 유은영, 오주형 | 수시 17-02 | 97면

연구목적

인구·가구 구조변화로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청년 주거복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정책이 다인 가족, 저소득층, 가구주 중심으로 청년은 주거복지 정책의 고려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음

- 주택의 탐색 및 계약, 거주 과정에서 상대적 열위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청년의 이행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1인 청년가구에 대한 현장 중심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청년 주거복지 지원 강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함

- 청년가구를 학업과 취업에 따라 구분하여 주거상하이동 과정에서 고충과 불안정, 주거지원 정책과 주거문제, 주거수요 및 니즈를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

연구결과

청년의 독립사유는 취업준비와 학업 때문임

청년의 주거비는 부모를 통해 조달: 평균 보증금 2,066만 원의 71% (1,476만 원), 월임대료 35만 원의 65%(23만 원), 총생활비 90만 원의 절반 이상(46만 원)을 부모의 지원에 의존함

주택탐색, 계약, 거주과정에서의 주거불안정

- 계약관련 기본 교육 및 정보 접근성 부족: 주택임대차 기본교육 부재, 사용자 중심 정보제공처 부족
- 중개업소의 책임성 문제: 허위물건 등록, 불법건축물 중개,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 전입신고 불가 요구: 임대소득 노출부담에 따른 전입신고 불허
- 주거비 부담 과다: 저렴주택(전세) 부족, 월세부담 과다, 대학가 주변 월세 고가
- 주거안전 취약: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최저주거기준 미달

- 주택 거주·주거안정: 잦은 주거이동, 계약기간의 경직성

주거비 부담에 따른 미래의사결정 영향

- 주거비 부담으로 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주거상하이동 시 부모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며, 주거문제에 인한 근로 빈곤층 형성의 가능성을 내포함

정책제안

본 연구에서는 1인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포용성, 이행기 정책, 자립강화, 책임과 의무, 맞춤형), 당면문제 해결 중심의 치유적 정책과 추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정책의 병행을 제안함

- 1인 청년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포용하고, 생애주기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유효유 공급정책, 복지 의존적 삶이 아닌 자립을 위한 지원과 인센티브, 공적 수혜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의식 명확화, 청년 수요 맞춤형 정책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교통시설의 접근성이 높은 곳, 세어형

수요 맞춤형: 1인 가구용 단독/공유주택 평면 개발, 세어형 주택 정보 플랫폼 운영

주거비부담 완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주거안정 자금 지급

주택교육 및 카운슬링: 주택 탐색, 계약과정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교육 강화와 정보 제공, 상담센터 운영, 피해방지 및 피해상담

거주과정 불이익 해소: 불법개조 건축물 신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건축물 파악 등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제도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Better Treatment of Construction Laborers



연구책임 최수 | 연구진 김민철, 정승혜 | 수시 17-28 | 126면

연구목적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185만 명, 전체 취업인원의 7.5%, 2016 기준)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임

- 업종별 취업자(만 명): (제조업) 448, (건설) 185, (운수) 141, (농어업) 129
- 건설업 연평균가 취업자(만 명): (2011년) 175.1 → (2014년) 179.6 → (2016년) 184.5

특히 취업자가 대부분 비정규직 건설근로자(136만 명, 전체 건설업 취업자의 73.5%)로 건설 일자리의 질은 서민가계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그러나 근절되지 않는 임금체불과 삭감,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직업 안정성 등으로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3D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 단기간 도급구조에서 위험과 부담을 말단의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손실을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과 '불법외국인력 고용'으로 만회하는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음
- 정규직 고용 비중이 낮아 사회보장, 직업훈련 등에서는 소외되는 반면, 장시간 옥외근로와 빈번한 산재로 노동강도는 높은 실정임

그간 내국인·청년층의 건설업 취업기피에 따른 건설산업 생산기반 약화 방지를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2011), 체불사업주 명단 공표제 도입(2012) 등 일부 건설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한 바 있으나,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제고, 근로환경 개선, 직업전망 제시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근본적 처방에는 한계가 있었음

본 연구의 목적은 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임금지급보증제, 적정임금제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연구결과

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유용, 2~3개월분 임금을 사후 지급하는 유보임금 관행 등으로 타 산업에 비해 임금체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원천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건설근로자 처우 관련 제도로는 임금직접지불제, 지급보증제, 체당금제도 등이 있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생계가 지속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임

미국은 'Prevailing Wage', 호주는 'Award System'이라는 임금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건설사들은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음

- 첫째, 과도한 노무비 삭감을 예방하는 효과
- 둘째, 원수급자-하수급자-근로자 모두의 상생을 도모하는 효과
- 셋째, 건설 공사의 하자를 저감시키는 효과
- 넷째, 숙련인력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
- 다섯째, 가격경쟁을 낮추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효과
- 여섯째,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효과

정책제안

건설산업은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되어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므로,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임금직접지급제', '임금지급보증제' 등의 시행이 필요함

적정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Prevailing Wage와 호주의 Award System이 주는 시사점은 양 제도 모두 지역별, 직종별, 등급별 최저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세분되어 발표·공표되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우리나라도 실효적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일 구조의 적정임금제보다는 지역별·직종별·등급별 적정임금제 시행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능인 등급별 적정임금제가 필요함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

Strengthen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연구책임 안종욱 | 연구진 조정희, 이승훈, 김남용, 명갑문 | 수시 17-04 | 64면

연구목적

노후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보수,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증대가 예상되나, 투입 가능한 재정은 한정적임

- 1970~1990년대 집중 개발된 건축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며 안전, 환경 등의 사회적 요구 및 신기술이 반영된 기반시설의 성능 향상이 필요한 시점임
-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에 큰 비용이 예상되지만 향후 정부 예산 편성에서 SOC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임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여 기반시설의 운영 효율성 증대와 동시에 국가 재정부담 완화가 가능한 민간자본 활용방안을 마련함

연구결과

주요 선진국의 기반시설 패러다임이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중심으로 변화 중이나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편임

- 미국은 주요 기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지출이 신규 건설예산을 초과함
-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서 개선 관련 사업(RTO, RTL 등)을 정의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함

중국은 상하수도 인프라의 보수 및 운영에서 TOT(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을 도입함

- 정부가 공기업 지분 일부를 민간에 넘겨 공기업과 외부 투자자가 함께 합작회사(J/V)를 설립 후 일정 기간(30~50년) 동안 운영을 양허함

미국은 시카고 스카이웨이, 인디애나 유료도로 사업의 경우 정부가 소유했던 유료도로를 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하여 RTO를 활용함

- 민간 임대 이전에 장기간 도로의 운용 실적 및 통행료 수입 등의 추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유치가 용이했음

영국은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묶음 사업을 추진함

- Sheffield City Council Highway PFI Project에서 시의 전 지역에 걸

친 고속도로, 교량, 가로수, 가로등의 25년간 개량 및 유지보수를 번들링하여 발주함

European Commission과 European Investment Bank(EID)는 Project Bond Initiative를 개발하여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함

- EIB가 후순위채를 제공하여 기관투자자가 참여 가능한 사업 신용도 수준을 확보함

정책제안

노후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향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 지원, 공개와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 개선방안의 실행을 위해서 노후시설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전문기구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함

사회기반시설 관리전문기구의 역할은 노후시설을 포함한 전체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임

- 시설물 현황 파악(평가기준 마련), 민자사업 계획(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설정), 재원조달을 위한 부처 간 협업 등

노후시설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의 민간이양, 요금 징수와 활용, 클라우드펀딩 활용 등의 법제 근거 마련이 필요함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A Study on Directions for Reforming Real Estate Industries Based on Shifting the Socioeconomic Regime



연구책임 송하승 | 연구진 이형찬, 김선영 | 기본 17-08 | 154면

연구목적

건설공사 계약실적이 2015년에 84조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주택소비 여력이 유지되는 것을 예단할 수 없음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6년에 95.6%로 OECD 평균 비율인 70%를 상회함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건설된 대규모 고층 아파트들이 노후화되고 있어 재고 주택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기에 부동산산업의 역할을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탐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첫째, 부동산(주택) 생산과 소비의 지탱 구조를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형성된 부동산산업의 대상(건조환경)과 소비 행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셋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부동산산업의 역할 설정과 대안을 제시함

연구결과

대량 소비와 생산을 지탱하기 위해 고안된 부동산 금융화는 주택소비자의 자산과 소득에 따른 금융 접근성의 차이를 야기하여 하위 주택시장의 계층화를 심화시켰음

- 이중차분추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금융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강남권역에서 188.6, 1기 신도시권역에서 79.8로 추정됨
- 1기 신도시권역 발생 교통량의 22.9%가 강남권역으로 통근하고, 이중 71.0%가 전문직과 고소득 통근자였음

상대적 저소득가구에서 시작된 자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현상은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주택 구매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강남권역 소형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2000년 16.8%에서 2015년 34.2%로 2배 증가되는 동안, 1기 신도시 주변권역의 경우 2000년 11.0%에서 2015년 32.3%로 3.1배가 증가됨
-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며, 실제로 전세와 월세 비중이 1980년 각각 23.9%, 15.5%에서 2015년 15.5%, 23.7%로 역전되었고,

연령별 자가 주택 비율은 후세대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1기 신도시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재생지역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조환경 재생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

- 1기 신도시 아파트의 81.7%인 40만 1,660호가 향후 10년 내 건축 연한이 20년 이상 됨

정책제안

부동산과 부동산산업 관련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탐색하여, 부동산산업의 사회적, 도시관리적, 산업적 역할로 전환을 모색하고 그 분야를 제시함

- 개보수산업 참여를 통한 신규 활로 모색, 중개기반 부동산 종합서비스 시장의 다각화, 개발 및 임대관리 통합시장 모색, 비주거용 건물 자산 관리의 틈새시장 개척 등임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려운 1기 신도시와 서울 저층 밀집주거지역에서 도시 기능과 주택 성능 저하 방지를 위한 개보수산업 활성화를 제안함

- 1기 신도시와 서울 저층 밀집 주거지역의 시장 규모는 각각 3조 원, 0.5조 원이고, 참여 가구는 18만 3,687호, 2만 9,964호로 추정됨

부동산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부동산산업 다각화를 위해서 중개, 임대·시설 관리, 개보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중개 기반 종합서비스 모델을 제안함

- 이 중 임대·시설 관리 서비스의 시장 규모는 1기 신도시와 서울 저층 밀집주거지역에 554~667억 원/년, 234~248억 원/년으로 추정됨

부동산산업과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해서 부동산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 부동산서비스 공급자 간 공정한 경쟁과 거래, 소비자보호 등 부동산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함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II) :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의 지역별 영향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Real Estate Market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II): Focusing on the Regional Influence of Changes in the Structure of Jeonse and Monthly Rental Market

연구책임 변세일 | 연구진 박천규, 전성제, 노민지, 이태리, 최진, 방보람, 정경석, 최진도, 전석훈, 김태환, 유승동, 최명섭 | 기본 17-25 | 279면

연구목적

최근 주택 전월세시장은 매매가격 안정으로 임차수요 증가, 저금리구조 등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 즉 전월세 구조변화로 임대차 유형 간의 수급 불일치가 나타남

- 하지만 현재까지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해되는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논의는 전국적·총량적 차원에서의 현상 파악에만 국한됨
- 따라서 전월세시장 구조변화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별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방안 도출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의 양상과 원인, 전월세시장 구조변화로 인한 주거비 부담 변화, 지역별 시장 영향, 주거이동 및 이동범위 변화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여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의 양상 및 원인 분석,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의 영향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 등을 종합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월세시장 구조변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시기에 나타나고, 수도권과 광역대도시권, 도시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진행속도가 빠르고 두드러지게 나타남
- 임대차 점유형태 선택모형에서 자산 및 소득 연관 변수가 강한 유의성을 나타내며, 2008년에 비해 2016년은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서 전세 선택 확률이 더 많이 낮아짐
-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로 2008년에 비해 2016년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전세보다 크게 증가하고, 수도권과 광역대도시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현저하게 증가함
-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지역 간 주거이동은 수도권, 충청권, 부산권, 울산권, 경남권 등의 전세와 월세 유형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보증부월세의 경우 공급물량이 많아지면서 감소함
- 시장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과 자산의 증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월세수요를 감소시키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입제약의 증가와 주거비용의 증가는 월세의 수요를 증가시킴

- 국내외 사례 검토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 주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외국에 비해 민간의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제한적이며 임차인 보호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정책제안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자금지원 확대, 임대료 인상 최소화 등이 필요함

-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주택비축은행(가칭) 도입, 장기임대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등을 제안함
- 임차인의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주거급여 확대, 전세자금 및 월세자금 지원 강화가 필요함
-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지역별 보증금 보호 범위의 차등적 상향조정이 필요함
- 수도권, 지방대도시 및 도시지역 우선 지원, 주거·복지·산업 정책의 연계, 수도권, 충청권 등 도시계획과 주거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nsolidation of the Policy for Korean Real Estate Market(II):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al Plan for Regulation of Residential Mortgage Loan

연구책임 이태리 | 연구진 이수옥, 김민철, 조정희, 황관석, 오민준, 권건우, 강성우, 김계홍, 김태환, 민병철, 변동준, 전홍규 | 기본 17-26 | 239면



연구목적

주택금융시장의 위험 증대

-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14년 이후 주택경기가 회복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고, 향후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제기함
- 주택시장 활황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시장안정화를 위해 LTV(Loan to Value), DTI(Debt to Income) 규제를 마련하였으나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함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주택담보대출을 다양화할 경우, 적정규제를 통해 시장안정성과 효율적 지원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고찰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연구결과

주택금융의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위험 차주의 규모 및 위험도를 파악하고, 금리 및 유동성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과다·다중채무자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차주단위 스트레스 테스트, 위험군 관리 등을 위해 주택금융에 특화된 DB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관리와 정책 설계 시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신용카드 연체 및 가계대출 등 여타 대출 연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이면서도 세밀하게 접근해야 함

주택담보대출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연령, 소득, 자산 계층별로 주택담보대출 이용 및 위험 특성에서 다른 특성을 보여 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택담보대출의 다양성 제고가 필요함

- 주택담보대출 이용목적이 주택마련일 경우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환방식에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 만기일상상환보다 연체율이 낮으므로, 실수요 기반의 자기주택마련 목적대출에 대해서 원리금분할상환을 확대함

-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용계약은 LTV 수준에 따른 자산계약이 DTI, DSR 등에 따른 소득계약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용계약이 규모와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규제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가구 변동폭이 다르며, 특정계층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책설계 시 정책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정책제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제안은 금리, 상환방식, 기간,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위험 부담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소득, 자산, 연령 등 가구의 특성에 맞추어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임

- LTV 규제는 주택가격 안정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DTI 규제는 취약계층에 완화 적용하되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 DSR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용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표 계산, 기준 설정 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음
- 취약계층의 경우 금리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출금리 스프레드 상한,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위험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대출, 1주택자의 이주에 따른 주택교체 수요를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LTV 규제는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Policy Directions for Re-establishing Land Use Management System in Rural Area



연구책임 김승중 | 연구진 최수, 이형찬, 조판기, 강호제, 김동근, 최명식, 안승만, 정승혜, 류종현, 문채, 박인권, 서순탁 | 기본 17-09 | 150면

연구목적

그동안 비도시지역은 경제성장기의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도시용지를 공급해왔으나 저성장, 인구감소 및 도시화를 정체 등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화됨

- 신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국토면적 대비 11.2%인 보호지역 면적을 2021년까지 17%로 확대할 계획임
-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농어촌 취락 인근에 공장이 난립하는 등 토지이용 간의 충돌이 발생함

따라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실태를 점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계획, 관리수단 및 관리권한 등을 분석하고, 비도시지역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재정립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비도시지역은 개발가능 용도지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고, 농·산지 등 보전용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토지이용 간의 충돌 및 소규모 분산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 계획체계, 이용허가체계 및 관리권한은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계획체계상 비도시지역에 대한 공간관리 기능이 미미하고 성장관리방안을 통한 비도시지역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시·군계획과 농촌계획의 연계성이 부족함
- 이용허가체계상 토지이용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개발과 보전의 원칙과 기준이 부재하며,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손실보전이 부재한 실정임
- 토지이용허가는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권한과 관리주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농산지 보전에 한계가 있음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3대 기본방향(개발과 보전의 조화,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유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과 농·산지의 등급화 추진 및 규제와 손실의 보전 등 15대 추진과제를 제시함

정책제안

첫째, 용도지역 중심의 토지이용의 틀에서 벗어나 공간계획을 강화함

- 농·산·여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취락지구는 용도지구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선별 관리하며, 마을협약을 통한 용도지구 지정신청으로 마을 인근에 공장·상업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함

둘째, 개발과 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함

- 보전이 필요한 농·산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농·산지 등급화를 추진하고, 보전이 필요한 농·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부담금을 증액하여 환경훼손에 따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

셋째,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허가 등의 권한을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용도지역 지정목적과 행위제한이 유사한 용도지역은 지정목적에 맞게 재조정하고,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용도지역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함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

Housing Welfare Programs to Enhance Housing Stability and Relieve Housing Cost Burden for Newly-weds



연구책임 박미선 | 수시 17-23 | 86면

연구목적

- 경제적 불안정, 육아 부담 및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젊은 층의 결혼 급감
 - 최근 10년간 젊은 층의 결혼건수가 감소하고 출산율도 낮아지는 사회현상이 지속됨
 - 특히 초혼 부부는 2011년 25.9만 건에서 2015년 23.8만 건으로 지속감소 추세임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은 저출산 및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비와 깊이 연관된 사회적 이슈이고, 정부에서도 주택정책 차원에서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함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신혼부부의 주거소요를 반영한 단기 및 장기 주거지원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수행함

연구결과

신혼부부는 2015년 기준 연간 29.4만 가구이나 점차 그 규모가 축소 중임

신혼부부의 주거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결혼제도에 편입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부모, 제도권의 금융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입하므로 상대적으로 점유형태나 주거유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역으로, 결혼에 진입하기 위한 장벽이 높음을 의미하고, 주거비 마련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청년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내포함

유자녀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급격히 하락함

- 신혼부부는 맞벌이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하여 아내가 육아를 전담하면서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급변함
-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과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함

신혼부부는 주택자금을 부모지원 7,900만 원, 금융기관 대출 8,080만 원으로 마련하고 결혼 이후 유자녀 비율이 증가하면서 맞벌이가 급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자비용 경감, 자녀양육 편의시설, 적정 규모 주택 등이 필요함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은 주로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전세자금

의 저리 대출방식으로 양분되며 지역 특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신혼부부의 인식조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게 인지하고 있어 차질 없는 정책추진이 필요함

- 주변환경 전체적으로는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체육·보육·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유자녀 가구는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직장거리 측면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주택단지 내 시설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무인택배·락커 시설에 대한 보안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함

정책제안

본 연구에서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부터 거주 중, 퇴거 및 이동 등 주거이동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의 필요성과 원칙을 설정하고,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함

- 첫째,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시급성과 주거소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설정하고, 주거사다리 강화 및 신혼부부가 선순환되는 구조로 신혼부부용 주거단지 건설이 필요함
- 둘째, 자녀 양육에 따른 인센티브와 자녀수 증가에 따른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면적 확대를 위한 순환체계 마련이 필요함
- 셋째, 장기적으로 혼인신고라는 제도적 틀보다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생애최초주택 구입의 틀 속에서 포용적으로 접근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부응하는 지원이 필요함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s Vacant Housing Policy

연구책임 강미나 | 연구진 김근용, 김혜승, 김은란, 임은선, 이경주, 이동현, 박헌춘, 김대욱 | 기본 17~14 | 257면



연구목적

인구증가율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택보급률 100% 달성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난 빈집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

- 통계청의 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향후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국의 빈집은 2010년 79만 호에서 2015년 107만 호로 급증하여 총주택수 중 6.5%에 이룸(2015년 주택총조사)

빈집은 주택시장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방치될 경우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인구감소와 주택노후도에 따라 빈집 발생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함

본 연구는 빈집 현황과 관련 법제도 분석, 영국과 일본의 해외사례, 국내 사례지역(대구시와 전주시)의 빈집에 대한 공간분석을 통하여 빈집 발생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 지역 내 주민의 의견을 통합하여 빈집의 예방, 관리, 활용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빈집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가 법률마다 상이하고 빈집에 대한 통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빈집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는 2001년부터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시작되었고 농어촌 외 지역의 빈집 정비는 2016년 「건축법」 개정,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 그러나 소유자의 빈집 방치에 대해 정부가 강제할 법적 수단이 미흡하고, 정비사업구역 지정과 해제로 인해 빈집이 발생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음

대구시와 전주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빈집의 발생요인을 파악한 결과 빈집 발생요인을 빈집 건물특성, 부지특성, 근린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의 4가지로 유형을 구분함

- 건물특성(30년 이상 건물수, 지붕 불량 건물수, 1층 건물수), 부지특성(접도율, 부정형 필지, 평균표고, 평균경사), 근린특성(총건물수, 주변

빈집수, 공원까지의 거리, IC까지의 거리, 관공서(시청/구청/도청)까지의 거리, 사회경제적 특성(평균연령, 평균지가, 평균소득분위)

GIS 중첩분석을 수행하여 빈집 발생요인 유형별로 시사점을 제시함

- 첫째, 물리적 특성에 의한 쇠퇴가 뚜렷한 지역의 경우, 양호한 주거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두어 쇠퇴요인만을 개선하기 위한 수복형 개발
- 둘째, 부지특성으로 인하여 쇠퇴가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개별 주택단위의 보수 및 수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재개발 방식을 적용
- 셋째, 근린특성으로 인한 쇠퇴지역의 경우, 소규모로 분할된 필지들의 합필을 유도하여 건축협정 등을 통한 대단위 개발 방식을 적용
- 넷째, 사회경제적 특성 특히 고령화와 쇠퇴가 관련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한 지자체 수준에서의 인구유입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

정책제안

본 연구에서는 ① 빈집 증가 예방, ② 적극적인 빈집의 시장 유통, ③ 양질의 빈집에 대한 공적 활용, ④ 빈집의 적정 관리(개보수, 철거 등), ⑤ 빈집의 지속적인 실태조사 실시라는 5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빈집의 예방, 관리, 활용과 관련하여 빈집 관리와 정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제안함

- 빈집 관리 측면에서는 ① 빈집 관리 원칙 수립: 빈집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에게,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 빈집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빈집의 적정 관리, 사용 가능한 빈집 활용 촉진 ② 빈집 관리 추진체계 구축: 빈집 관리를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 마련, 빈집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구성, 즉 빈집 상담팀, 빈집 관련 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팀, 빈집 조사팀, 빈집 데이터베이스 관리팀 등 실행력을 갖춘 팀 구성 ③ 빈집 조사 및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빈집에 대한 정의 명확화, 정기적인 조사 시행, 빈집의 이력 관리
- 빈집 정비 측면에서는 ④ 빈집 정비를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정립 및 협력체계 구축, ⑤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방안 마련, ⑥ 도시재생 및 도시뉴딜사업과 연계한 빈집 대책 수립 마련을 제안하였음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전략

A Study on the Housing Stability of the Rent Household



연구책임 김민철 | 연구진 이태리, 이윤상, 김주영, 유승동 | 수시 17-18 | 68면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관행, 정보화 등의 기반을 살펴 보고 도입 가능한 기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 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등 관련 제도의 단계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연구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 전환 시 상한선보다 높은 비율로 월세를 낼 경우 세입자는 초과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문제는 이 상한선이 기존 계약에만 적용된다는 점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집주인의 과도한 빚 등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하는 정책 상품임

- 그러나 누계 기준 가입자수가 약 1만 3,000가구 정도에 그치는 등 전체 전세 가구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임

전월세 등록제도는 임대주택의 위치, 규모, 형태, 임대료 등의 정보를 통계화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함

-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셋값을 기록하고 있음
-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산에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음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택에 대한 모든 자료를 등록받기 이전이라도 표준임대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등록제가 완전히 구비되기 이전 단계라도 표준임대료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의 주택 유형, 면적 등에 대한 신규 계약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활용 가능한 통계로는 전세나 월세계약 관련 실거래가 자료로 2006년 도부터 관련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임

정책제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도와 관련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라는 측면보다 각각의 제도가 의도하고 있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접근함

- 부동산 경기상 하락국면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Cold Spot)을 대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함
-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함
- 임대료 상승률 상한선을 정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및 표준임대료 상승 압력(예상 상승률)에 대한 추정임

단계적 계약기간 연장

- 전세가격을 중심으로 보면, 충분히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더 이상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측면에서 최근의 전세/매매 비율은 향후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음
- 그런데 전월세 공급의 충분 정도와 전세가격의 상승압력이 지역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지역별로 시기를 달리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함

임차인 보호기반 강화

-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혹은 전월세 등록제도의 급격한 도입 이전에 임대차 거래상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전월세상한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지역별로 표준임대료 공시를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함

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Future of Construction Industry: Trends, Issues and Strategies

연구책임 안종욱 | 연구진 이승복, 조진철, 이현주, 이승훈, 임지영, 조정희 | 기본 17-17 | 140면



연구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소위 뉴노멀 시대가 도래함

- 이는 저출산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기업 환경을 바꿀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함

저성장시대 이전부터 건설산업의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고, 산업 간 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전략 수립 역시 미흡한 실정임

- 건설산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사회·인구·정치, 기술·환경·자원, 경제부문별 메가트렌드를 도출함
- 메가트렌드에 반응하여 산업의 수요와 공급 측면 및 인프라(토목), 건축, 플랜트 등 사업분야별 건설트렌드와 미래이슈를 도출함
-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및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미래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함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의 미래 이슈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도출하여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건설산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사회·인구·정치, 기술·환경·자원, 경제·경영 메가트렌드와 이에 반응하는 건설트렌드는 시장부문과 건설사업 분야별로 각기 나누어 정리함

- 생산 인구감소와 도시권 집중, 4차 산업혁명과 친환경 성장 요구, 저성장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을 건설산업의 메가트렌드로 도출함
- 생산 측면에서는 세계시장의 성장, 생산과정의 효율화, 시공기술의 변화, 숙련된 인력 부족 등의 건설트렌드에 주의를 요청함
- 소비 측면에서는 인프라의 수요 변화, 주거 및 시설 수요의 다변화, 지속가능성 요구의 증대 등 건설트렌드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인프라) 인구변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전략의 재편, 스마트시티 등 신기술의 접목, 신기술체제에 대응한 친환경 인프라 추진, 노후 인프라의 관리문제 등이 대두됨
- (건축) 인구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의 변화, 유지관리 시장의 확대, 에너지

지 생산 건축물, 융복합 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건축물 증가 등의 미래가 예상됨

- (플랜트) 고부가가치, 융복합, 지속가능성(친환경·안전) 등의 트렌드가 중요함

메가트렌드 및 건설트렌드 등 건설산업의 미래전망과 더불어 해외 건설 산업 전략의 사례분석을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전략을 기본방향과 세부전략으로 나누어 도출함

정책제안

저출산 고령화 및 대도시 집중 현상에 따라 건설 수요가 다변화되고 현장의 인력이 부족해질 예정이므로,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와 신사업을 창출하고 인프라 관리 기구를 운영함

제조업 및 ICT 융합 시공이 발전하고 있으며, 생애주기 전반의 생산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기술 융복합을 주도하고, 생산체계를 개선한 생산성 강화가 필요함

지속가능성장 요구의 증대에 따라 친환경·재난대응 건설의 발전이 예상되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자원을 준비함

글로벌 경쟁을 지원하고 생산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개발과 금융·정보 지원의 고도화를 위한 해외개발 전담기구가 필요함

지역기반 부동산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Research on Building Community-based Real Estate Development Platform to Manage Gentrification

연구책임 최명식 | 연구진 홍사흠, 전은호 | 수시 17-09 | 88면

연구목적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역단위 부동산 개발 사업들은 정부가 주도하여 개별 건축물(주택 정비 또는 공용 시설물)이나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 위주로 시행되었음

- 이로 인해 개발 사업의 성과가 지역 내에 남아 있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우발적 이익이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에게 사유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사회정의와 통합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됨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와 함께 여러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부동산 개발의 성과가 지역에 남아 채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지역의 활성화를 돕고,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지역 부동산의 공유(共有)적 개발과 관리를 통해 지역개발의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부동산 개발 방식을 제시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지역자산 공유형 도시재생사업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함

연구결과

지역자산화란 사적(Private) 혹은 공적(Public) 재산권에 귀속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을 공동체(Community)의 공유자산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용자의 토지이용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산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과정임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공공부문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사업으로, 이로 인해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생 전(前) 단계에서 '지역자산화'를 통해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 신탁방식은 이질적 성격의 부동산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 관리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과 사업 후 지속적 관리, 국공유지 등의 공간 활용에 용이함
- 부동산을 신탁방식으로 이전하여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므로 부동산

매입비용 등 사업비가 절감되어 소규모 개발에 용이한 사업구조가 만들어지며, 이익을 공유하는 주체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채투자자를 이끌어낼 수 있음

본 연구는 신탁방식을 활용한 지역 부동산 개발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신탁 가능한 부동산의 유형,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확보, 주민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 신탁회사 설립방안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음

- 특히 공동체의 소유권 확보 전략으로는 주민들이 소액 지분투자자로 지역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정책제안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산공유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방식이 필요함

현행 제도상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지역자산화를 위한 가칭 「지역자산화신탁법」 제정이 필요함

- '신탁형 CRC'나 '지역자산화신탁'을 통한 자산공유형 부동산 개발 플랫폼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도시재생구역 내에서 발생하게 될 우발이익의 제도적 환수방안이 필요함 (조세 및 신탁계약 활용)

지역자산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한 개발 및 관리 주체가 많아져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4) 국토인프라연구본부

-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한 광역 대도시권의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 국가전략도로망 지정 및 관리 방안
-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 도시재생을 위한 도로 공간기능 활용 방안 연구
-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도로망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도로기능평가를 중심으로
-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
-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자율주행차량에 대응한 첨단교통인프라정책 방안 연구: 도로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인프라 구축전략: 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지역성장을 위한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공급 방안에 관한 연구
- 차세대 첨단교통체계(C-ITS)의 도시지역 효율적 도입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연구
- 초고속교통망 시대에 대비한 「컴팩트 국토」 형성방안 연구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한 광역 대도시권의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Research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a Metropolitan Area by Utilizing Shared-Use Mobility

연구책임 김광호 | 연구진 오성호, 윤서연, 박종일, 김수현 | 기본 17-03 | 149면

연구목적

카셰어링, 공공자전거 등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도시권 광역통행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함

- 대도시권의 광역통행을 위한 접근수단의 운영 현황 및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함
- 공유 모빌리티의 수단별 서비스 요구사항 및 도입전략을 파악함
- 모빌리티 허브의 교통접근성 및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그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공유 모빌리티의 편의시설 도입전략을 수립함

연구결과

수도권에 속한 대부분의 교통축에서 광역도로의 혼잡이 심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이 필요함

-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을 위해 광역통행의 간선뿐만 아니라 지선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함
- 광역 대중교통의 역 및 정거장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한 지선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파악함

주요 모빌리티 허브의 교통접근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유형을 '고밀도 광역', '저밀도 광역', '고밀도 지자체', '저밀도 지자체'로 구분함

- 광역통행을 위한 환승 빈도 및 버스 접근시간을 고려하여 각 모빌리티 허브의 광역교통 측면 중요도를 평가함
- 모빌리티 허브별로 '거주 및 근무 인구의 공간적 분포', '토지이용 및 개발 패턴'을 분석하여 활동 및 서비스의 기회를 간접적으로 평가함

공유 모빌리티의 수단별 특성, 모빌리티 허브의 교통접근성 및 토지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안을 도출함

- '공유 모빌리티의 수단별 서비스 전략', '모빌리티 허브의 유형별 시설 도입 방안'을 도출함
- '광역 대도시권 접근성 평가체계 개선 및 활성화', '통행자의 수용성을

고려한 공유 모빌리티 시범사업 추진', '공유 모빌리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빌리티 허브의 활성화'를 핵심 추진방안으로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정책제안

'편도형 카셰어링의 확대를 위한 지원' 등 공유 모빌리티의 수단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전략과 '고밀도 광역 허브에서의 접근성 개선 시범사업 추진' 등 모빌리티 허브의 유형을 고려한 시설 개선 및 추가가 필요함

- 중앙정부는 '모빌리티 허브 접근성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공유 모빌리티 기반의 접근성 개선 시범사업'을 재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함
- 지자체는 모빌리티 허브의 접근성 분석결과를 해당 교통계획에 반영하고,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 및 주차정책 관련 조례를 개선함
- 대중교통 관리기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공유 모빌리티 기반의 접근성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카셰어링 주차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함

국가전략도로망 지정 및 관리 방안

A Study on the National Strategic Road Network Development and Management



연구책임 이상건 | 연구진 김상록, 백정환 | 수시 17-12 | 70면

연구목적

정부는 향후 SOC 투자 규모를 매년 6%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예정임 이에 보다 효율적이며 선택과 집중을 위한 SOC 투자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효율성, 전략성, 형평성, 안전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함

영국(잉글랜드)의 경우, 2014년부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전략도로망(Strategic Road Network)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음

우리도 기존의 현 국가도로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간선기능 중심의 전략 도로망 통합관리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전략도로망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지정 및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구결과

국가전략도로망은 '각 통행 거점 간 신속한 이동성과 안전성 그리고 환경성 등의 보장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도로망'으로 정의함

국가전략도로망(안) 선정절차는 관련 기초 데이터를 수집한 후, 교통량 수송실적 및 거점 연결성 확보에 기반하여 도로 분류 과정을 거침

- 교통량 수송실적에 기반한 도로 분류는 KTDB O/D 데이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정산 과정을 진행한 후, 산출되는 각 링크별 VKT를 활용하여 도로 링크 성능평가를 진행함
- 거점 연결성 확보에 기반한 도로 분류는 각 통행유형별 거점을 확인한 후, 최단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통하여 각 거점 간 최단경로를 산출함
- 각 분류 절차에 따라 채택된 도로 링크를 취합 및 보장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전략도로망(안)을 도출함

최종 국가전략도로망(안) 도출 결과, 전체 고속국도, 일반국도와 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 등의 주요 도로 연장 3만 2,000여km 중 24.4%인 7,700여km의 도로가 채택되었으며, 이 도로망이 총 VKT의 55.8%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제안

국가전략도로망의 관리목표는 궁극적으로 5C(Congestion, CO₂, Complain, Casualty and Connection) Freeway로서 교통사고 사망자, 환경오염, 혼잡, 불평 등이 없고 ITS 등을 통해 원활한 정보소통이 가능한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것임

전략도로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포장, 교량 등의 주요 시설물을 포함한 도로시설 관리에 자산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음

또한 도로의 기능에 따른 성능평가를 통해 도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예측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공급위주의 도로정책에서 탈피하여, 정확한 교통수요예측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미리 예방(Prevent)하는 신개념의 도로정책이 필요(from 'Predict and Provide' to 'Predict and Prevent')함

보다 폭넓은 기초자료와 빅데이터 분석기법 및 활동기반 모형 등 과학적인 방법론을 개발하여 국가전략도로망을 선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도로관리체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SOC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전략도로망 개념의 도입을 통해 기존 도로등급에 의한 관리 체계에 대하여 향후 개선·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Effective Management Strategies of Central-Local Government Matching Funds Projects in Road Construction Division



연구책임 김호정 | 연구진 배준구 | 수시 17-31 | 91면

연구목적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지역 발전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함

국토교통부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평가항목의 하나인 국고보조사업 실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 국고보조 대상사업은 국가부담인 국비에 대응한 지방비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실행률이 미흡함
- 국가가 수립하는 SOC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본 연구는 지방분권 강화 및 지자체의 재정투자사업의 자율화에 대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협력적 추진과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결과

도로교통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대도시권 혼잡도로, 광역도로, 산업단지 진입도로사업 등으로 도심이나 시·도 연결지역 등 도시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 측면 사업이 이에 해당됨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으로 국가는 총 사업비 분담 사업비를 정률 기준 지원, 지자체는 사업시행, 지자체 사업비 분담, 유지관리 등을 부담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도로교통부문 사업계획을 국가가 수립하여 지자체의 여건 반영이 미흡함

-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 대도시권 혼잡도로 계획 등 계획수립 주체가 국가인 경우 지자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함
-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이전 등 사업 확정 직전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하므로 지자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사업 반영에 한계가 있음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진 등으로 사업예산 실행률이 미흡함

- 국고보조금에 대한 실행률을 제고를 위해 국가는 국비 교부요청 등을

조기에 수행하였으나, 지자체는 지방재정 열악 등의 이유로 지방비 매칭이 부진함

- 또한 총 사업비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등으로 용자보상비가 급상승하고 그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집행률이 부진함
-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국고보조사업 완공 이후 사후평가 제도 미시행 등
- 국고보조사업의 특성상 국토교통부에서는 설계완료 이후 지자체에 설계도면 등 일체를 이관함
 - 사업을 지자체에 이관한 후 공사과정의 적정성이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단계가 부재하며, 사업 완공 이후 사후평가 제도 역시 미시행됨

정책제안

본 연구에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국고보조사업의 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계획수립단계) 국가계획의 계획수립단계 조정 및 점검과 함께 지자체 의견수렴 및 사업확정단계에서 지자체의 '사업추진협약서(가칭)'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사업추진단계)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과정이나 완공 이후의 사업효과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제안함
- (사업관리·운영단계) 완공 이후 계획 및 설계단계의 내용과의 정합성 등을 지속 점검하고, 국고보조사업 대상 사후평가제도 운용지침 등 제도 마련을 제안함

도시재생을 위한 도로 공간기능 활용 방안 연구

Policy Suggestions for Enhancement of Road Space Function to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연구책임 이춘용 | 연구진 고용석, 김경석, 이경환 | 수시 17-32 | 124면

연구목적

도로 공간기능은 「도로법」을 근간으로 하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최초로 도입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도로는 과거 자동차 중심의 이동과 접근을 위한 통행기능을 우선하였으나 국민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공공 공간에 보행, 문화정보 및 교류, 대중교통, 도시 녹화 등의 공간기능을 수용하여 다양한 도시 활동을 지원함
- 하지만 도로 공간기능은 도로 계획 및 설계 과정은 물론이고 도시재생 사업 단계에서 도로 공간을 엄격히 구분함에 따라 다양한 공간기능의 활용이 미흡함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근린생활의 편의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도로 공간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도로법」 및 도로계획 설계과정에서 도로 공간기능 활용은 매우 낮음

- 「도로법」에서 도로 공간기능에 관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도로 공간기능을 수용할 규칙의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획단계에서 활용할 도로의 횡단면 구성 등 활용 지침이 없음
- 더군다나 국가 또는 지방의 도로부문 중장기 비전과 전략에 해당하는 국가도로종합계획과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도로 공간기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함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사업 매뉴얼),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구 내 도로구역과 도로 공간기능 활용은 거의 고려하지 못함

- 사업구역 내 도로 공간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변 토지 또는 건축물과 일체적인 활용 전략을 수립하지 못함
- 뉴딜사업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전략은 공영주차장 확보가 우선되어 어린이 통학로 안전 향상에 대한 관심이 낮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

업기능 활성화 유형은 쇠퇴하는 도심에서 사람을 우선하는 도로 공간기능의 검토가 소홀하며, '도시 경쟁기반형'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에 따른 공간활용 전략보다는 주차, 대중교통 등 보제공에 국한하고 있음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뉴딜공모 사업의 실태 분석(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결과 도시 전체 차원의 접근보다는 사업지구 중심으로,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 동일한 사업지구 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도로 시설물 설치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의 정립이 시급함

정책제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제안은 사람을 우선하는 도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도로 공간기능 관련 법률의 개정, 도로 공간기능과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조기 시행임

- 도로의 통행기능 이외에 주변 토지이용과 도로의 기능별 위계에 따라 도시 활동의 장으로써 도로 공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함
- 「도로법」에 도로 공간기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도로 공간기능 활용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의 작성이 필요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도로 공간기능을 고려한 계획수립 지침을 작성함
- 또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도로, 도시, 교통부문의 연계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 및 도로 공간기능 통합 시범사업의 조기 실시가 필요함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도로망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도로기능평가를 중심으로



Strategic Management of National Road Network by Using Big Data: Focusing on Evaluation of Road Function

연구책임 박종일 | 연구진 이춘용, 오성호, 김종학, 김준기, 조남건, 이찬영 | 기본 17-10 | 151면

연구목적

SOC 투자규모 축소에 따라 도로투자 효율화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핵심 간선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능 중심의 도로관리체계로 개편이 필요함

- 도로관리체계 개편을 위해서 간선기능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며, 현재는 교통량을 제외하고는 간선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함
- 첨단교통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와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어 기존 교통량 기반 간선기능 평가의 한계 극복이 가능함

기능 중심의 도로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가도로망의 전략적 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새로운 간선기능 평가 방법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

- 특히, 빅데이터 기반 간선기능 평가지표의 개발과 실증분석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둠

연구결과

주요 선진국에서는 간선도로의 기능 제고와 유지관리체계의 강화 및 효율화에 중점을 둔 도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도로등급에 기반한 도로관리체계는 행정관리 측면의 효율성이 강조된 체계로 도로의 양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매우 효율적이었으나 점차 한계가 발생함

도로관리체계 개편을 위해서 새로운 빅데이터에 기반한 간선기능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차량의 이동궤적이 기록되는 내비게이션 데이터가 간선기능 평가지표의 개발에 매우 적합한 빅데이터임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간선기능 중 주행거리, 지역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는 6개 간선기능 평가지표를 개발함

- 주행거리 측면에서 기종점 총주행거리(VTL), 기종점 평균주행거리(AVTL), 통행거리 빈도분포(TLFD), 장거리 통행거리비율(LTR)을 개발하였고 지역 연계성을 측정할 수 있는 O/D Pair수, 내부통행비율(ITR) 지표를 개발함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1번 국도, 42번 국도를 사례선으로 선

정하여 간선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5개 실증분석을 수행함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간선기능 평가지표들이 주행거리, 지역 연계성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또한 종합평가를 통해 교통량만으로 간선기능을 평가할 때와 주행거리, 지역 연계성을 고려할 경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정책제안

빅데이터 기반 간선기능 평가자료는 간선기능 중 주행거리, 지역 연계성의 평가지표로 활용 가능하며 합리적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간선기능은 양적 측면 외에 주행거리, 지역 연계가 중요함에도 이를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본 연구의 VTL, AVTL, O/D Pair수는 주행거리와 지역 연계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다양한 성과의 측정과 다양한 시점의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내비게이션 데이터는 차량의 시공간 궤적이 모두 기록되므로 이동성, 신뢰성, 환경성, 안전성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성과 측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시간대별, 일별, 계절별, 연도별 등 다양한 시점의 모니터링 결과 제공이 가능함

사업시행의 근거자료와 사업시행 후 사후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현재 교통수요예측 방법론의 개선에 활용 가능함

- 교통사업 타당성 평가 시 또는 영향권역 정산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주말환산계수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



Development of Green Infrastructure Performance Index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연구책임 최재성 | 연구진 이상건, 김흥석, 임영태, 이재민, 강지훈, 박용신 | 기본 17-12 | 183면

연구목적

2016년 11월 196개 협약국이 참여하는 파리협정이 발효되었고,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개발도상국 최고 수준인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함

-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자발적 협약 체결, 목표 설정의 상향식 및 진전원칙, 비종료시점 등의 특징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국가 중심의 탄소감축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지자체,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참여자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함
- 2018년 예비점검을 시작으로 5년마다 이행점검 시 다양한 참여자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및 측정·점검의 평가체계 실현수단이 부족함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참여자의 탄소감축 노력을 반영하는 그린인프라성능지수의 개발을 통해 성능 향상과 연계된 탄소감축량을 도출하고 법·제도 개선 및 성능지수 활성화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함

연구결과

국내 16개 시·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7년간 연평균 국내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2억 6,700만 톤의 CO₂를 배출, 93.8%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부문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함

성능지수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주요 영향요소와 탄소저감 정책별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4가지 평가항목을 평가, 실증분석과 미래구축 대상으로 최종지표 분류, 피어슨 상관분석 등을 통해 핵심 평가지표의 도출과정을 체계화함

실증분석을 위해 2015년 기준으로 구축된 핵심 평가지표 데이터와 평가요소별 AHP 가중치 결과를 이용해 16개 지자체별 그린인프라성능지수를 산출함

- 전반적으로 54.5%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전환부분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 지자체가 종합지수 산정 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제주, 대구, 경기 등의 순위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2015년 기준 그린인프라성능지수의 지자체별 평균은 80점이며, 2030년 100점을 목표점수로 탄소감축 잠재량을 추정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지자체의 성능지수 1점 향상 시 탄소감축량은 약 2만 2,559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정책제안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능지수 활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국가 감축량 목표 점검 시 활용방안 측면의 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함

- 지자체별 그린인프라성능지수 순위 및 등급 결과를 활용하여 예산조정과 연계된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및 미흡한 지자체 패널티 부과 등의 성과체계를 도입함
- 성능지수를 국가 감축목표 달성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에 활용하고 9개 핵심 평가지표를 2023년부터 5년마다 글로벌 이행 점검 시 이용하는 인벤토리로 구축함
- 성능지수를 연간 단위로 산출하여 국가 그린인프라 부문의 지속적인 평가체계 개선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도출에 활용함
- 평가지표 및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녹색성장법」과 연계된 시행규칙 법제화, 지자체 조례에 녹색성장 추진체계 및 관련 업무분장을 규정함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An Evaluation of the Impacts of Autonomous Vehicles on Use of National Territory

연구책임 이백진 | 연구진 육동형, 김광호, 조창현, 장기태, Tom Bellemans, 조성진 | 기본 17-15 | 172면



연구목적

교통기술 발달에 따라 자율주행차, KTX 등과 같은 혁신적인 교통수단들이 도입되면서 우리의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국토공간에도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자율주행차가 미래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이 있으나 주로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영향을 개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량적으로 실증분석하고, 장래 자율주행차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토 및 교통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연구결과

자율주행차 도입과 확산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및 실증분석 수행

- 1단계: 시나리오 설정
 - '선도적 확산 시나리오'는 2020년의 시장점유율 70%, '수동적 정체 시나리오'는 30%로 설정
- 2단계: 도로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효과
 - 자율주행차 도입 시 긍정적인 경우 약 1,059km(서울·경기도로 약 1.9%)의 차선수 감소가 가능해지고, 연속류의 고규격도로일수록 자율주행차의 도입효과가 크며, 자율주행차 보급이 낮아도 일정부분 효과가 발생함
 - 미시적 교통류 분석결과 신호교차로가 많은 도시부는 유의한 도입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신호교차로에 의한 교통흐름의 단절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혼잡완화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임
- 3단계: 교통수단 이용행태
 - 교통수단 선택행태 분석결과, 자율주행차 도입은 이용자들의 기존 시간가치를 약 25%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 국내에서 개인형 자율주행차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4단계: 활동통행행태 변화

- 자율주행차 이용이 활성화되면 통근거리가 증가하고 수도권 외연이 확대되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반면 여전히 쇼핑, 교통, 통학, 기타 목적의 단거리 통행이 증가하여 향후 도심부의 차량집중 등 혼잡이 가중됨
-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지역별 통행시간 절감효과의 차이가 크고, 특히 절감효과가 낮은 지역은 또다시 지역 간 교류가 감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정책제안

첫째, 법정계획(국토, 도시 및 교통 등)을 수립할 때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교통 기술발전을 적극 수용하고, 중장기 영향평가를 통한 반영 노력이 필요함

둘째,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도로 차선수 감소가 가능한 곳을 선제적으로 선정하여 중장기적으로 해당 도로 공간의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셋째, 자율주행차 자원과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속도로나 도시고속도로 등 연속류의 고규격도로를 우선하고 도시부도로로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임

넷째,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응한 교통신호와 실시간 연계 등 도시부도로 첨단화가 시급함

다섯째, 중장기에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수도권의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고속도로 중심 자율주행차 연계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고, 서울 도시부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접근성 개선 노력이 필요함

자율주행차량에 대응한 첨단교통인프라정책 방안 연구: 도로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mar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Policy to Respond to the Age of an Autonomous Vehicle

연구책임 오성호 | 연구진 박종일, 윤태관 | 수시 17-05 | 73면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량과 일반차량의 혼재 시, 기존 도로·교통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자율주행차량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제시를 목적으로 함

- 자율주행차량 도입 비율 및 시기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자율주행차량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함
- 제시된 정책을 통해 자율주행차량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서비스 제공은 국민 행복을 증진시킴

연구결과

자율주행차량의 도입 비율에 따라 제1단계(도입초기), 제2단계(활성화), 제3단계(안정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 적절한 첨단교통인프라 정책을 제시하여 자율주행차량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제1단계(도입초기)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일반차량의 혼재 주행으로 인해 자율주행차량의 특성 중 안전성과 편의성은 확보가 가능함

- 자율주행차량 도입초기는 기존의 도로인프라 첨단화를 위해 도로시설물, 교통상황정보 수집장치, 정밀전자지도 기반 동적정보시스템(LDM), GPS 지역수신·제어국, 운영센터를 구축하여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을 지원해야 함
- 짧은 차두거리를 유지하며 군집주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가·감속 및 차로변경이 감소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2단계(활성화)의 교통류 분리 사전 준비를 위해 지정차로제 또는 갓길차로 주행을 허용하는 등의 정책검토가 가능함

제2단계에서는 자율주행차량 전용차로 정책을 제시하며, 서비스 수준 산정 결과에 따라 자율주행차량의 비율이 25%, 38%가 되었을 때, 각각 일반차로의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됨

- 또한, 교통류 분리로 인한 자율주행차량의 효율성 및 친환경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나타남

제3단계(안정화)에서는 제2단계에서 기존 설계도로의 분리된 차로를 운영하여 초고속성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형 개량된

전용도로 구축안을 제시함

- 이는 향상된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물류비 감소 등의 장점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됨
- 전용차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류 와해현상, 기존 버스전용차로와의 상충문제, 위반차량 처리문제 등에 대해 제시하였음
- 전용도로 구축 시, 거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 및 기존 도로와 연계성 확보문제, 고속으로 인한 사고 심각도 증가 등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전용도로 구축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며, 향후 충분한 정책적 판단이 고려되어야 함

정책제안

자율주행차량 도입단계에 따라 도입초기-활성화-안정화의 3단계로 구분하고 선제적 대응방안 추진이 필요함

- 도입초기단계: 기존 도로인프라의 첨단화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지원함
- 활성화단계: 자율주행차량의 비율이 일정 수준(전체 통행량의 1/3 수준)을 넘어선 단계로, 자율주행차량을 일반차량과 분리(예: 전용차로 운영)하여 도로 용량 극대화 및 도로이용 효율 향상을 통해 교통정체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기대함
- 안정화단계: 자율주행차량의 도입이 안정화되고 초고속도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을 경우, 향상된 설계속도(예: 제한속도 160km/h)의 신규 도로인프라(자율주행 전용도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검토 및 제도보완이 요구됨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인프라 구축전략 : 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Smart Infrastructure for the Enhancement of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Focusing on Innovation City of Korea

연구책임 이백진 | 연구진 차미숙, 임은선, 윤태관, 조창현 | 수시 17-13 | 69면

연구목적

인구감소와 고령화, 삶의 질 추구, 저성장 등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인프라에 대한 정책이 모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비해 제반 여건이 열악한 지방도시는 소외되기 쉽고, 장래 그 격차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됨

본 연구는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도시와 인접지역의 지역 간 연계협력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구축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함

연구결과

지역 간 연계협력은 네트워크 도시체계 관점에서 혁신도시와 인접도시의 고유기능은 공유하면서도 도시별 특화된 기능을 보유하여 보다 고차원의 도시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 간 통행자료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연계수준 현황 및 협력 잠재력을 진단함
- 강원원주 혁신도시권, 광주전남 혁신도시권, 전북 혁신도시권에 대해 분석하였음

(강원원주 혁신도시) '강원 원주시-강원 횡성군-경기 양평군-충북 제천시-강원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충북 청주시-강원 영월군'으로 구분, 지역 간 연계성이 높고 혁신도시가 위치한 강원 원주시의 중심성이 강함

(광주전남 혁신도시) '전남 나주-광주 광산-광주 남구'와 '전남 무안-전남 함평군-전남 영암군'으로 구분, 지역 간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전북 혁신도시) '전북 전주시'가 인접지역의 교류 중심에 강하게 위치한 점을 고려할 때, 전북 전주를 중심으로 인접지역과의 연계 강화 전략이 필요함

정책제안

전략 1: 정보통신(CT) 기반 정비

- 혁신도시와 인접지역의 ICT 기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 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 필요함

전략 2: '스마트인프라 공통 플랫폼' 구축

- 복지, 관광, 산업,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전략 3: '지역 고유자원 연계'를 위한 스마트인프라 구축

- 지역 고유자원의 공유 및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전략 4: 생활필수시설 공유와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인프라 구축

- 부족한 도시의 필수시설 공유로 시설 활용성을 제고함

지역성장을 위한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공급 방안에 관한 연구



Developing National Roadway Investment Strategies Considering Regional Economic Impact

연구책임 육동형 | 연구진 고용석 | 수시 17-29 | 118면

연구목적

지역별 도로 공급수준에 대한 합리적 평가의 필요성이 증가함

- 연장, 면적당 연장, 인당 연장과 같은 단순 지표를 통해 지역별 도로인프라의 공급수준 파악을 지양하고 해당 지역의 도로 교통수요에 적절한 도로 시설수준이 마련되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도로 공급수준 측정 지표를 개발 및 적용하여 지역별 도로인프라의 공급수준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지역별 도로인프라의 공급수준 파악을 통해 향후 도로인프라 공급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연구결과

도로인프라의 공급목적이 혼잡구간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시대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도로 공급수준의 평가를 도로인프라의 서비스 측면에서 조명하였음

- 도로인프라의 공급이 혼잡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대응으로 보았을 때, 도로 공급수준은 교통수요와 그에 대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도로 서비스수준 지표를 통해 평가되어야 함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도로인프라의 서비스수준 산정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별 도로 공급수준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었음

-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일대 주변 위성도시, 주요 5대 광역시의 도심부에서 도로 서비스수준이 매우 열악하며,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지역일수록 도로 서비스 수준이 점차 양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남
- 이외의 지역은 (강원도 대부분 지역, 전라남도, 전라북도 일부 지역, 경상북도 일부 지역) 모두 도로 서비스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도로 공급수준 지표와 지역발전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여 도로인프라 투자로 인한 공급수준 개선과 지역발전 간의 관계를 계량적 분석을 통해 파악함

그 결과, 도로인프라 공급과 이로 인한 서비스 개선은 총생산의 증가 측면에서 모든 지역에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 우리나라를 Hansen(1965)의 가설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로 공급수준을 기준으로 혼잡·중위·낙후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지역

구분별로 서로 다른 관계가 설정되는 것으로 분석됨

- 혼잡지역에서는 도로인프라의 절대적 총량의 유지와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위지역과 낙후지역에서는 도로인프라 공급량이나 도로 공급수준의 향상보다는 인구증가가 더 필요한 요소인 것으로 파악됨
- 지역유형 중에서도 혼잡지역보다는 중위 및 낙후지역에서 인구를 보다 많이 유치하는 것이 도로인프라 공급을 위한 투자나 서비스 개선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으로 밝혀짐

정책제안

도로 공급수준을 양적 시설수준 비교에서 벗어나, 공급의 결과인 서비스 수준의 비교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역별 도로 공급수준 평가가 필요함

- 도로인프라에 대한 지역별 공급수준 평가가 비교 기준에 따라 비밀관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정책 대응 방향이 부처별로 상이해지고 의견 차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급수준 평가 지표는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지역별 도로 공급수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대안 경로의 서비스 수준이 주 경로의 서비스 수준보다 매우 양호한 경우, 신설 위주의 투자보다는 대안 경로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수립이 필요함

도로인프라 공급의 지역별 파급효과가 차별적이므로 도로인프라의 지역별 맞춤 공급전략이 필요함

- 중위지역과 낙후지역의 경우, 선행적인 도로인프라 투자보다는 정주여건에 관한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건설하여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반면, 혼잡지역에서는 현재의 도로인프라 공급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관건임

도로인프라 공급의 역할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도로인프라 공급의 효과가 이전과 같은 생산성 증진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도로인프라 공급을 경제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도구로 설정하기보다는 중위 및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인구의 유지 및 유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역할 전환이 필요함

차세대 첨단교통체계(C-ITS)의 도시지역 효율적 도입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Ways How to Adopt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C-ITS) in Urban City
: A Case Stud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연구책임 윤태관 | 연구진 김광호, 박종일 | 수시 17-26 | 110면



연구목적

특정 도시에 적합한 C-ITS 서비스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제주 사례 연구를 통해 제주에 적합한 서비스 선정 및 세부 기술 구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C-ITS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말기 보급문제 해결방안과 기존 ITS 연계, 기상정보, 민간교통정보, e-Call 연계 필요성을 검토함

- C-ITS 서비스의 효과적인 수집과 제공을 위한 차량 단말기 보급 정책 방안의 제시가 요구됨
- C-ITS 단말기 보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존 ITS와 연계하여 교통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해야 함
- 이를 통해 도시지역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감소 및 사고비용 절감과 정체 감소로 인한 이동성 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연구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전국에 비해 교차로와 단일로의 차 대 차 사고 건수가 많고, 횡단보도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렌터카수가 증가하여 일반차량의 일평균 운행거리(44km)보다 렌터카의 일평균 운행거리(112.7km)가 긴 것으로 나타났고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률도 타 도시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대수(13.1%로 전국 1위) 등으로 인해 서울보다 더 심한 혼잡(오후 침두시, 통행속도 서울 도심은 시속 18.2km, 제주 시속 13.6km)을 겪고 있음
- 차량증가율이 주차면수 증가율보다 높고 한 대당 주차면수가 0.62면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월별 일기일수 현황 분석 및 보도기사 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눈, 강수, 안개 등으로 인한 도로 통제 및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음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보행자 충돌방지 경고 서비스, 노면상태·기상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한 서비스 구현방안과 렌터카 관리 지

원 서비스, 주차장 및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신규 서비스를 구축함

- 기존 보행자 충돌방지 서비스는 차량에게 보행자의 접근을 경고하였으나, 이를 고도화하여 보행자에게 횡단보도로 접근하는 차량 중 위험차량을 경고하는 서비스를 개발함
- 노면상태·기상정보 제공 서비스는 기존의 RWIS(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AWS(Automatic Weather System)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함
- 렌터카 관리 지원 서비스는 렌터카의 교통사고 및 고장 대응, 운행 자료 분석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함
- 주차장 및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는 주요 관광지 및 시설물에 접근하는 차량을 위해 인근 주차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차수요를 분산하여 정체 감소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정책제안

C-ITS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첫 번째 고려사항은 단말기 보급문제로, 국내외 유사 단말기 보급사례와 기존 C-ITS 단말기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함

- 24시간 동안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보급대수 및 차종을 고려하여 단말기를 고르게 보급해야 하며 V2V 서비스를 위해 최대한 많은 차량에 단말기를 배포해야 함
- 정부는 법제도 마련을 통해 단말기 의무 장착을 시행해야 하고, 차량제조사와 협업하여 비포마켓 형식의 단말기 보급을 장려해야 함
- 또한, 기존 차량 내 장치(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영상기록장치 등)에 통합하여 선택적 정보 제공 또는 민간통신사의 내비게이션 어플과 통합한 형식의 C-ITS 단말기를 개발 및 보급하여 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단말기 보급은 정부주도 방식으로 상용차에 보급하고, 일반차량은 시장주도에서 정부주도 민간지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함

또한, C-ITS 단말기 보급이 100%가 되기 전까지 효율적인 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해 기존 ITS와 연계하고 도로기상 데이터, 민간교통정보, e-Call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임

초고속교통망 시대에 대비한 「컴팩트 국토」 형성방안 연구



The Formation of Compact Territory for Super-High-Speed Rail Era

연구책임 김종학 | 연구진 변필성, 김준기, 고용석, 김상록, 김익기, 유한술, 송재인 | 기본 17-20 | 109면

연구목적

일본, 미국, 중국 등의 국가들은 각자의 기술력으로 초고속교통수단(열차)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개발 중이며 한국도 시속 400km의 해무(HEMU)를 개발함

해외 각국이 개발하고 국내 기술로도 개발한 초고속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국토공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없었음

초고속교통수단의 고도화된 연결성을 기회로 미래성장 저해요인인 저성장과 인구감소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국토발전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본 연구는 초고속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여건 변화 검토와 사례지역의 시간거리 및 교통권 변화 분석을 통해 국토공간의 압축적 이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거주, 통행, 소비활동을 인구, 통행발생량, 카드사용액 등에 대한 공간분포 변화를 통해 초고속교통수단 도입여건을 분석함

- 통행권역과 상권은 공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인구와 소비는 집중화됨
- 이는 교통인프라의 확충이 교류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소비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정책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시대별 국토이용 변화를 거주·이동의 분포 변화로 파악한 결과, 거주는 수도권 집중, 이동은 비수도권으로 확산하여 이동수요는 장래에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초고속교통수단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시간거리 감소효과는 시속 400km대 안에서 나타나 높아지다가 시속 600km, 시속 1,200km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하지 않으므로 주 수단의 통행시간 감소가 총 통행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에는 한계를 보임

연계환승으로 인한 통행시간 지연이 발생됨

- 연계환승에 많은 시간(출발지: 15분, 도착지: 15분, 총 30분)이 소요되어, 지역 간 통행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주 간선 교통수단의 통행시간 감소만으로 총 통행시간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정차역까지 접근시간을 줄이는 것은 지자체와 정부의 협업이 필요함
대도시 중 압축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대도시는 부산인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은 기존 고속도로망과 타 도시와의 연결성이 높아 경부철도축 속도 개선만으로 평균시간의 감소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부산의 경우 국토 끝단에 위치하고 있어 타 도시와의 접근성 개선이 높게 나타남
초고속교통수단 도입으로 대도시별 파급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
- 서울은 동남권, 부산은 수도권과 호남권, 대구는 수도권 북부, 충청남 도서해안, 대전은 동남권, 광주는 대경 동해안권 등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짐

정책제안

국토 크기에 적절한 초고속교통수단의 대안(속도)을 제시함

- 초고속교통수단의 컴팩트 효과는 34.1%(400km/h)~52.0%(1,200km/h) 수준이며, 현재 기술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속 400km 열차를 초고속수단으로 제안하였음

대중교통의 Last Mile Problem(접근, 환승) 개선 중요성을 제시함

- 주 교통수단의 통행시간을 단축해도 Last Mile Problem으로 인해 전체 통행시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지역 간 및 지역 내 통행품질 개선 노력 및 지역 내 고속교통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마련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음

컴팩트 효과 분석을 활용하여 기존 효율성 위주의 평가방법을 개선함

- 예비타당성평가는 해당사업 영향권 전체의 편익만을 제시하고 있어 특정 도시의 발전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압축효과 추정방법을 통해 해당도시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을 제안함

5) 국토정보연구본부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
- 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
-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를 위한 GIS 활용방안
-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차세대 국가공간정보 전략 연구
- 지적재조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방향 연구
- OECD 지역정책 협력을 위한 기업생멸 동향분석 연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



The Study on the Strategies for Linking and Utilizing Realistic World and Virtual World agains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연구책임 임시영 | 연구진 사공호상, 임용호, 오창화 | 수시 17-08 | 91면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계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을 핵심 플랫폼으로 인식하며 진행 중임

- 미국,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CPS 개념을 국토공간단위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 Virtual Singapore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CPS를 구축하여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으며 미국, EU 등도 CPS 관련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토분야 CPS 적용 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함

- CPS 적용사례, 국토분야 CPS 적용 필요성, 국토분야 CPS 적용 개념 및 시나리오, 국토분야 CPS 적용을 위한 전략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결과

국토분야 CPS 적용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분야도 선제적인 도전이 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발전 속도는 그간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 대응방안을 가능케 함
- 가상국토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정책방안을 가상국토에 적용하고 실험해봄으로써 효과성 높은 정책선택이 필요함
-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토관리 대상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은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갈등비용 최소화가 기대됨

국토분야 CPS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도출함

- 현실공간은 공간을 구성하는 객체, 객체 간 상호 관계로 표현되어야 함
- 가상공간은 현실공간과 유사, 동일하게 객체와 객체 간의 상호 관계 및 행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연계는 현실공간에서 취득되는 데이터와 가상

공간에서 분석되는 결과를 피드백으로 구성하며 피드백은 곧 현실객체에 대한 제어임

- 구성요소는 ① 현실 문제, ② 현실 데이터, ③ 현실 모델링, ④ 데이터의 전달, ⑤ 가상모델(가상화), ⑥ 의사결정 및 자율제어임

위의 개념을 토대로 국토분야 CPS 적용을 위한 전략방안을 3가지로 도출함

- 국토분야 CPS 적용 문제 발굴 필요: 기존 문제 해결에 기반한 분야의 발굴, 혁신적 마인드에 기반한 문제의 발굴 필요
- 국토분야 CPS 적용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 분야별, 문제별 CPS의 구현, 세부 기술의 고도화, 테스트베드 검토, 제도 및 정책 정비 필요
- 국토분야 CPS 적용을 위한 체계적 접근: 국가차원의 장기플랜 수립, 국토분야 CPS 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필요

정책제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제안은 국토분야의 CPS 적용이 시도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관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을 제안함

- 국토분야의 CPS 적용을 위해 예산의 확보, 거버넌스의 구축 등 무엇보다 정책적 추진 의지가 중요, 빠른 시간 내에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고 성공사례를 확보해야 함
- 공간에 기반하는 점과 향후 전 국토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기적 관점의 견지가 중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목표를 설정 및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함
- 국토분야 CPS 적용을 위한 문제 발굴과 국토분야 CPS 적용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이 시급하게 필요함
- 국토분야 CPS 적용을 위한 종합적 기술기획 연구, 국토분야 CPS 적용을 위해 커스터마이징된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함

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Opensource Geospatial Policy to Improve Global Geospatial Competitiveness Industrial Revolution

연구책임 강해경 | 연구진 김대중, 김동한, 서기환, 임용호, 임거배, Maria A. Brobelli, 임세호 | 기본 17-07 | 162면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환경이 '참여'와 '공유'로 변화하며 오픈소스(Opensource)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혁신전략으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오픈소스는 상대적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고 원천기술이 부족하더라도 공개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함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지능정보화 사회의 참여·개방 기술수요에 대응하고 오픈소스 공간정보 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기회 및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오픈소스 전략을 공간정보 분야에 특화하자는 정책연구임

연구결과

오픈소스란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시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모든 기술을 말함

국내외 오픈소스 정책 및 시장동향을 조사한 결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첨단 IT 분야에서 오픈소스 시장은 급성장 중이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세계 오픈소스 시장규모는 지난해 약 900억 달러, 국내 오픈소스 시장규모는 약 1,800억 원이며 오는 2020년까지 연 15.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산업 성장률 약 3%, IT서비스 시장 성장률 약 5.3%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유럽연합은 연합정부 내부의 오픈소스 사용을 장려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역시 기업의 오픈소스 기술개발을 적극 독려 중이며, 이외에도 칠레와 몽골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비용절감 등을 위해 오픈소스를 도입하였음

- 우리나라 정부도 공간정보분야 오픈소스 정책·전략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공간정보(SW분야) 기업체의 20%를 조사한 결과, 91.2%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오픈소스

공간정보 기술개발 지원을 시작했지만, 라이선스 준수 의무화나 컨설팅 등 별도의 법제도·컨설팅 조직 운영 등이 아직 미흡하였음

- 국내 공간정보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공공사업에 기술을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검사받지 않은 경우가 약 77% 이상으로 조사되어, 라이선스 미준수에 따른 법률분쟁 등 잠재적 위험이 높음
- 이에 해외 국가들처럼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위험을 완화시키는 정책대응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공간정보기업은 사업에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비중은 높지만, 오픈소스 기술개발에 참여하거나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핵심인력의 비중은 작았는데, 기술종속성을 탈피하고 핵심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고급개발자 양성이 필요함

- 오픈소스 공간정보 41종의 개발자(Contributor)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인은 3명이 4종의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반면, 미국은 32명이 19종에, 일본은 10명이 5종에 참여하여 한국의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 기술종속성을 탈피하고, 핵심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고급개발자 양성이 필요함

정책제안

향후 참여·공유에 대한 기술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인지도가 낮은 국내 공간정보 기업이 글로벌 인지도를 갖춰 시장경쟁력 높은 고품질 오픈소스를 선점할 수 있도록 크게 4가지의 정부 지원을 제안함

- 첫째, 공간정보법 및 전담 정부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간정보 관점에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
- 둘째, 국가 R&D 성과물의 공개 전환 및 오픈소스 R&D 비중 확대 등 오픈소스 공간정보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정책 추진
- 셋째, 오픈소스 기술개발과 병행한 핵심인력(고급개발자 등) 양성
- 넷째, 공공부문 기술도입 시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의무화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Innovative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Policy in the Big Data Era



연구책임 임은선 | 연구진 황명화, 오창화, 변필성, 김대중, 김동한, 김종학, 박미선, 서기환, 차미숙, 이호상, 안성희, 여유희 | 수시 17-07 | 120면

연구목적

국민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빅데이터의 도입이 필요함

- 정책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통계는 생활권 단위 또는 그 이하의 지역 현황과 이슈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국민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는 데 제약이 많음
- 각 부처와 지자체는 정책지표 또는 통계자료의 정밀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생산방법과 서비스 개선에 힘써왔으나 시·공간적인 타기팅에 한계가 있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타운,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국토정책 차원에서의 활용을 위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임

- 인구, 산업, 문화, 교통 등 각종 국민생활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토의 진단과 모니터링 등 정책수립 과정을 과학적이고 증거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함

지능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풍부해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기반의 국토정책을 추진하는 방향과 추진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연구결과

혁신방향

- 혁신 방향1: 국토공간에 IC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국토에 대한 비전 정립
- 혁신 방향2: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 혁신 방향3: 빅데이터 기반 국토 PDCA 체계 강화 및 정책 프로세스의 표준화
- 혁신 방향4: 데이터 기반의 협력적 국토정책 의사결정 방식 도입

국토·도시 정책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

- 활용전략1: 동적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선제적 국토경영전략'

- 활용전략2: 지역교류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융합형 지역특화전략'
- 활용전략3: 국민수요와 체감을 반영한 '소통·협력형 도시재생전략'

정책제안

본 연구에서 향후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함

- 빅데이터 융합 실용화사업(패스파인더 프로젝트) 제안: 인구 및 생활인프라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 생활취약지역 전망,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주거취약계층 이동 전망,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 모니터링, 지역의 소비 변화, 기업 간 거래변화 등 경제활력 변화를 모니터링,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반응 및 체감도 모니터링
-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혁신 환경 마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진단 및 모니터링 제도 도입, 빅데이터 기반 국토이용 인벤토리 구축 및 공유
-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품질 개선: 국토진단에 활용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및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고품질의 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국토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선, 국토 빅데이터 전문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
- 국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R&D 강화: 공간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촉진,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제 개선, AI, VR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국토분야에 접목하는 R&D 강화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를 위한 GIS 활용방안

A Study on the Using GIS for the Advanced Industrial Complex Permit



연구책임 정문섭 | 연구진 김성희, 권대환 | 수시 17-35 | 80면

연구목적

GIS를 활용한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 체계 구성

-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체계를 구성하여 산업단지 관련 대국민 서비스 개선, 산업단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산업단지 통계의 신뢰성 확보 등을 촉진함

산단정보체계의 연계촉진 및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

- 산업입지 정보망 및 공장설립지원 시스템 등 시스템 연계 활용방안과 「산업법」, 「특례법」 및 「공장설립법」 등의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

연구결과

GIS 기반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체계 제시

- 선진화 개념: 투자분석, 승인신청,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착·준공, 관리 등 전반
- 투자분석: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개발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어떤 지역에 산업입지를 확보하여 지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및 투자 분석을 통하여 투자방향서 등을 작성하고 CD로 지정권자에게 인터넷으로 제출함
- 승인(변경) 신청: 민간기업 등은 사무실에서 산업단지 지정(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 번의 클릭으로 지정권자에게 제출함
- 관계기관 협의: 산업단지 지정서 제출 및 접수, 관계기관 협의·검토·인허가에 이르는 민원처리 과정을 정보화하고 인허가 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 인허가 및 통계자료: 지정권자는 민간기업 등 승인 결과를 실시간으로 통보(전자문서, SMS 등)함

선진화를 위한 추진과제

- 관계기관 합동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목표설정
- 「산업법」, 「특례법」 및 「공장설립법」 등의 관련 법제도 정비
- 개발지원 시스템, 인허가 시스템, DB구축 및 인프라 등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음

선진화를 위한 실현방안

- 정보화전략계획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연계·통합관리 시스템을 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단계적 개정 방안이 필요함
- 산업단지 인허가 증가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융복합 GIS 기반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및 산업계의 산업단지 행정업무 간소화를 지원함

정책제안

GIS를 활용한 산업단지 인허가 관련 시스템 정비

- 산업화의 최일선인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생성 및 재생을 위하여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 수요자 간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산업단지 관련 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이 필요함
- 법제도의 개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정비, 연계 및 통합에 필요한 제도정비가 필요함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차세대 국가공간정보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Strategies for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연구책임 사공호상 | 연구진 임시영, 성혜정, 김민수, 이지영, 임영모, 최형환 | 기본 17-18 | 136면

연구목적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과 같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서로 융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고 있음

- 물리적 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융합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공간정보의 기능과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음
-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차세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정보 정책 수립과 R&D사업 추진전략을 마련 중임

본 연구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2030년을 목표로 중장기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인문학, 공간데이터, 정보통신의 관점에서 공간정보의 미래를 전망하고, 지능정보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가공간정보 전략을 제시함
- 차세대 공간정보의 개념과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 기술개발, 서비스부문의 전략을 제시함

연구결과

공간정보는 지도와 위치(GPS)의 형태로 온오프라인 서비스, 위치 기반서비스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내재화됨으로써 '조용한 기술(Calm Technology)'로 발전하고 있음

지능정보사회에서 공간정보는 장소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통합하는 기능,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콘텐츠 기능, 활용분야와 융합을 통한 가치창출, 물리공간과 사이버공간을 연결하는 플랫폼 등으로 기능이 확대될 전망임

인문학적 관점과 공간데이터 및 관련 기술의 관점에서 공간정보의 미래를 전망한 결과 실제공간과 가상공간의 융합, 공간정보와 초연결 및 지능기술의 융합, 사람 · 시간 · 공간 각 요소의 간극 축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공간정보는 현실세계를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구현하는 수단과 현실세계

와 가상세계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플랫폼 그리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정책제안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발전할 것이며, 공간정보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임

차세대 국가공간정보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을 담당하는 '디지털 트윈 공간(Digital Twin Space: DTS)'으로 발전해야 함
DTS는 현실세계의 물리적 환경과 똑같은 가상 환경을 말하며, 물리적 환경과 연계된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실세계를 모니터링하거나 문제를 분석하고 동시에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세계에 반영함

스마트시티나 스마트사회는 이와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며, 공간정보는 물리적 환경을 가상 환경으로 구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양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임

DTS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 간 합의에 의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국가가 모든 데이터를 구축 및 제공하던 종전의 방식으로는 DTS를 효과적으로 구축, 유지관리, 갱신할 수 없으므로 민간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

DTS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시민 등 다양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개방적 생태계를 조성함

제6차 국가공간정보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공간정보 R&D 기획 시 DTS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기관 간 일관성 있는 상호 조율과 협력을 추진함

지적재조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방향 연구

A Study on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for Cadastral Resurveying



연구책임 김대중 | 연구진 황명화, 임시영, 임거배, 김영민, 홍성언 | 수시 17-22 | 105면

연구목적

국토교통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반복적인 민원발생, 사업지구 선정의 어려움, 지적불합치 경계결정의 어려움, 경계변경에 따른 면적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 산정의 어려움, 예산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사업완료가 어려운 상황임
-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추진방식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축적되고 있는 자료, 경험, 지식을 빅데이터로 축적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임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형태를 살펴보고,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정 및 생산자료 현황을 검토하고, 현행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예산지원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사업지구 선정의 문제, 경계설정 방식의 문제, 조정금 산정 부과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위의 문제점들을 인공지능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술의 개념과 여러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아래의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음

- 공공부문의 인공지능기술 도입은 아직 드물지만 민원대응 및 노동력 부족에 따른 업무 중심으로 시험 도입 중인 상황임
- 학계 및 민간부문에서 활발히 개발 중이고 실용화 시도 중인 토지경계선, 도로선, 지형지물 윤곽선 자동 추출 및 각종 예측기법은 지적재조사 업무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맞춤형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노력이 필요함

- 사진, 위성영상, 음성녹취 자료 등 새롭게 구축 가능한 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하는 검토가 필요함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과정을 계획수립, 의사결정, 민원대응, 평가의 4가지 지능활동 유형으로 분류하고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또한, 인공지능 기술관점으로 해결 가능한 업무유형을 분류와 군집으로 보고 각 관점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제시함

정책제안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위해 사전 연구수행, 시범사업 수행, 공간정보분야 시기술 개발의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추진과제를 제시함

- 사전 연구수행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심층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사업지구 유형별로 맞춤형 현장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지적재조사 민원사례 분석 및 구조화, 지적재조사 구축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도출 등을 포함함
- 시범사업 수행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불합치 탐색, 알고리즘 개발, 인공지능 기반 사업지구 선정, 민원대응 처리 시범사업,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제시함
- 공간정보분야 시기술 개발 과제로는 공간질문 자연어 처리기술 개발, 자료융합·시각화·공간분석 등 공간자료를 바탕으로 한 공간질문 처리 기술 개발, 인사이트 발굴을 위한 공간자료 마이닝 기술개발, 이미지에 대한 심층분석이 가능한 공간이미지 분석기술 개발 등이 있음

OECD 지역정책 협력을 위한 기업생멸 동향분석 연구



Analysis of Business Demography Data for OEC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연구책임 김동한 | 연구진 하수정, 유희연 | 수시 17-33 | 57면

연구목적

최근 OECD는 지역의 생산성(Regional Productivity), 스마트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등을 새로운 어젠다로 정책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그리고 지역의 기업활동 동향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를 지역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기업생멸(Business Demography)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기업생멸 자료의 특성과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지역정책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OECD 대응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OECD의 교류협력으로 국토연구원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자 함

- 이를 위해 기업생멸 자료의 내용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뒤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결과

지역의 기업활동 동향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를 지역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기업생멸 자료의 특성과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지역정책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생멸 데이터의 내용을 검토하고, 한국 기업 데이터(KED)의 기업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함
- 신생기업, 소멸기업 등의 공간분포와 신생기업의 입지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업생멸 자료를 국토도시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

정책제안

OECD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지역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고취와 기업활동의 증진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활동을 진단,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업생멸통계를 개발 및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국토·도시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에서 기업생멸통계를 작성 및 공표하고 있으나, 시·공간적 구체성이 높지 않아 기업 빅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기업 데이터를 국토·도시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6) 글로벌개발협력센터

-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사업의 경제적 파급영향과 국토개발 활성화 전략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사업의 경제적 파급영향과 국토개발 활성화 전략



Economic Impact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Linked with North-South Expressway in Vietnam

연구책임 정일호 | 연구진 백정환, 김익준 | 수시 17-27 | 105면

연구목적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호치민을 연결하는 총연장 1,622km(현재 운영 및 건설 중인 연장 250km를 제외하면 실제 건설연장은 1,372km, 투자 규모 108.1억 달러)의 고속도로를 2030년까지 단계별로 건설할 예정임

-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베트남 측에 한국의 고속도로 관련 경험과 지식 공유를 바탕으로 '선: 양국 간 신뢰구축, 후: 베트남 도로인프라 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할 계획임

본 연구는 이 같은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베트남 북남고속도로의 경제적 파급영향 규명 및 고속도로와 연계한 국토개발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결과

북남고속도로 건설의 교통 측면 파급영향

- 도로 네트워크 분석으로 교통 측면의 효과 분석결과, 북남고속도로 건설은 지역 간 평균 통행거리를 992km에서 929km로 63km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됨(6.3% 감소)
- 평균 통행시간은 12시간에서 9시간으로 약 3시간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어(25.7% 감소) 지역 간 통행거리 및 통행시간의 편차 감소로 지역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북남고속도로가 기여할 수 있음을 규명함
- 북남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는 2025년에는 전체 국토의 16.2%가 고속도로에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북남고속도로의 경제적 파급영향

- 고속도로 건설단계에서의 파급영향: 2007년 기준 베트남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추정된 결과
 - 2017~2020년의 경우 전체 산업 생산액은 396조 9,400억 동, 연인원 기준 고용과 소득은 각각 284만 1,600명, 101조 3,600억 동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2021~2025년의 경우 생산액 436조 7,200억 동, 고용 312만

6,400명, 소득 111조 5,100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 2026년 이후에는 생산유발효과 266조 9,200억 동, 고용유발효과 191만 800명, 소득유발효과 68조 1,600억 동으로 나타남
- 고속도로 운영단계에서의 파급영향: 교통 측면의 효과를 반영하여 지역 소득 및 인구의 공간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
 - 국내총생산은 2020년에 0.258%, 2025년에 0.41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됨
 - 지역적으로는 중북부 지역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남부, 중부고원, 남동부 등의 소득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정책제안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북남고속도로와 연계한 국토 및 지역개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 북남고속도로의 권역 내 접근성 및 지역 간 이동성 개선효과를 활용하여 지역·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함
- 국가기간교통시설 구축계획과 종합적 연계로 국토·지역·도시 개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 지역개발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하여 고속도로와 연계한 단계별 국토개발로 사업 집행력을 강화함

기본방향과 부합하는 베트남 북남고속도로와 연계한 국토 및 지역개발 전략을 제시함

- (전략 1) 북남고속도로의 단계별 건설계획과 부합하는 국토개발: 하노이, 다낭, 호치민 3극 성장거점지역 대도시권 개발에서 산업발전 전략과 부합하는 Anchor 산업을 기존 3극 성장거점 이외의 지역에 입지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 (전략 2) 권역별 네트워크형 복합개발을 추진함: 성장거점 잠재력이 높은 도시와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네트워크형 복합개발을 추진하여 전국 중소도시들이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형 국가 도시체계를 구축함

□ 색 인

- 연구과제명
- 연구자명

연구과제명

7

가야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	46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제도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64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한 광역 대도시권의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76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47
국가전략도로망 지정 및 관리 방안	77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지역계획 부문의 대응전략과 과제	34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	35
국토 다극화를 위한 신지역혁신거점 조성 전략	36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체계의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 연안육역의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48
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	91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II)	49

C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78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 유연화 방안	50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	51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방안	52
도시재생을 위한 도로 공간기능 활용 방안 연구	79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폐기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	53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	54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의 체계적 활용방안 연구	55

□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	65
------------------------	----

B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사업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국토개발 활성화 전략	98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66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II):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의 지역별 영향을 중심으로	67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68
분권화시대의 국가공간정책 추진 방향	37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69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도로망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 도로기능평가를 중심으로	80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92

人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를 위한 GIS 활용방안	93
스마트도시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정비방안 연구	56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	81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	70

○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71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5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38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전략	72

ㅈ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82
------------------------------	----

자율주행차량에 대응한 첨단교통인프라정책 방안 연구

: 도로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83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39

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73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향: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58

중위도시를 위한 도시회복력 계획 연구 40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차세대 국가공간정보 전략 연구 94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인프라 구축 전략: 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84

지역기반 부동산 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74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41

지역성장을 위한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공급 방안에 관한 연구 85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42

지적재조사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방향 연구 95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59

ㄸ

차세대 첨단교통체계(C-ITS)의 도시지역 효율적 도입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연구 86

초고속교통망 시대에 대비한 「컴팩트 국토」 형성방안 연구 87

ㄹ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43

ㅎ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44

A-Z

OECD 지역정책 협력을 위한 기업생멸 동향분석 연구 96

1-9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62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63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입지 정책 연구 32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추진전략 3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 90

연구자명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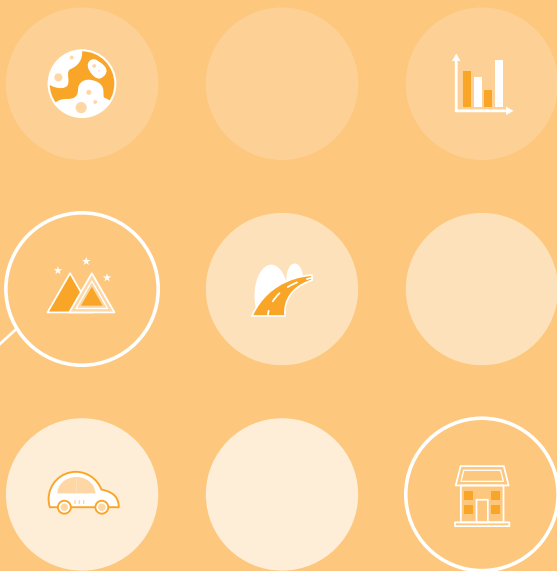
강건국	49
강미나	63, 71
강민조	43
강성우	68
강지훈	81
강혜경	91
강호제	69
고용석	79, 85, 87
구형수	48, 49
권건우	68
권규상	51, 53
권대한	93
권영섭	35
김경석	79
김계홍	68
김광호	76, 82, 86
김근용	62, 71
김길수	35
김남용	65
김다윗	39, 47
김대욱	71
김대중	91, 92, 95
김도형	35
김동근	47, 50, 69
김동한	91, 92, 96
김명수	55
김민수	94
김민철	64, 68, 72
김상록	77, 87
김상빈	33
김상조	50

김선영	66
김선희	38
김성수	48, 56
김성희	93
김수진	39
김수현	76
김슬예	54
김승남	52
김승중	69
김영민	95
김용민	38
김용진	50
김은란	71
김익준	98
김익기	87
김종학	80, 87, 92
김주영	72
김준기	80, 87
김중은	47
김진범	33, 41, 51
김진현	54
김천구	42
김태현	49
김태환	47, 67, 68
김혜승	71
김호정	78
김흥석	81
ㄴ	
나진항	39
남기범	41
남기찬	42

노민지	67
ㄹ	
류승한	32, 36
류종현	69
ㄴ	
명갑문	65
문정호	32, 33
문채	69
민범식	51, 53, 55
민병철	68
민성희	35, 38
ㄷ	
박내선	47
박미선	62, 63, 70, 92
박세훈	57
박소영	51, 53
박용신	81
박인권	69
박재길	47
박종순	48
박종일	76, 80, 83, 86
박주영	42
박준	47
박지영	35
박천규	67
박현춘	71
방보람	67
배준구	78
백정한	77, 98
변동준	68

변세일	67
변필성	38, 87, 92
ㄷ	
사공호상	90, 94
서기환	91, 92
서순탁	69
성혜정	94
손세형	56
송재인	87
송정현	36, 41, 44
송지은	50, 51, 57, 58
송창근	54
송하승	66
신동춘	35
씨이랩	56
ㅇ	
안성희	92
안승만	69
안재성	43
안종욱	65, 73
안홍기	39
야마네 사토코	56
양재섭	50
양진홍	34
여윤희	92
여형범	59
여화수	56
오민준	68
오성호	76, 80, 83
오주형	63
오창화	90, 92

유승동	67, 72	이재민	81	장철순	32	최재성	81
유은영	63	이재춘	62	전석훈	67	최진	67
유한솔	87	이정찬	52, 53, 56	전성제	67	최진도	67
유현아	32, 43	이종민	55	전은호	74	최형환	94
유희연	96	이종소	54	전홍규	68		
육동형	49, 82, 85	이준	49	전희정	62	ㅎ	
윤서연	76	이준석	59	정경석	67	하성용	35
윤영모	44	이지영	94	정문섭	93	하수정	39, 40, 42, 96
윤정중	47	이진희	58	정승혜	64, 69	한우석	49
윤태관	83, 84, 86	이찬영	80	정우성	32, 33, 41, 44	허문구	39
이경주	71	이철호	38	정유선	51	홍경구	52
이경환	79	이춘용	79, 80	정일호	98	홍시흠	39, 40, 42, 74
이구용	59	이태리	67, 68, 72	정지호	48	홍성언	95
이동현	71	이태삼	54	조남건	80	황관석	68
이문숙	48	이현주	73	조만석	55, 57, 59	황명화	38, 48, 92, 95
이미영	39	이형찬	66, 69	조성진	82		
이백진	82, 84	이호상	92	조성철	32, 42	A-Z	
이범현	52, 56	임거배	91, 95	조영하	62	Allison M. Garland	49
이병재	40, 54	임상연	58, 63	조정희	42, 65, 68, 73	Blair A. Ruble	49
이상건	77, 81	임세호	91	조진철	73	Chloe Brown	49
이상은	54, 59	임시영	90, 94, 95	조창현	82, 84	Elieen Hur	40
이상준	55	임영모	94	조판기	69	H. V. Savitch	49
이상원	47	임영태	81	진영호	53	Maria A. Brobelli	91
이수옥	68	임용호	43, 90, 91			Okju Jeong	40
이순자	38, 46	임은선	37, 71, 84, 92	ㄸ		Pranab J. Baruah	40
이승복	73	임준홍	57	차미숙	37, 84, 92	Tom Bellemans	82
이승욱	32, 56	임지영	47, 73	차은혜	38, 46		
이승훈	65, 73			천상필	35		
이왕건	51, 53	ㄷ		천현숙	62		
이용우	35	장기태	82	최명섭	67		
이원복	33	장용혁	48, 50	최명식	69, 74		
이윤상	62, 72	장은교	32	최수	64, 69		



CHAPTER

04

연구지원활동

1. 주요 행사	106
2. 글로벌 협력	110
3. 발간물	122

1. 주요 행사

2017. 1. 3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제 지자체 설명회

2. 14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고려대학교선도연구센터(ERC) MOU 체결

4. 11



세종 신청사 개청식 및 기념세미나

5. 16 ~ 5. 26 (총 4차)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 및 도시 계획·관리 제도 개선 연구 전국 지자체 간담회

5. 17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교육

6. 17 ~ 8. 2 (총 8차)



제6회 국토탐방대회

7.4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세미나

7.14



국토연구원-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8.30



스마트 아동안전지도 공모전

9.7



국토연구원-연세대-포르투갈 CEiiA MOU 체결

9.8



2017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도시재생 컨퍼런스

9.13



새 정부 국정정책과 강원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9. 28



국토연구원 등 4대 도로분야 연구기관 합동세미나

10. 27



제1회 국토교통 통일정책 포럼

10. 27



Big Data를 활용한 미래도로 구상 공동세미나

11. 9 ~ 11. 10



2017년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워크숍

11. 11



제22회 전국 초등학교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시상식

11. 24



지역교통체계개선 컨퍼런스

12. 13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교육

12. 14



2017년도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12. 18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12. 21, 12. 26



사랑의 연탄배달 자원봉사활동

12. 28



제16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12. 28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 글로벌 협력

1) 해외학술교류

3. 14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리질리언스 강화방향 세미나

5. 9 ~ 5. 11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국가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 최종 워크숍

5. 24



아시아개발은행(ADB) 브라운 백 세미나: 도시 분야 그룹 지식공유 세션

6. 14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방원 워크숍

6. 15 ~ 18



2017년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연차총회 주최국 세미나



8. 31



2017년 공간정보 국제세미나(ICGIS)

9. 5



중국 일대일로 2.0시대 도래와 동북아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9. 14



훈춘일대 초국경개발의 한-중 협력방안에 관한 한-중 워크숍

9. 19



국토연구원-OECD RDPC(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국토교통부 간담회

10. 17



필리핀 Asian Institute of Management(AIM) 방문단과의 도시·주택정책 워크숍

10. 18 ~ 10. 21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

10. 19



대도시권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공유 모빌리티 활용 세미나

10. 24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남가주정부연합(SCAG) 워크숍

10. 25 ~ 10. 27



제22회 아시아 건설회의

11. 2



기후변화 및 홍수 대응 복원력 제고방안 세미나

11. 28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제6차 연례워크숍



11.27 ~ 11.29



제26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11.29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제5차 연례 워크숍

12.5 ~ 12.9



GDSS 구축사업 의견수렴 세미나

12.22



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Co-working 플랫폼 국제컨퍼런스

2) 연수프로그램

5. 29 ~ 6. 3



2017 국토연구원 - 미주개발은행 도시개발 아카데미 중남미 고위급 초청연수(3차연도)

6. 18 ~ 7. 1



국토연구원 -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초청연수 (3차연도)

7. 6 ~ 7. 22



KOICA 기후변화 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

7. 11 ~ 7. 13



2017 국토연구원-세계은행 공동 워크숍: 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II (걷고 싶은 수변문화 공간 조성)

8. 27 ~ 9. 9



2017 KOICA-UNESCAP-KRIHS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 강화 초청연수

9.4 ~ 9.7



2017 국토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10. 23 ~ 10. 27

12. 14 ~ 12. 16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아프가니스탄 고위급 대상 스터디 투어



2017 국토연구원-서울특별시-세계은행 공동 워크숍

3) 글로벌개발 협력 활동

① MOU 체결

국제기구/해외 연구기관과 신규 MOU 체결 및 기존 MOU 강화 및 내실화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우루과이 리베라 주정부 등 신규 MOU 체결
-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기존 MOU 체결기관과 공동연구, 교육·연수, 정례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협력사업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하여 기 체결된 MOU 강화·내실화

[MOU 체결 실적]

국가	기관명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대학교 도시생태 및 환경계획연구소
멕시코	국가주택위원회
미국	남캘리포니아지방정부연합, 메릴랜드대학교, 우드로윌슨센터, 워싱턴대학교 건설환경대학, 워싱턴대학교 도시설계 및 계획학과, 조지워싱턴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도시연구소
미얀마	경제발전연구센터
베트남	베트남 건설도시공무원 교육원, 베트남 건축도시지역계획 연구원, 베트남 도시계획개발협회, 토지행정청, 하노이 건축대학교
스리랑카	국방도시개발부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대학교
우루과이	우루과이 리베라주
영국	런던대학교 바틀렛 도시계획대학
이집트	국토계획청, 카이로대학교 건축공학과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도쿄대학교, 도쿄대학교 도시안전국제센터, 쓰쿠바대학교, 종합연구개발기구, 종합지구환경학연구소, 히로시마대학교 국제개발협력대학원
중국	중국토지감측규획원, 저장대학교, 남개대학교
콜롬비아	콜롬비아개발금융공사
카자흐스탄	국가정보기술공사, 유라시안대학교, 카자흐스탄 농업과학대학교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주택청
국제기구	APEC기후센터,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태평양지역개발기구,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

2 연수프로그램

국토개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컨설팅·계획수립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

- 연구(Research)와 컨설팅(Consulting)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한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사후 평가 등 다단계 환류 연구연수 시스템 운영
-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기주도형 감성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연수자와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반영한 협력형 교재 개발

[2017년 연수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기간	참가국	인원
2017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도시개발 아카데미 중남미 고위급 초청연수(3차연도)	5. 29 ~ 6. 3	파나마, 우루과이, 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콜롬비아	14
국토연구원-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초청연수(3차연도)	6. 18 ~ 7. 1	과테말라	14
KOICA 기후변화 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	7. 6 ~ 7. 22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	20
2017 국토연구원-세계은행 공동 워크숍: 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II (걷고 싶은 수변문화공간 조성)	7. 11 ~ 7. 13	모로코,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중국, 탄자니아, 베트남, 세르비아	19
2017 KOICA-UNESCAP-KRIHS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 초청연수	8. 27 ~ 9. 9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11
2017 국토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9. 4 ~ 9. 7	아프가니스탄	11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아프가니스탄 고위급 대상 스터디투어	10. 23 ~ 10. 27	중국, 아르헨티나, 케냐, 탄자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싱가포르	12
2017 국토연구원-서울특별시-세계은행 공동 워크숍	12. 14 ~ 12. 16	콩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아르헨티나, 이집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일본	27

③ 해외학술교류

연구성과의 국제화 및 해외 홍보를 위하여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여

- 2017년 AIIB(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연차총회 주최국 세미나, 국토연구원-세계은행(WB)과의 제6차 정례워크숍 등 국제세미나 37건 개최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한-러 다이얼로그 및 극동포럼 등 42건의 국제세미나에 발표·토론 등 참여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등 개최 실적]

행사명	일자	장소
미국 도시재생사례 현지조사 및 수행기관 세미나	2. 25 ~ 3. 5	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NYCEDC (뉴욕/미국)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리질리언스 강화방향 세미나	3. 14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인천/대한민국)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국가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 최종 워크숍	5. 9 ~ 5. 11	SECOVI (상파울로/브라질)
아시아개발은행(ADB) 브라운 백 세미나: 도시 분야 그룹 지식공유 세션	5. 24	아시아개발은행 (마닐라/필리핀)
KSP 정책자문 '스리랑카 캔디시 교통망 연결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최종보고회	6. 9	스리랑카 도로부 본부 (콜롬보/스리랑카)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방원 워크숍	6. 14	국토연구원
2017년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연차총회 주최국 세미나	6. 15 ~ 6. 18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GDSS 구축사업 1차 의견수렴 세미나	6. 20	동아 플라자호텔 (타이완/베트남)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사후관리 보고회	7. 10	아순시온 시청 (아순시온/파라과이)
2017 제2차 유라시아포럼	7. 4	대한상공회의소
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7. 12	콘래드 호텔
국토연구원-세계은행 공동 워크숍: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II (건고 싶은 수변문화 공간 조성)	7. 11 ~ 7. 13	웨스턴 조선 호텔, 여의도 콘래드 호텔

행사명	일자	장소
베트남 그린시티 도시계획 사업기획관리(PM) 워크숍	8. 17	매리어트 호텔 (하노이/베트남)
2017년 공간정보 국제세미나(ICGIS)	8. 31	양재 AT 센터
국토연구원-일본 도쿄대학 CSIS 학술교류회 : 일본의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사례	9. 4	국토연구원
일본 지방도시연구팀 연구교류회	9. 4	국토연구원
중국 일대일로 2.0시대 도래와 동북아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9. 5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도시재생 컨퍼런스	9. 8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훈춘일대 초국경개발의 한-중 협력방안에 관한 한-중 워크숍	9. 14	연변대학교 (연길/중국)
국토연구원-OECD RDPC(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국토교통부 간담회	9. 19	국토연구원
아르헨티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현지 착수회의	9. 19 ~ 9. 21	IDB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무소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	10. 18 ~ 10. 21	토지감측규획원 (베이징/중국)
대도시권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공유 모빌리티 활용 세미나	10. 19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남가주정부연합 (SCAG) 워크숍	10. 24	국토연구원
제22회 아시아 건설회의	10. 25 ~ 10. 27	프레지던트 호텔
'17/18 미얀마 KSP 착수보고회	10. 27	땡가하 호텔 (네피도/미얀마)
GDSS 구축사업 2차 의견수렴 세미나	11. 3	사이공 락지아 호텔 (락지아시/베트남)
OECD Round Table	11. 24	OECD 본부 (프랑스/파리)
제26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11. 27 ~ 11. 29	코메이 호텔 (일본/벵부)

4 연구실적

국제 공동연구 및 해외 수탁연구

-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벨기에 하셀트대학교,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베트남 도시계획 개발학회 등 국제기구 및 국외 연구기관과 연구 수행 다수
- Non-residential Visiting Fellow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교류를 활발히 하여 각 분야별 국외 전문가(교수 등) 초청, 공동연구 수행
- 개발도상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토·지역·도시·교통 분야에서의 정책 및 계획 수립
- 교통(도로) 분야, 동북아 지역연구 현지 전문가 참여 등 해외전문가와와의 공동연구 결과를 국제저널에 게재(Road Safety for Aged Society, *Journal of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vol. 2660)

[국제공동(협력)연구, 수탁연구 등 수행 실적]

관계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 참여자
우드루얼슨센터 (Woodrow Wilson Center)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2017. 1. 1 ~ 2017. 12. 31	한우석 등 6인
벨기에 하셀트 대학교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 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7. 3. 1 ~ 2017. 12. 31	이백진 등 3인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 협력방안 연구	2017. 4. 20 ~ 2017. 10. 31	이현주 등 2인
베트남 도시계획 개발학회	주민주도형 재해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한국형 도시방재 적용에 대한 예비조사: 베트남 후에시와 탐키시를 사례로	2017. 12 ~ 2018. 3	이병재 등 3인
세계은행 (WB)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연구	2016. 12. 27 ~ 2018. 3. 31	김성수 등 5인
미주개발은행 (IDB)	중남미 국가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	2016. 6. 3 ~ 2017.5. 31	박미선 등 5인
탄자니아 국립 도로청	탄자니아 PPP 컨설팅	2015.1. 22 ~ 2018. 2. 21	이승복 등 3인

관계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 참여자
한국수출입은행	아르헨티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2017. 8. 4 ~ 2018. 3. 5	이상건 등 3인
	스리랑카 캔디시 교통망 연결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016. 10. 18 ~ 2017. 6. 16	오성호 등 7인
한국국제협력단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사후관리	2016. 7. 11 ~ 2017. 12. 31	오성호 등 4인
	베트남 그린시티 도시계획 수립사업 사업기획관리	2015. 7. 28 ~ 2018. 6. 30	문정호 등 12인
	베트남 지가산정 역량강화 및 지가정보시스템 개선사업	2016. 11. 2 ~ 2018. 11. 1	사공호상 등 4인
국토교통부	해비타트III 의제(New Urban Agenda) 이행방안 연구	2017. 4. 20 ~ 2017. 12. 15	박세훈 등 5인
한국개발연구원	KSP 경제발전분야 미얀마 정책자문	2017. 7. 14 ~ 2018. 4. 30	김대중 등 6인

3. 발간물

1) 국토

통권 423호 | 2017. 01 |

국토시론

변화와 불확실의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토발전의 틀 짜야 김동주

특집 | 2017년 국토정책 방향

- | | |
|--------------------------------|-----|
| 1. 전환기의 한반도 국토비전과 발전전략 | 이상준 |
| 2. 도시의 여건변화와 정책과제 | 이용우 |
| 3. 주택·부동산·건설분야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 김성일 |
| 4. 목표지향적 SOC 투자방향 | 김호정 |
| 5.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공간정보정책이 나아갈 방향 | 김미정 |

용어풀이 <221> 일대일로 외 유현아

우리 옛길 걷기 <41>

느릿느릿 고살길을 휘돌아 조선의 옛 그림자를 밟다 신정일

e-interview 프랑크 포퍼(Frank James Popper)

스마트 디클라인: 작은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박윤미

영화와 도시 <37> 영화 '곡성'

곡성에 나타난 위험사회 김수진

해외동향 리버풀의 도시재생 성공방정식: 단계적 전략 이왕건·김태영·안종천

글로벌정보 산간지대법 개정안 최종 도입 외

국토연구원 단신

'제5차 세계은행-국토연구원 연례워크숍' 개최 외

국토 옴부즈만

자료회원 가입안내

KRIHS 보고서

- | | |
|--|-----|
|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이왕건 외 지음) | 민병식 |
| 사망자 발생위험도 분석을 통한 고령운전자 안전정책 연구(최재성 지음) | 김원철 |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일본 도쿄에서 만난 미래 한국 도시의 모습은 이근우

통권 424호 | 2017. 02 |

국토시론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 서중해

특집 | 4차 산업혁명과 국토발전

- | | |
|---------------------------------|---------|
| 1. 4차 산업혁명과 국토공간구조 | 김홍배 |
|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구조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 정청무 |
|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 방안 | 안홍기·조은주 |
|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방향과 정책과제 | 장석인 |
| 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입지 공급방안 | 장철순 |
| 6.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통 운영·관리의 변화 | 김광호 |

용어풀이 <222> 사이버물리시스템 조성철

우리 옛길 걷기 <42>

외로운 그림자가 뒤를 돌아보다 신정일

e-interview 루스 스타이너(Ruth Steiner)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융합, 그리고 공중보건과의 연결 윤철희

영화와 도시 <38> 영화 '게이샤의 추억'

천년을 간직한 교토에서 사랑을 기다리다 안인향

해외동향

일본 공영주택제도와 시사점 김근용·이수욱·오민준

글로벌정보

'새로운 산업국가 프랑스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의 산업국가 도약 외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연구원 세종시대 개막' 외

국토 옴부즈만

KRIHS 보고서

- | | |
|------------------------------------|-----|
|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 이은영 |
|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이태리 외 지음) | |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4차 산업혁명은 정말 일어나고 있는가? 조대연

통권 425호 | 2017. 03 |

국토시론

공간정보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토진단 김은형

특집 |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토진단과 정책방향

1. 데이터 기반 국토모니터링과 정책방향 나진향
2. 국토진단을 위한 오픈소스 GIS 분석기능의 발전동향 김대중
3.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교통DB 플랫폼 구축방안 천승훈·김진우·김성민
4. 기업 간 거래흐름 분석과 지역산업정책 지원방향 황명화
5. 공간정보 기반의 의료취약지역 분석과 정책방향 이태호
6. 데이터에 기반한 국토진단의 정책사례 송규봉

영어풀이 <223> 딥러닝(Deep Learning) 임룡혁

우리 옛길 걷기 <43>

세월에 스친 바람을 맞으며 마음 속 고요를 찾다 신정일

e-interview 갤런 뉴먼(Galen Newman)

도시재생: 유비쿼터스 도시 현상, 그리고 대응방안 김보아

영화와 도시 <39> 영화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 김동근

국토 옴부즈만

해외동향

세상의 본질을 탐하는 디 아이(The Eye): EU의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 임용호·강민조

글로벌정보 프랑스의 고용창출 현황과 국토의 변화 외

자료회원 가입안내

국토연구원 단신

'지역부동산시장 워크숍' 개최 외

KRIHS 보고서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강민조 외 지음) 임정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이제는 스마트시티다 구선영

통권 426호 | 2017. 04 |

국토시론

새로운 가치관으로써 '포용'의 개념과 정책방향 안충영

특집 | 포용적 국토

1. '포용적 성장'의 개념 및 논의 동향 윤성주
2. '포용적 국토' 철학과 정책제언 문정호
3. 포용도시를 향한 도전과 정책과제 박인권
4.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포용적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한경원
5. '교통포용지수'를 활용한 사회적 배제 최소화방안 배윤경·김상록
6. OECD 공간적 포용정책 동향 김수진

영어풀이 <224> 인구절벽 외 민성희

우리 옛길 걷기 <44>

주왕이 흘린 피는 진달래꽃으로 피어나고 신정일

영화와 도시 <40> 영화 '아웃사이드'와 '럼블 피쉬'

초월적 시간, 신화적 공간의 탈사 박재윤

국토 옴부즈만

해외동향

보스턴의 도시재생 동향과 시사점 이왕간·김지현·권규상

글로벌정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영국 대중교통정책 외

국토연구원 단신

'제5차 국토종합계획 포럼' 개최 외

KRIHS 보고서

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 (변필성 외 지음) 남기범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구형수 외 지음) 박정일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시민들을 '포용'하고 불평등을 '포용'할 정책이란? 김태희

통권 427호 | 2017. 05 |

국토시론

미래의 도시: 융합과 연결의 의미 이우종

특집 | 융합과 연결의 도시

1. 융합과 연결의 미래 도시전략 김동근
2. 유연한 토지이용과 공간의 결합: 지역특성을 살리는 용도지역제 대안 모색 정희운
3. 도시공간의 융·복합을 위한 입체도시계획 이정형
4. 도시기반시설의 스마트화와 도시정책 과제 이범현
5. 사람과 장소를 이어주는 도시재생 전략: 산새마을 사례 이주원
6. 관계적 접근을 통한 도시발전 방향 변필성

용어풀이 <225> 입체도시계획 이선용

우리 옛길 걷기 <최종회>

비밀의 숲길을 걸으니 지나간 사람의 흔적도 그림이 된다 신정일

e-interview 일리어 벨러리(Illir Bejleri)

도시설계와 교통계획의 디지털 컨버전스 노수웅

영화와 도시 <41> 영화 '지슬: 끝나지 않은 세월 2'

역사의 상흔을 끌어안고 나아가다, 제주 김지연

국토 음부즈만

해외동향

오스트리아 린츠, 철강도시의 새로운 브랜드 창출: 과학·기술·예술의 융합 송지은

글로벌정보 화전교차로를 시민의 광장으로: 7개 광장 재생 계획 외

국토연구원 단신

'세종 신청사 개청식 및 기념세미나' 개최 외

자료회원 가입안내

KRIHS 보고서

비도시지역 개발입지시설의 집합적 개발 유도 방안 연구(김동근 외 지음)

김용진

미래 대도시권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이용우 외 지음)

서용석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융합과 연결의 도시, 소셜시티의 확산 강민영

통권 428호 | 2017. 06 |

국토시론

4차 산업혁명, 첨단교통수단 및 미래국토 최기주

특집 | 첨단교통수단의 발전과 국토인프라 정책방향

1. 차세대 고속철도 인프라 발전 방안 장승엽·여인호
2. 미래 고속도로 전망과 도로인프라 정책방향 백승걸
3. 신교통수단(트램)과 도시교통 정책방향 안정화
4. 자율주행차 도입과 도시교통 정책방향 이백진·김광호
5. 자율주행셔틀 시범운행 사례와 시사점 빈미영
6. 드론산업의 발전동향과 교통부문 활용방안 이시복

용어풀이 <226> MaaS 외 김상록

국토 음부즈만

제2 종관철도 중앙선을 타다 <1>

우리는 왜 중앙선을 탔나? 심승희

e-interview 멩한 리(Ming-Han Li)

스펀지 도시: 저영향개발 기법을 이용한 도시 우수 관리 김현우

영화와 도시 <42> 영화 '비포 선라이즈'

예술 위를 걷는 도시, 오스트리아 빈 최정은

해외동향

아시아의 지식·정보 게이트웨이: 그랜드 프런트 오사카 장철순·김주훈

글로벌정보 리옹 시, 무인 미니버스 시험 운행 외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공동주최 중남미 공무원 초청연수' 개최 외

KRIHS 보고서

호남KTX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 이용변화 연구(김종학 외 지음)

김익기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첨단도로인프라의 전략적 관리 방안 연구: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를 중심으로(김광호 외 지음)

강경표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서울부터 부산까지 20분? 하이퍼루프 김정철

통권 429호 | 2017. 07 |

국토시론

해안권 관광자원의 가치창조 최승담

특집 | 남해안권 발전거점과 지역활력 증진

1. 관광트렌드 변화와 해양관광정책 추진방향 진영재
2.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신보미
3.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전략 차미숙·강민석
4. 남해안 해안경관 관리와 오션뷰 명소화 김경인
5. 남해안, 섬관광 명소로 도약 박희은
6.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및 통합관광교통정보 개선 이백진·배보람

용어풀이 <227> 경관협정 외 강민석

제2 종관철도_중앙선을 타다 <2>

영주역에서는 왜 기관차가 교체될까?: 중앙선과 그 연결노선의 형성 과정 심승희

국토 옴부즈만

e-interview 스티븐 브리안(Steven J. Burian)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도시를 위한 물인프라 시스템 신상민

영화와 도시 <43> 영화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위기를 새로운 삶의 기회로, 개척의 도시 시카고 송준민

해외동향
일본의 도시·지역재생을 위한 하천이용 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이상은

글로벌정보 프랑스의 해안관광 활성화 정책 외

국토연구원 단신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외

KRIHS 보고서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 연구(김선희 외 지음) 최재현
도시 내 국·공유 유류자산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협력방안 (박소영 외 지음) 김주진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해역 재생사업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를 마련하자 김경련

통권 430호 | 2017. 08 |

국토시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도시 복합재난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 이래철

특집 |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도시 핵심시설 안전관리 방안

1. 도시 핵심시설의 복합재난 유형 및 대비 방안 윤동근
2. 국내 자연·기술 복합재난 사례 및 위험관리 개선 시사점 소철환
3. 해외 도시 복합재난 관리 정책 및 제도 오윤경
4. 도시 복합재난에 대비한 도시방재 전략 수립 방안 이병재
5. 시나리오 기반 대형 복합재난 확산 예측 기술개발 정창삼
6. 복합재난 관련 도시 핵심시설 리스크 평가기술 이용태

용어풀이 <228> 도시 복합재난 외 김소윤

제2 종관철도_중앙선을 타다 <3>

중앙선의 시작, 청량리 한지은

국토 옴부즈만

e-interview 가와하라 스스무(川原晋)
관광마을 만들기: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원

영화와 도시 <44> 영화 '디센던트'
지상낙원에서 마주하는 현실, 호놀룰루 임주호

해외동향
일본 홋카이도의 신규 취농정책: 구리아마와 비라토리 사례 홍시흠

글로벌정보 정부·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재난 대처 플랜 외

국토연구원 단신

'2017 KOICA 기후변화 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2차연도)' 실시 외

자료회원 가입안내

KRIHS 보고서

첨단인프라 기술발전과 국토교통분야의 과제 -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이백진 외 지음) 백승걸
계획이의 조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이형찬 외 지음) 박준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국내 대형 복합재난의 대응체계 제언 송창영

통권 431호 | 2017. 09 |

국토시론

다시 쓰는 '신국토구상' 성경룡

특집 | 새 정부의 국토정책에 대한 제언

- | | |
|----------------------------|---------|
| 1. 지방분권시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 | 차미숙 |
| 2. 혁신도시의 신성장거점화를 위한 정책과제 | 류승한 |
| 3. 포용적 국토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방향 | 이왕건·권규상 |
| 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 이수옥 |
| 5.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통인프라 정책방향 | 김종학 |
| 6. 국민이 체감하는 국토공간정보 정책방향 | 임은선 |

용어풀이 <229> 스마트인프라 외 김다윗

제2 종관철도_중앙선을 타다 <4>

수도권 중앙선 철도역과 주변 지역의 변화 박병석

e-interview 졸단 나기(Zoltan Nagy)

사용자를 먼저 생각하는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 도시 우재영

영화와 도시 <45>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바비큐, 그리고 델러스 카우보이즈 임재주

해외동향

영국의 HMO 주택임대 운영 사례와 시사점 박미선
 독일 추크슈피체 산악열차와 지역경제 활성화 노용식·최유·권영섭

글로벌정보 프랑스 지방분권의 역사와 현주소 외

국토연구원 단신

'2017 KOICA-UNESCAP-KRIHS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 초청연수(1차연도)' 실시 외

국토 옴부즈만

KRIHS 보고서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문정호 외 지음) 김현호
 초연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정책방향 연구(사공호상 외 지음) 김은형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도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안장원

통권 432호 | 2017. 10 |

국토시론

괴테의 행복 조건, 주거복지의 의미와 정책과제 손병석

특집 | 실수요자,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방향과 과제

- | | |
|---|-----|
| 1. 지역별 주택시장 차별화와 정책추진 방향 | 변세일 |
| 2. 투기수요의 합리적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 시장형성 유도방안 | 박진홍 |
| 3.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방안 | 박신영 |
| 4. 청년의 주거지원 필요성과 정책지원 방향 | 박미선 |
| 5. 가계부채 위험의 안정화방안 | 김영일 |
| 6. 공동주택 후분양제 의무화 논의 검토: 주요 연혁과 이슈를 중심으로 | 장경석 |

용어풀이 <230> HAMP(연방정부융자조정프로그램) 외 최진

KRIHS가 만난 사람 <1> 김용순 한국주택학회장

"투기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유연한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변세일

제2 종관철도_중앙선을 타다 <5>

동서횡단 철도의 교차, 더 중요해지는 원주와 중앙선 신현림

e-interview 이안 맥셰인(Ian McShane)

커뮤니티 기반시설과 미래 도시 김형민

영화와 도시 <46> 영화 '배트맨'

가장 현실적인 허구의 도시, 고담시 문정호

해외동향

뉴욕의 젠트리피케이션 평가 및 진단 김근태
 독일 카를스루에의 트램 중심 교통체계 김종학

글로벌정보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 외

국토연구원 단신

'일본의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사례' 전문가 특강 개최 외

국토 옴부즈만

자료회원 가입안내

KRIHS 보고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위한 재해관련 지구·지역의 활용방안연구
 (이병재 외 지음) 박찬
 스마트도시 성숙도 및 잠재력 진단모형 개발과 적용방안 연구
 (이재용 외 지음) 이정훈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마지막 사람이 먼저 되는 주거복지 서종균

통권 433호 | 2017. 11 |

국토시론

도시재생 뉴딜, 도시의 근본적인 혁신과 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변창홍

특집 | 도시혁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전략

- | | |
|----------------------------------|-----|
| 1.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방향과 미래상 | 김이탁 |
| 2. 포용성장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 전략 | 서민호 |
| 3. 도시재생 뉴딜과 주거복지 실현 | 이영은 |
| 4.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전략 | 이석환 |
| 5. 지역주도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강화 | 안상욱 |
| 6. 도시재생 뉴딜과 거버넌스 활성화 | 김세용 |
| 7. 도시재생형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 임상연 |

용어풀이 <231>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김태영

국토 음부즈만

KRIHS가 만난 사람 <2>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서민호제2 종관철도_중앙선을 타다 <6>
강원도로 통하는 관문, 철도 교통의 중심지 제천 심승희

자료회원 가입안내

영화와 도시 <47> 영화 ‘레 미제라블’
프랑스 혁명과 파리 대개조계획 이석우

해외동향

일본의 지역의료복지거점 시책 및 주요 사례 김선희·김명환·김재호
네덜란드와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정책 및 시사점
한우석·강건국

글로벌정보 프랑스 미슈빌 단지, 과거 철강 산업단지를 친환경 주택단지로 외

국토연구원 단신

‘미국 남가주지방정부연합(SCAG) 대표단과의 공동 워크숍’ 개최 외

제22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수상작 및 입상자 명단

KRIHS 보고서

저소득층 임차가구 입지분석에 근거한 주거지원 방안 연구(이윤상 외 지음)
최태림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한우석 외 지음)
김병식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재생 박순신

통권 434호 | 2017. 12 |

국토시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김형기

특집 | 분권형 국토균형발전 추진 방향

- | | |
|-------------------------------------|-----|
| 1.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방향과 과제 | 유정인 |
| 2.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적 조화를 위한 추진 전략 | 김순은 |
| 3.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과제 | 한경원 |
| 4. 프랑스의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 | 배준구 |
| 5. 지방분권에 바탕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방향 | 김현호 |
| 6.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융합적 추진 방안 | 차미숙 |

용어풀이 <232> 지방분권 개헌 외 김다윗

국토 음부즈만

KRIHS가 만난 사람 <3>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미숙제2 종관철도_중앙선을 타다 <7>
화석 시멘트와 화물 열차의 도시에서 녹색 섬표의 도시로, 단양 이해란

자료회원 가입안내

e-interview 황리링(黃麗玲)
대만의 공공주택 정책 유은영영화와 도시 <48>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눈부신 한국영화의 요람, 부산 한선희

해외동향

중국 역사유적지의 복원·정비 사례 및 시사점 이순자·차은혜·이효란

글로벌정보 프랑스 2015~2020 국가-레지옹 간 개발협약의 주요분야
및 예산편성 외

국토연구원 단신

‘제6차 세계은행-국토연구원 연례워크숍’ 개최 외

KRIHS 보고서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 I)
(이상은 외 지음) 김형수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전략 연구
(강호제 외 지음) 조성호

2017년 국토 총목차(통권 423~434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짧은 글 긴 생각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 ‘포용의 철학’에서 답을 찾아야 이두영

2) 국토정책Brief

호	발간일	제목	저자
제597호	2017.01.02	원도심과 신도심 간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적 도시관리 방안	박정은
제598호	2017.01.09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정책	이성원
제599호	2017.01.16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직접시공의무제 합리화 방안	안종욱
제600호	2017.01.23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와 교통계획 분야의 대응과제	이백진
제601호	2017.01.31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싱가포르와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이태리, 조정희, 방보람, 권건우
제602호	2017.02.06	해외인프라 시장에서의 한·중 협력여건 분석 및 시사점	이현주, 윤하중, 유현아
제603호	2017.02.13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 방안	김민철
제604호	2017.02.20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이승복, 안종욱, 조정희
제605호	2017.03.06	미국 저소득층주택 세금감면(LIHTC) 프로그램 참여주체의 역할과 시사점	이재춘
제606호	2017.03.13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1기 신도시 관리방안	김중은
제607호	2017.03.20	2017년 주택시장 영향요인 분석과 전망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제608호	2017.03.27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도시정책 방향	왕광익, 노경식
제609호	2017.04.03	부동산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의 역할 재정립 방안	김승중
제610호	2017.04.17	금융 빅데이터를 이용한 임대차주의 리스크 분석	이태리, 박천규, 황관석
제611호	2017.04.24	교통수요 추정방법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윤서연
제612호	2017.05.08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적 공급관리방안	장은교
제613호	2017.05.15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 자산 공유방안	최명식
제614호	2017.05.22	플로우 빅데이터로 바라본 호남KTX 개통 후 변화	김종학
제615호	2017.05.29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방안	박소영, 이왕건, 정유선
제616호	2017.06.05	지방 인구절벽 시대의 '축소도시' 문제, 도시 다이어트로 극복하자	구형수, 김태환, 이승욱
제617호	2017.06.12	제2기 국가균형발전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확충부터	권영섭, 노용식, 민성희, 최재성, 최유
제618호	2017.06.19	지역경제 회복력(Regional Economic Resilience)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홍사흠
제619호	2017.06.26	사람·자원·정보의 흐름을 담고 있는 플로우(Flow) 빅데이터, 지역의 경제지도를 그린다	황명화
제620호	2017.07.03	고령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지원 활성화 방안	강미나, 조윤지

호	발간일	제목	저자
제621호	2017.07.10	지역별 주택수급 진단과 정책과제	변세일, 정경석, 방보람
제622호	2017.07.17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제623호	2017.07.24	유라시아 4개국 공간정보정책 추진현황 및 협력방안	강혜경
제624호	2017.07.31	차량운행경로 빅데이터의 도로정책 활용방안	박종일
제625호	2017.08.07	영국의 지역발전 정책 분권화와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이원섭
제626호	2017.08.14	실효성 있는 도시방재계획을 위한 도시 침수예방대책 지원시스템 활용방향	이상은, 이종소, 김슬예
제627호	2017.08.21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박미선
제628호	2017.08.28	신탁형 도시재생회사를 활용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최명식
제629호	2017.09.04	광역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체계 발전 방향	김태환, 송지은
제630호	2017.09.11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방안	김명수
제631호	2017.09.18	영국의 계획이익 환수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이형찬, 최명식
제632호	2017.09.25	구조적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입지 공급방안	강호제, 민성희
제633호	2017.10.10	고속도로 유휴공간의 복합적 활용방안	이범현
제634호	2017.10.16	자연치유 수요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노용식, 최유, 권영섭
제635호	2017.10.23	도시양극화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김동한, 고영화
제636호	2017.10.30	해외의 부동산소비자 보호 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송하승, 이형찬
제637호	2017.11.06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첨단도로인프라 정책방안	오성호, 윤태관
제638호	2017.11.1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추진전략	정우성, 문정호, 김진범
제639호	2017.11.20	스마트시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표기반 진단 방안	이재용, 이성원
제640호	2017.11.27	현실과 가상이 연결된 스마트국토 구현 방향과 실천 과제	임시영
제641호	2017.12.04	해외의 도심형 신산업입지 공급사례와 정책과제	장철순, 조성철
제642호	2017.12.11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박세훈, 조만석, 송지은
제643호	2017.12.18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재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 실효성 제고 방안	조만석, 이상은
제644호	2017.12.26	교통투자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 주행세 도입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최재성

3) 국토연구

통권 92권 | 2017. 03 |

금융위기 이후 자가가구의 소득계층별 주택자산효과	유현지·이영성
역사문화콘텐츠가 기능적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 : 대구도심 사례를 중심으로	이권희·박종화
도로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고려한 도로율 지표의 개선 방안 연구	유재광·노정현
풍수해 재난 회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요인 규명	박소연·윤상훈
주택가격 변화가 은행 대출전략 행태에 미치는 영향 : 기업대출의 축소행태를 중심으로	서지용

통권 93권 | 2017. 06 |

사회경제지표를 고려한 국내 지역 간 도로스톡 수준 비교 연구	유재광·전용현·노정현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으로 인한 교통 네트워크 용량증대 효과 분석	고용석·육동형·노정현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지역노동시장 중간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김민영·조민자·임업
도시재생과 커뮤니티 기반 조직의 역할 : 런던 소디치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최영숙·이선영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원지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김중은·이민정
가구와 주택특성이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	이경희·민인식
교통수요 추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간대별 방향별 O/D 구축	박오성·손의영·유정복
구철원 시가지의 창조기억 재구성	김지나·조경진·박한솔
지역기반형 도시재생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 Gre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GUCI)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이원동·최명식
어린이 참여 마을설계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어린이들의 성장과 발달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박효숙·이우민·김승남·김재철·이경환
공동주택 관리비 결정요인 분석: 다수준 중단분석	이창로·박기호
부모의 자가소유가 자녀의 학업성과와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주영

통권 94권 | 2017. 09 |

토지이용-교통 통합모형의 이론 및 적용사례의 고찰과 구축방안 논의	조성진·유건화
부산 영도의 근대 도시경관 변천: 문화경관적 관점	배연한·강동진
화물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유료도로 가중치 적용 개선방안 연구	고용석·김성록·노정현
도시 침수 고위험지역 선정을 위한 AHP-PROMETHEE 연계	이상은·이종소·김슬예
효율적 행정업무를 위한 드론 공간정보 활용기반 구축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최경아·이임평·이효상
수원극장(水原劇場)의 역사와 그 의미	김남석
도시재생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창업 분석 :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김소민·정해진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 분석 :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한만희·박준

통권 95권 | 2017. 12 |

SVAR모형을 이용한 대출금리, 주택소비심리 주택시장 간의 파급효과 분석	최윤영·김지현·조경철
영국 근린재생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배경에 대한 연구 : 대처정부~신노동당정부의 재생정책을 중심으로	이태희·김예성
환율 불확실성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 비선형모형을 중심으로	김상배
스톡의 상대적 수준 및 이동성을 반영한 지역별 도로 인프라 지표 개발	유재광·노정현

4)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16호 | 2017. 01 |

인포그래픽스

초기 점유형태별 10년 뒤 자가거주 비율은? 김민철, 권건우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방보람, 박찬규, 이태리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황관석, 방보람, 오민준
K-REMAP지수 방보람, 황관석, 오민준

심층분석

금융 빅데이터를 이용한 임대차주의 상환위험 분석 이태리, 박찬규, 황관석

정책과 시장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2017년
정책 방향 박선호

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

함영진

지금 세계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제18호 | 2017. 07 |

인포그래픽스

2017년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은?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방보람, 박찬규, 이태리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황관석, 방보람, 오민준
K-REMAP지수 방보람, 황관석, 오민준

심층분석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안 연구 김민철

정책과 시장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향후 정책 방향 조정식

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

함영진

지금 세계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제17호 | 2017. 04 |

인포그래픽스

2017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주택시장 인식은? 박찬규, 방보람, 권건우, 전석훈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인식의 이유는? 박찬규, 방보람, 권건우, 전석훈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방보람, 박찬규, 이태리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황관석, 방보람, 오민준
K-REMAP지수 방보람, 황관석, 오민준

심층분석

지역별 신규주택 공급격차가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변세일, 황관석

정책과 시장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과 향후 정책과제 김용순

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

함영진

지금 세계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제19호 | 2017. 10 |

인포그래픽스

8.2대책 중 주택시장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은?

8.2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우선 도입해야 할 정책은?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방보람, 박찬규, 이태리
부동산시장 압력지수 황관석, 방보람
K-REMAP지수 방보람, 황관석

심층분석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이태리

정책과 시장

사업모델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변창흠

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

함영진

지금 세계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시장 연구 동향

5) 도로정책Brief

제111호 | 2017. 01 |

이슈&칼럼 신기후체제의 도로정책 방향	강기춘
해외정책동향	
고속도로 유희부지 활용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II	민병욱
일본의 도로방재대책과 시사점	조남건
교통영향분석 : from LOS to VMT	이재섭
기획시리즈: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 도로②	
도로 위에서는 누가 가장 우선인가? Nikola Medimorec & Andy Tebay	
해외통신 영국 / 일본 / 캐나다	
간추린소식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알립니다 국토연구원 세종시 이전 안내	

제112호 | 2017. 02 |

이슈&칼럼 대도시에서의 도로 공간의 활용과 정책 방향	김수현·유경상
해외정책동향	
도로시설 성능평가 해외사례	김혜란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 조직특성 및 시사점	강은아
영국의 도로교통 혼잡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최재성
기획시리즈: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 도로③	
도로 위에서는 누가 가장 우선인가?II Nikola Medimorec & Andy Tebay	
해외통신 노르웨이 / 미국 / EU	
간추린소식	
2017년 간선도로망 918km 구축	
용어해설 포용적 성장	

제113호 | 2017. 03 |

이슈&칼럼 선례(先例)를 만드는 도로정책 필요	김호정
해외정책동향	
트럼프 대통령의 도로인프라 정책과 방향	김청모
미국의 도로인프라 유지보수 방식 및 시사점	최재성
호주의 유료도로 운영 현황	김민영
기획시리즈: 길의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도로답사기행①	
국도1호선 경관을 찾아 떠나는 길	손원표
간추린소식	
모든 고속도로 분기점에 '컬러 차로유도선' 설치 계획	
용어해설 종합심사낙찰제	

제114호 | 2017. 04 |

이슈&칼럼 저성장 고령화 시대 도로정책의 방향	강현수
해외정책동향	
미국의 졸음운전 사고 대책과 시사점	이재영
국내외 고속도로 터널의 차로변경 허용사례와 시사점	백승걸
도로사업 드론활용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장진환
기획시리즈: 길의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도로답사기행②	
한계령 길, 지속가능한 Eco Road로 가는 길	손원표
간추린소식	
한국형 포장 설계법으로 도로수명 증가 및 비용 절감	
용어해설 포괄보조금	

제115호 | 2017. 05 |

이슈&칼럼 경남에서 시작하는 한반도發 新실크로드	유성욱
해외정책동향	
일본 수요응답 교통수단 운영특성 및 시사점	박준태
고속도로 상공형 휴게소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의 시사점	이득순
국내외 자율주행 셔틀 현황	김성록
기획시리즈: 길의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도로답사기행 ③	
남해안 지역의 교량경관과 문화, 역사를 찾아서	손원표
간추린소식	
도로분야 4대 연구기관 협의회 개최	
용어해설 스마트톨링	

제116호 | 2017. 06 |

이슈&칼럼 도로정책 3대 과제와 극복방안	정일호
해외정책동향	
4차 산업혁명과 자율·부주의 운전의 예방적 접근	김주영
MaaS(Mobility as a Service)의 개발 현황 및 시사점	임아정
능동운송의 특성과 사회적 편익	임현섭
기획시리즈: 길의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도로답사기행 ④	
길 위의 역사, 옛길 문경새재	손원표
간추린소식	
졸음쉼터 전면개선으로 안전성 제고	
용어해설 사회적 일자리	

제117호 | 2017. 07 |

이슈&칼럼 사회간접자본의 사회적 자본	고용석
특집	
사진으로 보는 도로정책연구센터 10년	
기획시리즈: 길의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도로답사기행 ⑤	
길의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국도48호선	손원표
간추린소식	
상주-영천, 구리-포천,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알립니다 '상상대로(想像大路)' 주제제안 공모	

제118호 | 2017. 08 |

이슈&칼럼 국제교통포럼(ITF)을 통한 도로교통분야 교류협력 강화	김영태
해외정책동향	
UN ESCAP의 도로부문 동향과 주요 현안	조성민
도로분야 국제기구 현황	여인수
APEC 교통실무그룹의 역할	조성균
기획시리즈: 도로의 가치 탐구 ①	
도로의 경제적 가치	조남건
간추린소식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도로·교통정책 관련 과제	
알립니다 '상상대로(想像大路)' 주제제안 공모	

제119호 | 2017. 09 |

이슈&칼럼 도로투자예산의 변화와 적정도로규모

유정복

해외정책동향

4차 산업혁명과 자율·부주의 운전의 예방적 접근 II

김주영

거시적 교통안전 연구 개관 I

이재영

영국 도로부문의 성능평가 방식 및 시사점

최재성

기획시리즈: 도로의 가치 탐구②

도로의 사회적 가치

조남건

간추린소식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39.8조원 편성

용어해설 스톡(stock)과 플로우(flow)

제120호 | 2017. 10 |

이슈&칼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미래의 도로

류승기

해외정책동향

거시적 교통안전 연구 개관 II

이재영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투자 및 회랑 지정

박용신

스마트톨링을 대비한 AET 해외사례 및 시사점

연복모

기획시리즈: 도로의 가치 탐구③

도로의 기술적 가치

조남건

간추린소식

도로분야 4대 연구기관 합동세미나 '함께 잘 사는 길(路)' 개최

알립니다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 아이디어 제안 공모

제121호 | 2017. 11 |

이슈&칼럼 디지털 리터러시 없이 맞는 미래는 불공평하다

조성민

해외정책동향

미국 「Beyond Traffic 2045」 주요내용 및 시사점

손유진

개인이동형 교통수단관련 해외보험제도와 시사점

김태호

미국 도로·교통 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김대진

기획시리즈: 도로의 가치 탐구④

도로의 문화적 가치

조남건

간추린소식

'Big Data'를 활용한 미래도로 구상' 공동세미나 개최

용어해설 5세대(5G) 이동통신

제122호 | 2017. 12 |

이슈&칼럼 공간정의와 국가간선도로망(7×9)의 공공성

고용석

해외정책동향

무신호 횡단보도의 해외 운영 사례 및 시사점

김태현

교통부문 UAV 활용 및 관련 연구 해외 동향

신동윤

노면 대중교통시스템(트램)의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임현선

기획시리즈: 도로의 가치 탐구⑤

도로의 네트워크 가치

조남건

간추린소식

국토연구원, '지역교통체계개선' 컨퍼런스 개최

용어해설 UAV(Unmanned Aerial Vehicle)

6) Space & Environment

Vol. 69 | 2017. 03 |

ISSUES & TRENDS

Conditions and Implications of Korea-China Cooperation in the Overseas Infrastructure Market 이현주

IN-DEPTH LOOK

Strategic Direction for Export of Korea's Smart City Models 이재용

Strategies for Logistics System Development in Cambodia 김종학

Multilateral Cooperative Plan for Building the 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SDI) 강혜경

GLOBAL PARTNERSHIP NEWS

Vol. 70 | 2017. 06 |

ISSUES & TRENDS

Future Prospects of Metropolitan Regions and Response Strategies 이용우, 임지영

Study on the Integrated Urban Policy for Safe Cities 김명수

IN-DEPTH LOOK

Urban Microclimate Management: A Smart Canopy Cover Strategy 안승만

Utiliz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Models for Supporting Regional Policy-making 이영주, 임은선, 차미숙

GLOBAL PARTNERSHIP NEWS

Vol. 71 | 2017. 09 |

ISSUES & TRENDS

Policy Directions of a Planning System for Mega City-Regions 김태환

IN-DEPTH LOOK

The Third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2006-2020): Evaluation and Implication 하수정

Housing and Urban Policies in Response to Residential Movement: With a Focus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전성제

Preliminary Investigations to Introduce Integrated Corridor Management (ICM) for Metropolitan Areas 김광호

GLOBAL PARTNERSHIP NEWS

Vol. 72 | 2017. 12 |

IN-DEPTH LOOK

Analysis of Factors that Influenc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Cultural Resources 이순자

Application of Flow Big Data on Territory Changes after the Opening of the KTX Honam Line 김종학

Urban Regeneration and Gentrification 송지은

Habitat III and Its Implications for Urban Policy in Korea 박세훈

GLOBAL PARTNERSHIP NEWS



CHAPTER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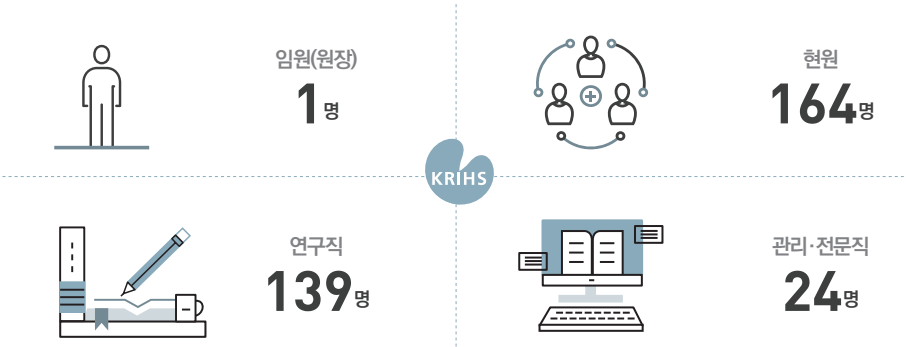
임직원 현황

1. 인원 및 보직자 현황	138
2. 본부 소개	139

1. 인원 및 보직자 현황

인원

2018년 3월 기준 국토연구원의 현원은 164명, 정원 169명으로 연구직이 139명, 비연구직이 24명이다. 연구직은 다양한 전문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보직자 현황

원장	김 동 주
부원장	이 상 준
본부장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차 미 숙
도시연구본부	김 명 수
주택·토지연구본부	강 미 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이 백 진
국토정보연구본부	임 은 선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정 진 규
기획경영본부	김 태 환

2. 본부 소개

1)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는 국토·지역정책, 국토계획평가, 지역경제, 산업입지, 국토환경, 한반도·동북아 등 국토계획과 국토 및 지역발전 관련 장단기 정책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첫째,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 국토·지역정책, 수도권정책 및 계획, 국토환경 관련 연구, 둘째, 국토계획평가, 국토계획체계, 미래국토 및 국토 모니터링 관련 연구, 셋째, 지역경제분석, 공간계량분석, 국토개발 사업 경제성분석 관련 연구, 넷째, 국가 산업입지정책 및 계획, 산업입지 수요분석, 지역산업 입지계획 관련 연구, 다섯째, 통일한반도 및 북한 지역계획, 동북아 공간전략, 접경지역 개발계획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진

차미숙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 |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 지역정책, 지역계획
변필성 | 지역경제연구센터장 | University of Arizona 지리학(도시계획 부전공) 박사 | 지역발전정책, 낙후지역 발전, 지역 커뮤니티 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이순자 | 국토계획평가센터장 | Colorado State University 정치학(환경정책 및 자원관리) 박사 |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국토관광·문화
류승환 | 산업입지연구센터장 | 동국대학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 산업입지, 경제지리
이현주 |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 Renmin University of China 경제학 박사 | 중국경제, 중국지역개발 및 정책, 중국에너지 자원, 동북아지역
김선희 |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공학 박사 | 환경계획, 갈등관리
이원섭 | 선임연구위원 | Michigan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개발제도
권영섭 |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경제개발정책, 산업입지 및 클러스터
장철순 | 선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 산업입지, 지역계획
문정호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계획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국토관광·문화
박태선 | 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수공 및 환경공학 박사 | 댐, 하천, 수자원정책
양진홍 | 연구위원 |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 국토계획,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안흥기 | 연구위원 |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 도시경제학, 공공투자정책
강호제 | 연구위원 | Cleveland State University 도시정책학 박사 | 지역경제개발, 산업클러스터, GIS 공간분석
김진범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Tsukub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계획이론, 커뮤니티플랜, 도시·지역계획
서연미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 | 기업조직 및 입지, 지역산업정책, 도시의 서비스 경제화
이미영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통공학 박사 | 교통계획 및 교통공학, 지역교통물류
하수정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지역경제, 지역계획
장은교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조경학 석사 |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도시설계
민성희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경제분석
남기찬 | 책임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계획, 지역경제분석, 도시경제
윤영모 | 책임연구위원 |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 박사과정 수료 | 수도권정책, 국토계획, 지역계획
정우성 | 책임연구위원 | Arizona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 | 도시 및 지방행정 및 정책, 지방재정, 지방자치, 조직관리, 도시행정 및 정책, 지방재정
강민조 | 책임연구위원 | Florid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GTS 및 원격탐사, 도시환경
홍사흠 | 책임연구위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과학 박사 | 도시 및 지역경제, 지역개발 및 계획, 도시 및 지역경제, 지역개발 및 계획
조성철 | 책임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산업입지, 지역개발 및 계획, 경제지리
강민규 | 연구원 | University of Washington 박사과정 유학 | 도시정책
박정호 | 연구원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박사과정 유학 | 미래국토, 국토계획평가
이윤석 | 연구원 | Rutgers University 박사과정 유학 | 산업입지, 도시계획
김다윗 | 연구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 및 지역계획
차은혜 | 연구원 | 건국대학교 지리학 석사 | 도시네트워크, 공간분석
유현아 | 연구원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교육학 석사 | 지역계획 및 정책

2) 도시연구본부

도시연구본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활력 제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도시생활환경의 효율적 정비 등에 관한 도시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국내외의 각종 연구 및 정책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첫째, 풍요롭고 편리한 정주환경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문화 및 관광, 건강장수도시 연구, 둘째, 활력 있고 경쟁력 높은 국토 및 도시 관리를 위한 도시재생 및 개발 연구, 셋째, 기후변화 및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도시방재 연구, 넷째, ICT와 융·복합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스마트 도시 및 녹색 도시연구 등이며,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정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

김영수 | 도시연구본부장, 도시정책연구센터장 |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 도시개발, 환경계획, 경관계획 및 정책
서민호 | 도시재생연구센터장 | 고려대학교 도시계획 및 설계학 박사 | 도시계획 및 설계, 토지-교통융합계획, 공공공간/생활인프라
이병재 | 도시방재·수자원연구센터장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지리학 박사 | 도시방재, GIS, 기후변화, 공간계획
이재용 |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 Ohio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및 정책, 시공간분석
김종원 | 선임연구위원 | West Virginia University at Morgantown 자연경제학 박사 | 수자원정책, 계량경제분석
이용우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Bonn 지리학 박사 | 국토계획, 국토계획평가, 미래국토
이왕건 | 선임연구위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김창현 | 연구위원 | 경상대학교 경제학 박사 | 농어촌정주, 수자원(방재), 하천
김상조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 석사 | 도시정책, 도시제도
조판기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석사 | 도시정책, 인구저성장, 생활인프라/도시복지
박세훈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행정학(도시계획) 박사 | 도시정책, 인구저성장, 도시문화(다문화)
김성수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 석사 | 도시계획 및 설계, 건강도시, 도시범죄/안전
김은란 | 연구위원 | Cornell University 지역과학 박사 | 창의성에 기반한 도시성장, 경제기반활력, 스마트성장
정윤희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Wisconsin 박사과정 유학 | 공공갈등관리 및 지역경제분석
이범현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설계학 박사 |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디자인/경관
김중은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 | 도시계획 제도, 교외신도시재생, 개발제한구역제도
임상연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 | 지역·광역계획, 지역개발제도
한우석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Utah 토목공학(수자원) 박사 | 방재, 수자원
박정은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도시계획) 박사 |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도시디자인/경관
김동근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도시설계) 박사 | 도시개발, 토지이용계획, 도시제도
박중순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Cambridge 지리학 박사 | 국토환경, 산림, 연안지역관리
이진희 | 책임연구위원 | Florida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도시공학
이승욱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정책
정소양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도시문화
박소영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 도시재생, 도시계획
이상은 | 책임연구위원 |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박사 | 수자원관리, 기후변화 적응, 재난위험도 분석
구형수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계획, 공간분석
김수진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College London 개발계획학 박사 | 도시설계, 도시개발, 도시정책
이성원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스마트 도시, 융합복합적 도시개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
배유진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 도시 및 지역경제, 도시재생, 공공투자
권규상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 | 도시재생, 도시경제, 지역정책
이정찬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 | 도시계획·정책, 지역혁신
조만석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 자원·환경경제
김익희 | 책임연구위원 | San Diego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스마트시티, GIS, 데이터사이언스
박근현 | 연구위원 | Utah State University 박사과정 유학 | 도시설계, 조경, 도시재생
임지영 | 연구위원 |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 박사 | 국토 및 지역정책,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 및 주거
송지은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경제

3) 주택·토지연구본부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정책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등 국가 차원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주거복지, 부동산, 토지 및 건설경제와 관련된 정책개발, 시장분석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첫째,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평가 등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 연구, 둘째, 부동산 시장분석 및 전망, 부동산 정책개발 및 정책효과 분석 등 부동산시장 연구, 셋째, 토지정책의 평가 및 개발, 토지이용 및 개발제도, 토지수급 및 관리 등 토지정책 연구, 넷째, 건설경기 동향 및 정책평가, 건설산업 및 제도 등 건설경제 및 민간투자 연구이다.

연구진

강미나 |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주택정책연구센터장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주거복지, 주택정책, 주택금융
변세일 |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 경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 부동산시장, 지역경제
김승종 | 토지정책연구센터장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 법, 토지정책
김민철 | 건설경제연구센터장 |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 건설산업, 주택정책
김근용 | 선임연구위원 | KAIST 경영공학 박사 | 주택정책, 주택금융 및 세제, 부동산시장 분석
이수욱 | 선임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문학 석사 |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김혜승 | 선임연구위원 | 경희대학교 이학(주거정책) 박사 | 주택정책, 주거복지
천현숙 | 선임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 주택정책, 주거복지
김성일 | 선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 건설산업정책, 건설보증·금융
윤하중 | 연구위원 | 가천대학교 공학 박사 | 민간투자, 건설산업, 교통정책
이승복 | 연구위원 | 단국대학교 경영학(자원환경관리) 박사 | 민간투자, 건설산업, 교통정책
최 수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 토지정책, 부동산금융, 주택정책
조진철 | 연구위원 | Portland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글로벌개발협력, 동북아지역연구, 도시 및 지역계획, 해외 도시개발
박천규 | 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 |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이형찬 | 연구위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 주택정책, 토지(택지)정책
송하승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계획, 토지개발
전성제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박미선 | 책임연구위원 | Cleveland State University 도시정책학 박사 | 주택바우처, 주거복지, 주택정책
이태리 | 책임연구위원 | The University of Sydney 경제학 박사 |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이윤상 | 책임연구위원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주택정책, 주거복지
안승만 | 책임연구위원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 박사 | 녹지계획, 미기후관리정책, GIS
안종욱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 응용경제, 기술정책, 혁신정책
이재춘 | 책임연구위원 | Ohio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주택정책, 주택계획, 도시 및 환경계획, 교통계획
최명식 | 책임연구위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학 박사 | 토지 및 주택정책, 젠트리피케이션
김지혜 | 책임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 부동산금융, 주택정책
조정희 | 연구위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 건설산업, 부동산산업

4)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교통인프라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전국도로망·철도망계획, 광역대도시권종합교통정책, 국가물류정책 및 계획,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정책 개발 등 국가 및 권역, 도시 차원에서의 주요 교통정책 및 계획을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첫째, 국가 및 권역발전 지원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연계교통 기반 중장기 교통투자계획 수립, 공간구조와 연계한 교통축 개발계획 수립, 둘째, 도로·철도 간선교통망계획 수립, 한반도 및 동북아 발전과 관련한 국제물류교통계획 및 녹색물류정책, 셋째,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진

이백진 |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첨단인프라연구센터장 | Hiroshima University 교통공학 박사 | ITS, 교통계획
고용석 | 도로정책연구센터장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도로 및 교통계획, SOC 정책
김중학 | 인프라정책연구센터장 | 한양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 교통서비스 가치 연구, 교통망 구축효과, 교통수요예측
이춘용 | 선임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도시교통계획, 지역계획,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이상건 | 선임연구위원 | Virginia Tech 교통공학 박사 | 스마트시티 설계, 교통시스템 계획
김호정 | 선임연구위원 |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 도로계획, 교통계획
김홍석 | 연구위원 |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 교통계획, 생활교통
오성호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통공학 박사 | ITS, 교통계획
임영태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지역교통, 물류계획
김준기 | 연구위원 |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교통시스템공학 박사 | 교통안전, 통행행태, ITS 등
김혜란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 활동기반 통행행태분석, 인프라 투자
윤서연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지리학(교통) 박사 | 교통수요 시뮬레이션, 행동 모델, 시공간분석
배윤경 | 책임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교통계획, 교통정책, 통행행태
육동형 | 책임연구위원 | Utah State University 교통공학 박사 | Traffic, Transit Assignment, 대중교통요금산정
김광호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통공학 박사 | 지능형교통체계(ITS)계획, 교통운영, 교통안전
최재성 | 책임연구위원 |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교통경제학 박사 | 교통경제
박종일 | 책임연구위원 |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교통계획, ITS
윤태관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Tennessee-Knoxville 토목공학(교통) 박사 | 교통공학, 지속가능 교통, 대중교통
김상록 | 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석사 | 교통계획, 교통수요분석
백정환 | 연구위원 | 중앙대학교 교통공학 석사 | 교통계획, 빅데이터, 기계학습

5) 국토정보연구본부

국토정보연구본부는 국토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생산·활용·분석 등을 위한 방법·정책·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첫째, 국가 공간정보인프라(NSDI) 정책 및 지자체 공간정보 추진전략 연구, 국가공간정보 중장기 계획 수립, 공간정보 산업 및 시장동향 분석, 둘째, 국토 관련 데이터 수집, 생산 및 분석방법 연구, ICT 등 유관기술과의 융복합 활용방법, 공간정보 분석 및 활용 기술, 원격탐사, 공간의사결정 지원 체계(KOPSS), 공간빅데이터, 동적인 시공간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등이 있다.

연구진

임은선 | 국토정보연구본부장,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장 | 건국대학교 지리학 박사 | GIS 및 공간정보분석, 지역연구, 인재양성
이영주 | 국토정보분석센터장 | Keio University 미디어 · 거버넌스학 박사 | 공간정보분석, 공간정보유통, 공간정보 관련 일본사례연구
사공호상 |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 GIS, RS, 공간정보정책, 그린&스마트 시티
정문섭 | 연구위원 | 인하대학교 지리정보공학 박사 | 국토 정보화, GIS정책
김미정 | 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지리학 박사 | 토지관리 및 규제 정보화, 정보화전략계획,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김대중 | 연구위원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지리학 박사 |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공간통계, 도시모델링, 빅데이터 분석
강혜경 | 연구위원 | 부산대학교 지형정보공학 박사 | 공간정보정책, 개방형 공간정보 기술, 공간정보플랫폼, 공간 정보표준,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분석
김동한 | 연구위원 | University College London 계획학 박사 | 도시모형, 공간분석
서기환 | 책임연구위원 | Arizon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공간정보분석, 공간정보인프라정책
황명화 | 책임연구위원 | Arizon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공간분석용 시스템 개발 및 통합, 공간 빅데이터 프로세싱, 공간분석
임시영 | 책임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산업공학 박사 | 공간정보 정책, 스마트시티, 공간정보화, 경제성 분석
성해정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 석사 | 공간 분석
임용호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석사 | 공간정보분석, 공간구조탐색
오창화 | 연구위원 | 고려대학교 지리학 석사 | GIS, 공간분석

6) 글로벌개발협력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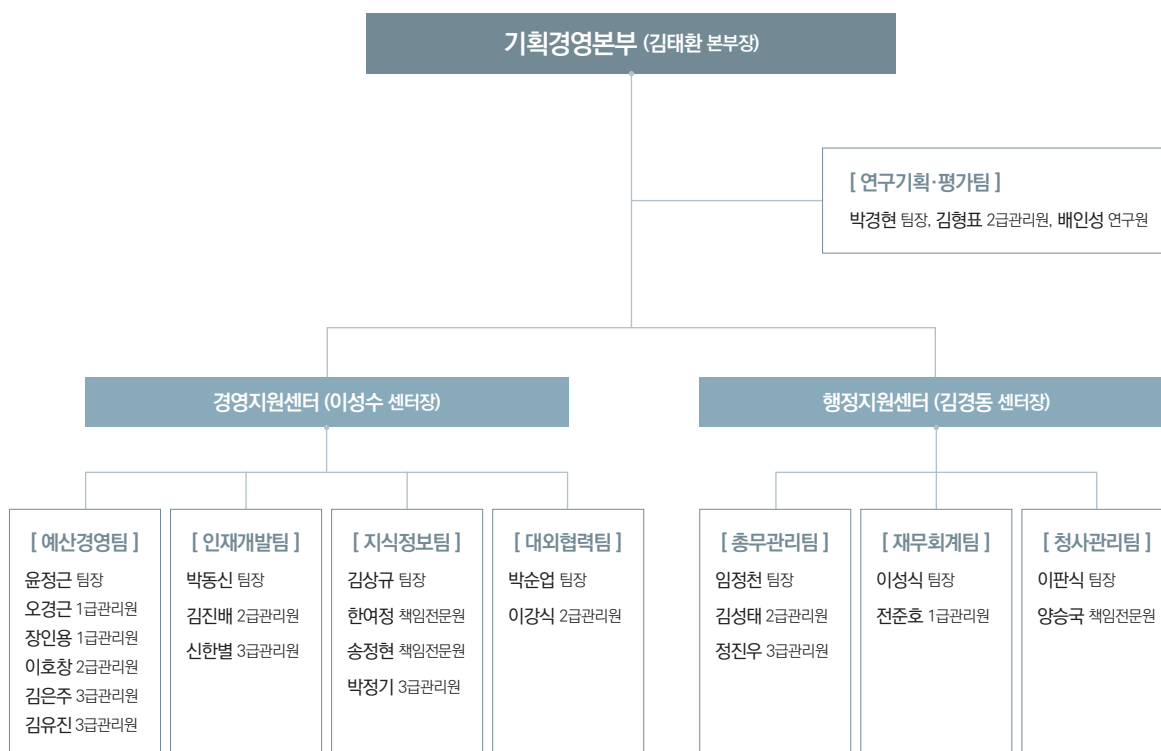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세계경제의 동반발전과 개발도상국 등 저소득 국가의 개발 촉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국토·도시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에 설립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축적한 국토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컨설팅, 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세계의 유수한 연구기관·대학과 학술 및 정책연구 교류를 확대하여 보다 성숙한 국제화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문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계획 및 개발컨설팅은 개발도상국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주택건설, 인프라개발 등 국토개발 관련 정책과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진

정진규 |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 | Portland State University 도시계획학 박사 | 국제개발 협력, 도시·광역교통정책
정일호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Leeds 교통계획학 박사 | 국제개발 협력, SOC 투자정책,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최성수 | 선임자문위원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도시경제학 박사 | 국제개발 협력,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정책
안예현 | 책임연구위원 | Virginia Tech 도시계획학 박사 | 국제개발, 도시인프라 개발, 역량개발
유희연 | 연구위원 | Ohio State University 지리학 석사 | 국제개발 협력, 도시지리
이소영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건축학 석사 | 국제개발 협력, 주택정책

7) 기획경영본부

기획경영본부는 연구원 전체의 연구기획 및 융복합 정책연구 지원, 대외기관과의 교류협력, 청사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경영지원센터에서는 직원의 역량개발 및 인재채용, 출판물 기획·편집 및 홍보, 연구성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지원센터에서는 직원의 복리후생 및 노사관계, 연구원의 자금관리 및 회계를 담당한다.



2017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발행인 김동주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발행일 2018. 4. 15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으로 5 (반곡동)
전 화 044-960-0114(대표)
팩 스 044-211-4760
I S B N 979-11-5898-347-5
eISBN 979-11-5898-348-2

www.krihs.re.kr

© 2018, 국토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련 없습니다.